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2

협동연구 2007-02-2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김두섭 외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인구학회

연구책임자 김두섭(한양대학교 교수)

참여연구진 차승은(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송유진(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천희란(한양대학교 연구교수)

김정석(동국대학교 교수)

발간사

지난 10여 년간 한국사회가 겪은 인구변동은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한 것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력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는 단순한 관심거리가 아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한국사회는 일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구와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걱정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배우자의 유입을 사회의 존속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인구환경의 이 같은 변화는 기본적으로 출산수준의 급속한 저하에 기인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수준이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는 물론, 사회의 각 부문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적은 수의 자녀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을 변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가족가치관, 혼인제도, 세대관계 그리고 여성의 가족 내 지위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초저출산이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그 원인과 전망 및 처방에 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출산 조절과 억제제가 발현되는 가족생활의 실태와 그 사회적 기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을 이해하고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출산력의 분석과 아울러 변화하는 가족생활환경과 자녀양육행태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계획되었다.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의 지연, 출산간격,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자녀양육이 이루어지는 한국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정책의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노동시장의 불안정,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과 사교육비에의 과열한 투자 등이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양육 부담의 경감, 육아지원시설의 확충,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그리고 출산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사회가 나누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현재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수준을 이해하고 가족생활환경의 현실과 딜레마를 진단하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함의도 지닌다.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정된 가용재원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각종 처방책에 분산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각종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보다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각각의 적용대상이 되는 집단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최근의 출산력 저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최근의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계층과 최상위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책적인 함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받았다. 이 기회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심사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2007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

회장 김 두 섭

목 차

Abstract	13
요 약	15
제1장 서 론	59
제1절 연구배경	59
제2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61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64
제2장 선행연구 고찰	67
제1절 결혼의 지연	67
제2절 출산의 연기와 초저출산	72
제3절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80
제4절 성 불평등과 출산력	87
제3장 결혼과 출산행태의 변화	92
제1절 결혼가치관의 변화	92
제2절 초혼연령의 상승	104
제3절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행위의 연계성	114
제4절 첫 출산의 지연과 출산간격의 변화	131
제5절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분석	144

제4장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의 실태	171
제1절 자녀양육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	171
제2절 여성의 삶의 변화와 자녀양육	187
제3절 자녀양육의 현황과 차별성	205
제4절 혼인상태의 변화와 재혼에 관한 태도	223
제5장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향후 정책과제	229
제1절 과거 정책의 개관	229
제2절 새로마지 플랜 2010	230
제3절 외국의 출산장려 및 가족정책	235
제4절 향후 정책과제	257
제6장 결론 및 요약	264
참고문헌	277

표 목 차

〈표 3- 1〉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1998, 2006	95
〈표 3- 2〉 여성의 혼인상태별 연령 분포	98
〈표 3- 3〉 혼인상태에 따른 결혼가치관과 부모가치관	99
〈표 3- 4〉 성별에 따른 이혼에 대한 태도: 1998, 2002, 2006	101
〈표 3- 5〉 결혼시기와 출생코호트에 따른 초혼연령	106
〈표 3- 6〉 결혼시기에 따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108
〈표 3- 7〉 결혼시기에 따른 남편의 교육수준	108
〈표 3- 8〉 결혼 당시 여성의 취업관련 특성	112
〈표 3- 9〉 자녀의 효용가치에 대한 문항들 간의 요인분석 결과	118
〈표 3-1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효용가치	119
〈표 3-11〉 한 자녀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계획 유무에 대한 기술분석	124
〈표 3-12〉 한 자녀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계획 유무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125
〈표 3-13〉 한 자녀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계획과 관련 특성	126
〈표 3-14〉 한 자녀 가족에서 둘째 자녀 출산계획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분석	130
〈표 3-15〉 결혼기간 및 자녀수에 따른 세 분석대상 집단	135
〈표 3-16〉 무자녀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결혼기간	137
〈표 3-17〉 무자녀 여성의 평균 결혼기간 이항 로지스틱분석 결과	138
〈표 3-18〉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첫째 자녀 출산까지 평균 소요기간	139

〈표 3-19〉 최근 3년 이내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까지 평균 소요기간	140
〈표 3-20〉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간격 ..	141
〈표 3-21〉 최근 3년 이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출산간격	142
〈표 3-22〉 출생신고 자료로부터 계산된 주요 인구지표, 1990~2005 ..	146
〈표 3-23〉 두 조사자료에서 추출된 분석 대상 부부의 연령과 출산력 수준	147
〈표 4- 1〉 분석대상자의 주요 변수별 특성	172
〈표 4- 2〉 자녀 출산시점의 취업조절 실태	190
〈표 4- 3〉 각 자녀 출산시의 취업중단 사유	191
〈표 4- 4〉 자녀 출산시점의 취업상태와 인구학적 특성	192
〈표 4- 5〉 출산시기 취업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197
〈표 4- 6〉 출산시기 취업유형별 출산관련 특성	199
〈표 4- 7〉 출산시기 취업유형별 현재 직업관련 특성	201
〈표 4- 8〉 취업 여성의 2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형태 선호도와 현황	208
〈표 4- 9〉 취업 여성의 취업 관련 특성별 분포	211
〈표 4-10〉 2세 이하 첫째 자녀를 실제 맡긴 곳: 취업 특성에 따른 분포	212
〈표 4-11〉 비취업 여성의 2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형태 선호도와 현황	213
〈표 4-12〉 취업 여성의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형태 선호도와 현황	215
〈표 4-13〉 취학 전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취업 관련 특성별 분포 ..	216
〈표 4-14〉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실제 맡긴 곳: 취업 특성에 따른 분포	217

〈표 4-15〉 비취업 여성의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형태 선호도와 현황	218
〈표 4-16〉 기혼여성의 혼인상태 변화 유형	225
〈표 4-17〉 무배우 여성의 재혼계획 및 재혼 시 출산계획	227
〈표 5- 1〉 출산 양육관련 제도/시설의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여부	234
〈표 5- 2〉 대만 출산력의 변화, 1950~2006	240
〈표 5- 3〉 좋은 엄마 되기 10계명, 일본	245
〈표 5- 4〉 싱가포르, 대만과 일본의 가족정책 비교	247
〈표 5- 5〉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및 독일의 가족정책 비교	256

그림목차

[그림 2- 1]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의 인과구조	68
[그림 2- 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의 변화추이, 1970~2006	83
[그림 2- 3] 성 및 연령별 실업률의 변화추세, 1993~2005	86
[그림 2- 4] 여성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1980, 2004	88
[그림 2- 5] 여성의 교육수준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1980, 1999	89
[그림 2- 6] GDI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90
[그림 3- 1] 혼인건수, 이혼건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의 변화추세, 1981~2005	93
[그림 3- 2] 연령별 미혼여성인구의 증가추이, 1975~2005	94
[그림 3- 3] 이혼에 대한 태도의 연령집단별 차이, 2002, 2006	103
[그림 3- 4] 거주지별 평균초혼연령, 1990~2006	105
[그림 3- 5] 부부 교육수준과 결혼시기별 부부의 결혼연령, 2005	110
[그림 3- 6] 부부 교육수준과 결혼시기별 부부의 결혼연령, 2003	110
[그림 3- 7] 결혼당시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평균 초혼연령, 2005	113
[그림 3- 8] 결혼당시 여성의 직업별 평균 초혼연령, 2005	113
[그림 3- 9]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변화, 1997~2005	115
[그림 3-10] 유배우 부인의 이상자녀수 변화추이, 1976~2005	116
[그림 3-11]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첫 자녀 출산간격	132
[그림 3-12] 부인의 직업에 따른 첫 자녀 출산간격	133
[그림 3-13] 남편의 직업에 따른 첫 자녀 출산간격	134
[그림 3-14] 부인의 교육수준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0~2005	149
[그림 3-15] 남편의 교육수준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0~2005	151

[그림 3-16] 부인의 교육수준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0~2005	151
[그림 3-17] 부부의 교육수준별 평균 총출생아수 및 1999년 이후 평균 출생아수, 2005	153
[그림 3-18] 부부의 교육수준별 평균 총출생아수 및 1998년 이후 평균 출생아수, 2003	153
[그림 3-19] 부인의 직업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0	156
[그림 3-20] 부인의 직업별 평균 총출생아수, 2000~2005	156
[그림 3-21] 남편의 직업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7~2005	157
[그림 3-22] 부인의 직업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7~2005	158
[그림 3-23] 부부의 직업별 최근 출생아수, 2003, 2005	159
[그림 3-24] 부인의 종사상 지위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0~2005	161
[그림 3-25] 부부의 종사상 지위별 1998년 이후 총출생아수, 2003	162
[그림 3-26] 부부의 직장유형별 1998년 이후 출생아수, 2003	163
[그림 3-27] 시군구별 평균 총출생아수의 변화, 1990~2005	165
[그림 3-28] 시군구별 조출생율(CBR)의 변화, 2000~2005	167
[그림 3-29] 시군구별 합계출산율(TFR)의 변화, 2000~2005	167
[그림 3-30] 시도별 평균 총출생아수의 비교, 1990~2005	168
[그림 3-31] 부부의 거주지 시도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7~2005	169
[그림 4- 1] 첫째 자녀의 연령 및 소득집단별 보육비 지출현황	174
[그림 4- 2] 첫째 자녀의 연령 및 소득집단별 사교육비 지출현황	175
[그림 4- 3] 첫째 자녀의 연령 및 자녀수에 따른 총자녀양육비	176
[그림 4- 4] 첫째 자녀의 연령 및 자녀수에 따른 기혼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179
[그림 4- 5] 첫째 자녀의 연령 및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181
[그림 4- 6] 첫째 자녀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기혼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182
[그림 4- 7] 첫째 자녀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기혼여성의 주말 평균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184
[그림 4- 8] 첫째 자녀의 연령 및 부인의 취업 여부에 따른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	185
[그림 4- 9] 부인의 출산시기 취업유형의 분포	193
[그림 4-10] 부인의 출산시기 취업유형의 분포	194
[그림 4-11]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중과 주말의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220
[그림 4-12] 자녀의 연령에 따른 주중과 주말의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222
[그림 4-13] 자녀의 수에 따른 주중과 주말의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223
[그림 5- 1] 새로마지 플랜의 자녀양육부분 정책 개관	231
[그림 5- 2] 각국의 모성휴가제도 실행실태, 2006	260

Abstract

Marriage, Child-Rearing and Family Life in a Low Fertility Society

Korea has experienced a drastic decrease in fertility in recent years. To better understand the causal mechanisms of fertility decline, many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economic aspects related to childbirth and child-rearing. However, socio-cultural factors, such as values and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fertility, perception of costs and benefits of having a child, and women's struggles to balance work and child-care, are also of great importance in explaining recent fertility declin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ocio-cultural factors related to recent decline in fertility.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recent changes in attitudes toward marriage, parenthood, and family. Attention is also focused on analyzing everyday family life and child-rearing behaviors. In an effort to provide a comparative perspective, policy responses to the low level of fertility in Singapore, Japan, Taiwan, and European countries are reviewed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attitudes and behaviors related to marriage, fertility and child-rearing, this study utilizes micro-data from the Population Censuses and Vital Statistics of Korea for the period 1990-2005. Micro-data from the 2003 National Survey of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the 2005 National Survey of Marriage and Fertilit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re also analyzed in this study. Other documents such as published and unpublished reports from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re used to analyze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recent changes in fertility.

Results of analyses reveal that women's attitudes toward marriage, timing of marriage and birth as well as total fertility rate are different according to socioeconomic status. Those with the lowest and the highest socioeconomic status show the most drastic decline in fertility and have been more likely to delay marriage and childbirth. A new pattern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fertility is found among the recent marital cohort who married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The level of recent fertility turns out to be highest among those with upper-middle socioeconomic status, followed by those with the highest socioeconomic status and those with the lowest status.

Results also show that recent fertility decline is associated with changing attitudes toward parenthood, the commitment of time and money for child-rearing, and the difficulties of women in balancing work and the maternal role. Recent marital cohorts tend to perceive the high economic and psychological costs of having a child more sensitively. Mainly due to low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father's share of child-care activities, most women seem to quit their jobs when they give birth. As daycare centers for children aged between 0 and 2 are not widely available, working mothers tend to rely on their grandparents and relatives. These circumstances seem to lead young couples to delay their marriage and having a child, and to have less children.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pro-natal policy maker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recent changes in family values as well as the economic and psychological costs and benefits of having a child.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policy interventions, we need more detailed and updated information on differential fertility. It is recommended that more comprehensive studies focused on family strategy and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parenthood need to be conducted.

요 약

제1장 서 론

□ 연구배경

- 한국의 저출산 수준은 급속한 저하를 거듭하여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체수준보다 낮은 단계에 이르렀고,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음.
- 출산수준의 급속한 저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사회경제적 과급효과가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수준의 지속은 혼인제도, 가족제도와 여성지위의 변화와 아울러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고,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 정책적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과 전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생활과 자녀양육의 문제가 저출산의 원인 및 극복방안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음.
-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분석 뿐 아니라 미시수준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가족생활환경과 자녀양육행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됨.

□ 연구 목적과 필요성

- 결혼과 출산행태의 최근 변화와 자녀양육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의 인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가족 내에서의 양육현황, 여성의 취업

과 가정생활의 양립 등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저출산의 인과구조와 주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함.

- 거시적인 수준의 연구는 축적되어 있으나 대규모 조사자료에 근거한 가족단위의 미시적인 분석과 논의가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의 일련의 생애경험이 가족과의 연계성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분석을 통하여 정책 대상 집단을 구체화하고자 함.
 - 백화점식 나열의 정책제언보다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차별출산력 분석을 통하여 여러 사회집단 간 출산수준의 격차를 확인하고, 아울러 최근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경험한 집단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산력변천의 인과구조를 파악하고자 함.
- 싱가포르, 대만, 일본과 서구 유럽 국가들의 저출산 및 가족 관련 대응정책을 고찰하여 한국사회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연구 내용과 방법

- 기존의 문헌 및 실증연구 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인구센서스 및 동태통계자료의 분석.
- 저출산과 관련한 외국의 정책적 대응과 가족문화에 대한 검토 및 한국에의 시사점 논의.

제2장 선행연구 고찰

1. 결혼의 지연

□ 초혼연령 상승에 대한 거시적 논의

- 거시적인 수준에서 초혼연령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노동시장 불안정,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가치관 변화가 대표적임.
 -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는 결혼생활의 비용편익의 변화(보상보다 비용이 증가), 비혼이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생활구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됨.
 -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는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결혼에 대한 선택적인 가치관을 증가시킴.
 - 결혼에 대한 선택적인 가치관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초혼연령 상승에 대한 미시적 논의

- 초혼연령 상승에 대한 미시적인 논의는 구체적인 조사자료의 분석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
 -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별로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었음. 가령 남성은 직장이라는 순서규범이 결혼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여성은 경제활동상태에 관계없이 연령규범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
 - 여성에게 있어서 연령의 중요성과 남성에게 있어서 경제적 자원 확보의 중요성은 2006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대한 조사자료의 분석에서도 확인되었음.
 - 결혼코호트와 성별에 따라 교육과 고용 지위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과 취업상태가 결혼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였음.

- 반면 여성의 경우는 IMF 경제위기 이전 코호트는 교육수준이 결혼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였고 IMF 경제위기 이후 코호트에서는 취업상태가 결혼시기를 늦추는 역할을 하였음.
- 즉 경제위기 이후 남성의 생계 부양능력이 약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결혼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위의 안정성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됨.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와 자원을 통한 지위획득의 동기는 증가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는 약화된 것으로 파악됨.

2. 출산의 연기와 초저출산

□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 자녀에 대한 가치 변화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녀의 효용가치에 비하여 비용이 큰 것으로 간주됨. 특히 최근 자녀양육과 자녀교육 비용의 급증은 저출산을 초래한 가장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음.
 -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 비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가 정교해짐.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사회에서는 특히 자녀양육의 부담이 출산율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됨.
-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부과되는 현실에서 결혼 뿐 아니라 자녀 출산까지도 선택의 문제로 등장하였음.
- 다양한 가족형태의 등장(예: 이혼, 별거, 동거 등) 역시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됨.

□ 출산 연기와 출산간격

- 최근의 출산율 저하에 있어 출산시기의 지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결혼 후 자녀 없이 지내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함. 그러나 첫 자녀를 출산하는 기간이 과거에 비하여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고학력이거나 취업을 한 여성들의 경우는 둘째 자녀 출산으로의 이행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지적한 연구도 있음. 이는 둘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 터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둘째 자녀를 계획하는 여성들은 출산기간을 집중시켜서 단산기간을 앞당기며,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기간이 길면 둘째 자녀의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 연구도 있음.
- IMF 경제위기 전후 결혼코호트의 출산시기가 다름을 지적한 연구도 있음.
 - IMF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은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하여 첫째 자녀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짐.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짧은 간격 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관찰됨.
 - 즉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한 경우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유형과 짧은 기간에 원하는 수의 아이를 빨리 낳으려는 유형으로 이분화된다고 주장함.

3.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 소득수준과 출산력

- Malthus 이후 많은 학자들이 경제적 지위 또는 소득수준과 출산력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들을 개발하였고, 경험적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음.

-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소득과 출산력의 관계가 정(正)적이라는 주장과 부(負)적이라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음.
- 서구사회의 출산력을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발전단계에 따라 소득수준과 출산력의 관계는 변화한다고 지적되었음. 제 1단계에서는 소득과 출산력은 부적인 관계이지만 제2단계에 들어서면 U자 형태로 발전하고, 제 3단계에서는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이 없어지거나 정적인 관계로 변화한다는 것임.
-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소득수준과 출산력 간에 3차 곡선의 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음. 즉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면 출산력이 상승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출산력은 오히려 감소함. 그러나 최상층 소득집단에서는 소득증가와 함께 다시 출산력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남.
-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형태가 일련의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진화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음.

□ 교육수준 및 직업과 출산력

- 부인의 교육수준은 출산수준과 가장 선명한 부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출산력 수준이 낮아진 이후에는 고학력 집단의 출산력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지적된 바 있음.
- 부인의 교육수준은 출산력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도 소득, 부인의 경제활동참가 등의 다른 경제적 변수들과 상호작용하며 출산력에 영향을 미침. 또한 결혼연령, 가임력, 영아 및 유아사망, 피임 등의 매개변수에 작용하여 출산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직업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농림수산업 종사자

의 출산수준이 가장 높고 전문직과 행정직 종사자의 출산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 양극단의 사이에서 비숙련 육체노동자에서 숙련 사무직 종사자에 가까울수록 출산력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그러나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전문기술직 종사자의 출산수준이 차상위 집단보다 높은 경향이 발견되기도 하였음.
- 여성의 직업과 출산력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동안 가용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여성의 경제활동은 구체적인 직종은 물론 산업 및 노동시장구조에 따라서도 그 성격이 달라지고,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나 정도 또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됨.

4. 성 불평등과 출산력

□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력

-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부적인 관계라고 지적되어 왔음.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라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자녀출산 및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켜서 출산율 감소를 야기한다는 것임.
-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여성의 취업률이나 교육수준이 반드시 출산율과 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율이 직접적인 부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 직종, 부모됨에 대한 인식과 같은 중간변수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함.
 - OECD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취업률과 출산수준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던 초기에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안정적인 시기에 도달하면 출산율이 오히려 증가하

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 환경과 제도적 뒷받침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가족 내 성 불평등과 저출산

- 가족 내에서의 자녀양육과 가사의 분담 역시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밝혀졌음.
- 국가별 GDI(성 평등 관련 발전지수)와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GDI가 낮은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GDI가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다가 점차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음.
- 한국은 현재 GDI가 중간수준이고 합계출산율은 가장 낮은 단계에 있음.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과 가족 내에서의 자녀양육과 가사의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성 평등이 구현된다면 한국의 출산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3장 결혼과 출산행위의 변화

1. 결혼가치관의 변화

□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 인구 천 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1980년대까지 증가하다가 199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특히 경제위기를 겪었던 1997년을 계기로 조혼인율과 혼인 건수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됨.
- 반면 조이혼율과 이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3년 정점에 도달하였음.

- 만혼현상으로 인하여 20대 중반 이후의 미혼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다양해지고 있음.
 -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가 결혼 지연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1998년 33.6%에서 2000년 25.6%, 2006년 25.7%로 현저하게 감소하였음.
 - ‘결혼은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와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소수이긴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예를 들면, 1998년에는 1.3%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1.9%, 2006년에는 2.2%로 증가하였음.
 -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율이 2000년 26.2%에 비하여 2006년에는 10.8%로 현저히 낮아졌음.
- 혼인상태에 따른 결혼가치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활용하여 동일한 연령대 여성들의 혼인상태에 따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보았음.
 -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짐.
 - 동일한 연령대의 미혼과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높음. 반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응답은

35~39세를 제외한 기타 연령대에서 기혼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음.

- 위의 결과는 기혼여성들에게 결혼에 대한 당위적인 가치관과 부정적인 가치관이 공존되는 것을 나타냄.
-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남. 이러한 응답은 미혼여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연령이 증가하여도 미혼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가치관은 약하지만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혼외출산에 대한 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부정적 임.

□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

- 통계청의 1998년 이후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동안의 조이혼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임.
 -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2002년도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감소하고 허용적인 태도에서 약간의 증가 경향이 발견되었음.
 - 2006년의 이혼태도 조사결과는 1998년과 유사하게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약간 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젊은 연령층에서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나타냄.
 - 여성은 남성보다 1998년, 2002년 그리고 2006년 자료에서 모두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젊은 연령층의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비율은 2002년과 2006년에 거의 변화가 없음. 다만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2002보다 2006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음.

2. 초혼연령의 상승

□ 성별 평균 초혼연령의 상승

- 성별에 관계없이 초혼연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1997년 이후 증가추세가 급격해짐.
 - 지난 1990년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4.8세였으나 1997년에는 25.7세, 2006년에는 27.8세로 상승하였음.
 - 남성의 초혼연령 역시 1990년 27.8세에서 1997년 28.6세, 2006년에 30.9세로 증가하였음.
- 초혼연령의 상승과 첫 출산연령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20대 여성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30대 여성의 출산율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개인적 특성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의 비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결혼시기를 중심으로 평균 초혼연령을 비교하였음. IMF 경제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3.6세이며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6.2세임.
- 결혼시기에 따라(경제위기 전후) 이분한 집단 내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을 살펴보았음.
 -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이 더 높음. 이는 출생코호트와도 연관이 있음.
 - 경제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은 교육수준에 따라 평균 초혼연령이 꾸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즉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증가가 교육기간의 증대로 이어져서 결혼연령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낸 것

으로 여겨짐.

- 반면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남녀 모두 저학력의 평균 초혼연령이 현격히 높게 나타남. 교육수준의 보편적인 향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저학력은 남녀 모두에게 결혼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짐. 이러한 효과는 특히 경제위기 이후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한 경우 남녀 모두 고학력에서도 평균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이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짐. 이는 최근 나타나는 고학력 여성의 만혼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짐.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의 보장이 약화됨에 따라 고학력 여성의 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결혼 당시 여성의 취업관련 특성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을 살펴보았음.
 - 결혼시기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평균 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평균 초혼연령이 더 상승하는 것이 관찰됨.
 - 농어업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도 경제위기 이후 결혼한 집단에서 평균 초혼연령이 현저히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됨.
 - 즉 직업위세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의 평균 초혼연령이 경제위기 이후에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됨.

3.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행위의 연계성

□ 출산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각 연도 출산력조사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배우 부인 가운데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1997년에 73.4%였던 것이 2005년에는 23.4%로 감소하였음. ‘자녀가 없어

도 된다'는 응답은 1997년에 9.4%에 머물던 것이 2005년 조사에서는 35.0%로 대폭 증가함.

- 2005년 조사에서 이상자녀수는 2명의 자녀를 선호하는 응답이 5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3명(25%), 1명(9.0%)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이는 2003년의 조사결과보다 이상자녀수가 약간 더 증가한 수준임.
 - 이상자녀수의 상대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자녀양육의 비용과 부담이 동시에 크게 증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출산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분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자녀효용가치에 대한 7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당위적·도구적 가치(3문항), 정서적 가치(3문항) 그리고 부모의 자유제약(1문항)의 3차원으로 구분하였음.
- 당위적 가치에 대한 응답자 평균은 척도의 중간값(9점)에 근사한 9.35임. 정서적 가치에 대한 응답자 평균은 10.31 수준임. 단일문항인 부모자유제약은 2.5이었음.
 - 20대와 30대 기혼여성은 40대 보다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데 동의하는 수준이 더 높음.
 -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학력이 높은 집단보다 자녀에 대한 당위적·도구적 가치를 더 높게 지각함. 부모의 자유제약에 대해서는 더 낮게 지각함.
 - 소득이 높은 집단은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당위적·도구적 가치는 낮게, 정서적 가치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 소득이 높은 집단은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강함.

□ 추가자녀 출산계획

-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초혼 이후의 첫째 자녀 출산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남.
- 첫째 자녀 출산과는 다르게 둘째 자녀 출산은 상이한 사회경제적 원인과 가족차원의 전략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임.
-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족을 둘러싼 재정문제, 양육문제 해결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설명함.
 -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부담, 부부간의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차이, 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도 추가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중에서 첫째 자녀가 7세 이하이고 자녀를 1명 둔 여성 544명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함.
 - 종속변수: 둘째 자녀 출산계획 여부(있음/ 없음)
 - 독립변수: 자녀에 대한 가치(당위적·도구적 가치, 정서적 가치, 부모자유제약), 첫째 자녀의 연령, 부인 및 남편의 자녀양육 및 가사일 소요시간, 영유아보육비 및 사교육비, 자녀돌봄의 공평분담 정도
 - 통제변수: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취업 여부
-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독립변수만을 투입하였을 때 결과는
 -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가 부모자유를 제약한다는 생각을 적게 할수록, 둘째 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은 높아짐.
 - 첫째 자녀의 연령이 만 3세 이상인 경우는 첫째 자녀가 0-2세보다 둘째 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이 낮아짐.
 -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비나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가정은 추가

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이 낮음.

- 연령과 소득수준, 교육수준, 취업여부가 모형에 포함된 이후에는 첫째 자녀의 연령 변수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기혼여성의 연령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음. 기혼여성의 연령이 20대에 비해 30대와 40대의 경우에 둘째 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이 낮음.
 - 여성의 연령 상승이 첫째 자녀와의 터울에 대한 인식보다도 더 우세하게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터울에 대한 인식에서의 유의미도가 사라진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자녀에 대한 태도나 자녀양육 관련변수들의 계수값의 크기는 더 분명해 짐.
- 통제변수 가운데 기혼여성의 연령과 함께 소득수준의 영향도 관찰됨. 소득과 출산계획은 비선형적인 관련성을 나타냄. 소득은 하위계층에 비해 중간계층이 둘째 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음.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 간에는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4. 첫 출산의 지연과 출산간격의 변화

□ 결혼시기에 따른 첫째 자녀 출산까지의 소요기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첫째 자녀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을 분석함.
 - IMF 경제위기 이전에 결혼한 집단과 이후에 결혼한 집단의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약 16개월로 거의 차이 없음.
 - 교육수준에 따른 첫째 자녀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한 경우 경제위기 이전에 결혼한 경우보다 저학력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기간은 길어지고, 고학력 여성의 출산기간은 짧아지는 경향을 보임.
 - 이를 초혼연령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저학력 여성들은 경제위기 이

후 초혼연령이 상승하였으며 결혼 후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데 소요한 기간도 길어진 것으로 보임. 즉 경제적인 여건이 결혼과 출산 시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부인과 그 배우자들의 직업에 따른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는 직업위세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출산기간이 길었음. 반면 1997년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상위 직업 종사자의 출산기간은 짧아지고 사무직, 서비스직의 출산기간이 길어졌음. 이러한 현상은 특히 여성의 직업에서 두드러지게 관찰되었음.
- 경제위기 이후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비중이 높아진 현실을 감안할 때, 출산휴가나 기타 지원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첫째 출산을 미루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됨.

□ 출산시기와 간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출산시기와 간격을 분석함.
- 결혼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없는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이 결혼 후 자녀가 없이 지내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 결혼 후 자녀가 없이 지내는 평균 지속기간은 약 18개월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여성에 비하여 30대 이상의 여성이 자녀가 없이 지내는 평균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남. 이러한 경향은 기술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였음.
 - 취업상태에 따라 살펴보면,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취업 여성이, 취업 여성 중에서도 상용직에 비하여 임시 및 일용직 여성들이 자녀가 없이 지내는 평균 기간이 길게 나타남. 이러한 경향 역시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 저학력 여성이 고학력 여성에 비하여 무자녀로 지내는 기간이 평균 18개월보다 짧을 확률이 낮음.
- 즉 저학력, 임시 및 일용직 여성들은 고학력이나 비취업에 비하여 자녀가 없이 지내는 기간이 길게 나타남.
- 최근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첫째 자녀와 둘째자녀의 터울을 계산한 결과, 평균 40.5개월로 나타남.
 -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이 30대 이상에 비하여 터울이 40.5개월보다 짧을 확률이 높음.
 - 여성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는데, 임시 및 일용직 여성들이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터울이 짧을 확률이 높음.
 - 이 분석은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도에 출산을 포기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음. 따라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 및 일용직 여성들은 결혼 후 첫째 자녀를 낳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둘째 자녀를 낳는 경우에는 터울을 최대한 짧게 하여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이는 출산휴가 및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임시 일용직의 현실과 연관되는 것으로 추정됨.

5.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분석

□ 분석자료 및 기본 개괄

-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1990년, 2000년,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와 1990년, 1997년, 2000년, 2005년 동태통계자료,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였음.

- 동태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됨. 가령 2005년의 출생아수는 1990년과 2000년의 출생아수의 66.5%, 68.8%에 불과함. 합계출산율 역시 1990년의 1.59에서 2000년 1.47, 2005년에는 1.08로 저하되었음.

□ 교육과 출생아수

-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출생아수를 비교분석하였음.
 -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총출생아수는 작아지지만 대학원을 졸업한 고학력 부부의 경우에는 총출생아수가 약간 커지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경향은 인구센서스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출산력조사 자료의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1998년 및 1999년 이후의 출생아수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 이르러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와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젊은이들의 결혼시기와 출산수준에 미친 파급효과가 저학력 집단에서 더 컸던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부부들도 바로 아래의 학력집단에 비해서 보다 민감하게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결과적으로 최근 출산행위를 가장 민감하게 변화시킨 집단은 교육수준이 낮은 부부들과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부부들인 것으로 관찰됨.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부부들은 자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한 것으로 해석됨. 반면 교육수준이 높은 부부들은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에 적은 수의 자녀에게 최대한의 투자를 하기 위하여 출산행위를 조절한 것으로 판단됨.

□ 직업과 출생아수

- 부인의 직업에 따른 총출생아수를 비교하였음.
 - 직업과 총출생아수 간의 관계는 J자형으로 나타남. 즉 농어업 종사자의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고 사무직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직업위세와 출생아수는 부적의 관계를 나타냄. 반면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전문기술직과 행정관리직 종사자의 출생아수는 차상위 집단인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직,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그러나 1998년 및 1999년 이후의 출생아수는 위와 같은 기존의 관계와 대비되는 양상이 관찰됨. 즉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집단의 출생아수가 차상위 집단에 비하여 낮고, 직업위세가 낮아질수록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 직업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이러한 변화양상은 부부의 교육수준과 최근 출생아수 관계의 형태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임.

□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과 출생아수

- 부인의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과 출생아수를 비교하였음.
 - 1997년 이전의 출생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무급가족 종사자의 출산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고용주 순이며 임금근로자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 반면 1998년 및 이후 출생아의 경우에는 부인의 종사상 지위와 출생아수의 관계가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냄. 즉 임금근로자의 최근 출산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순임.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들이 자녀수를 줄이려는 동기가 보다 절실해져 출산수준이 두드러지게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직장유형에 따른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부인의 직업이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근무인 경우 출생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리고 직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며, 이러한 경향성은 경제 위기 이후에 두드러지게 관찰됨. 즉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이 출산수준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지와 출생아수

- 1990년, 2000년,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와 1997년, 2000년, 2004년, 2005년 동태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지에 따른 출생아수의 변화를 살펴보았음.
 - 전라남도 남서해안과 강원도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군구에서 높은 출생아수가 관찰됨. 반면 수도권과 경상남도 일부 지역의 평균 출생아수는 낮게 나타남.
 - 전반적인 출산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지역별 편차는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남.
 - 지역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대도시 중 서울, 부산,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낮고 광주, 울산, 대전은 높음.
 - 강원도의 화천, 인제, 양구와 전라남도의 광양, 화순, 영암,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의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남. 반면 경상북도의 청도, 경상남도의 남해와 고성은 합계출산율이 낮음.
 - 시기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에 출산수준이 높았던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출산수준이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지난 1990년에 이미 낮은 출산수준을 보인 대도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변화를 보여줌.
 - 동태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부산, 대구, 인천과 경기도는 낮은 출산수준을 보임. 경상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수준을 보인 반면 전라도, 제주도의 출생아수는 높게 나타남.
- 지역사회 수준에서 생태 및 사회경제적 환경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음.

- 지역사회의 교육수준, 지방세 수준,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의료환경이 좋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는 교육수준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동일하여도 해안과 농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들은 대도시보다 합계출산율이 높음.

제4장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의 실태

1. 자녀양육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

- 자녀양육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고,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부족한 실정임.

□ 분석대상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로부터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 3,273명에 관한 자료를 추출함. 자녀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족생활실태를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함.

□ 자녀 연령별 보육 및 교육비 지출 비교

- 보육비 수준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첫째 자녀가 만 3세에서 만 7세에 걸쳐있는 시기에 보육비 지출이 집중되어 있음. 보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시기는 첫째 자녀가 5~6세임.

- 소득수준이 상위 20%는 첫째 자녀가 5~6세 시기에 자녀보육비를 월 평균 50만원 지출함.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첫째 자녀 출산과 함께 월 평균 25만원 내외의 보육비 추가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상위 소득계층에서 조기교육과 관련한 보육비를 이미 0세 연령부터 지출하고 있음을 시사함.
- 소득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은 월 평균 20만원 내외로 자녀보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에서의 주요 경향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략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시기는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5~16세로 고등학교 진학시기로 추정됨.
-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는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됨. 그러나 월평균 가계소득이 123.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소득수준이 하위 20% 수준인 가족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평균 29만원)는 소득의 30%로 나타남.
- 자녀수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출액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시기는 대략 첫째 자녀가 만 2세에서 만 5세로 나타남. 자녀 연령이 높아지면, 자녀가 1명, 2명 그리고 3명 이상인 가족이 지출하게 되는 총자녀 양육비의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음.
 - 3명의 자녀를 둔 자녀에 대한 세제지원, 보육료지원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의 영유아 시기에 집중될 필요성이 있음.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자녀돌봄과 가사 분담 및 투여시간
 - 전체적으로 기혼여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관련 시간투여는 첫째 자녀가 아직 어린 가족형성기에 집중되어 있고,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투여량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하루 평균 200~250분은 지속적으로 자녀돌보는 시간으로 투여되고 있음. 자녀가 18세가 되더라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양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됨.
- 자녀를 3명 둔 기혼여성이 가사와 자녀 돌보는 데 투여하는 시간은 그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둔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음.
 - 가족생활주기로 보게 되면, 첫째 자녀가 아직 미취학 아동이면서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동생이 있을 경우에 기혼여성에게 부과되는 시간적인 비용이 가장 많음. 기혼여성이 가사와 자녀돌보는 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800~1,000분 즉, 13~15시간으로 집계되었음.
-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양육과 가사 투여시간을 살펴보면, 평일 하루 동안 취업여성이 투여하는 시간은 전업주부에 비하여 평균 250분 정도가 더 짧음.
 - 실제 취업여성이 하루 8시간을 직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취업여성은 하루 중에서 평균 200분 가까이를 가사와 자녀 돌보는 데 사용하고 있었고, 반면에 전업주부는 435분을 투여함.
- 기존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가사와 자녀 돌보는 시간은 차이가 난다고 함.
- 이 연구에서 고졸 이하 학력자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여성 간에는 평일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에서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음. 오히려 서구 연구들의 지적과는 반대로 대학원 졸업 이상의 여성이 다른 교육집단에 비해 가사와 자녀돌보는 시간의 투여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 여성이 대부분 직장을 다닐 확률이 높다는 점과 연관이 있어 보임.
- 주말평균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497분, 약 8시간 정도로 나타남.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의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대략 4시간 정도 수준에서 부부가 여가시간을 가짐.

- 취업여성의 가정에서는 주말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평균 468분, 전업주부의 가정에서는 521분으로 여성이 취업한 경우 남편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은 더 짧음.
- 취업여성의 경우 평일동안에 밀린 가사와 자녀돌보는 일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편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2. 여성의 삶의 변화와 자녀양육

- 여성의 취업경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직업역할과 가족 역할 특히 출산과 자녀양육을 어떻게 병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 여성의 취업과 출산에 관한 최근 연구들은 여성에게 있어서 노동권에 못지않게 부모권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적임. 여성의 취업과 자녀수, 출산계획, 자녀 태울 등 출산관련 특성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발견됨.
 - 관련 연구들은 일과 가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취하기 위한 선택으로 혹은 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적응방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여성 개인의 수준에서 여성의 일과 출산경험이 어떻게 조절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게 됨. 일과 가족의 양립을 시도하는 여성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그들은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함.

□ 분석방법

-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까지의 관찰기간 동안 여성들의 취업조절형

태와 특히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주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음. 각 시기마다 취업을 지속하는 사람들과 지속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였음.

- 첫째 자녀 출산, 둘째 자녀 출산, 셋째 자녀 출산, 그리고 2005년의 조사시점까지 네 시점의 취업 여부를 가지고 여성들의 취업경력을 유형화하였음. 각 유형에 속하는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자녀 출산 및 가족에 관련되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음.
- 각 출산시점의 취업 조절실태와 취업중단의 주요 이유
 - 첫째 자녀 출산을 마친 기혼여성 중에서 첫째 자녀 출산 전후의 취업 상태를 살펴보면, 이미 직업을 그만두었거나, 자녀출산 이후 중단하여 비취업상태에 있는 사례가 전체의 80%가량 됨.
 - 둘째 자녀를 출산한 기혼여성의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직장이 있다가 일을 그만두는(취업중단) 여성의 비율이 3.8%로 첫째 자녀 때 중단한 비율보다 약 16%p 낮았음.
 - 둘째 자녀 출산 때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휴직 및 근무조건을 조절하거나 그대로 지속하는 경우의 비율이 첫째 자녀 출산 때 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셋째 자녀 출산전후시기에 취업여성의 수는 그 크기에서 다른 출산시기에 비해 매우 소수임. 셋째 자녀를 출산할 때는 직장을 가지고 있는 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따라서 직장을 중단한 경우의 비율도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근무조건을 조절하거나 지속한 경우도 그 규모가 매우 작음.
 - 취업중단 사유의 1, 2 위는 각각 ‘직접 키우고 싶다’, ‘아이 맡길 곳이 없다’로 나타남.
 - 자녀양육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모성’을 대신할 양육시설이나 양육자에 대한 신뢰부족이 출

산을 앞둔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주요 사유라는 점을 알 수 있음.

□ 여성의 출산시기 취업유형

- 각 출산시기별 취업상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혼여성의 취업 유형을 구성하였음.
- 각 자녀 출산을 전후한 시기에 직업이 없었고, 관찰시점에서도 직업이 없었던 유형을 ‘지속적 비취업’으로 명명함.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여성은 전체의 45%로 다른 유형에 비해 그 비율이 가장 높음.
- ‘재취업형’은 전체 여성의 31.6%로 나타남. 빠른 재취업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째 자녀만을 가진 여성이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들은 자녀를 출산할 때 한시적으로 비취업 상태에 있다가 재취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분석대상의 7.5%가 이러한 빠른 재취업형태에 포함됨.
- ‘M자형’ 여성 취업곡선의 사례들로서 자녀출산기를 모두 지나고 취업한 경우가 전체의 24.1%를 차지함.
- 각 출산시기에 취업상태에 있었고, 현재에도 취업하였다고 응답한 사례들은 ‘연속적 취업형’으로 구분하였고, 이들은 전체의 11.3%에 해당함.
- 자녀출산 전후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직까지 비취업 상태로 남아 있는 ‘중단형’의 사례는 모두 138명으로 이들은 분석대상 기혼여성의 4%를 차지함. 자녀출산 및 양육을 계기로 직업역할을 그만둔 경우로 이해할 수 있음. 이들 중에서 자녀를 1명 둔 부인은 29명으로 집계되었음.
- 마지막 두 유형은 조사시점에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들로 이들은 총 274명임. 이중에서 조사시점에 취업을 한 여성은 약 56%임. 이들이 전체 분석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사례에서 비취업과 취업의 사례가 각각 3.5%, 4.5% 수준임.

□ 연령에 따른 여성 취업유형의 차이

- 모든 연령에서 지속적 비취업형의 비중이 큼. 20대의 49.8%, 30대의

45.9% 그리고 40대의 38.7%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남.

- 20대에서 지속적 비취업형의 비중(49.8%)은 30대나 40대보다 약 6~10%p 더 높음. 어린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이 직업대신 자녀출산과 양육에 몰입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보임. 아직 20대에서 지속적 비취업형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형태는 자녀 없이 취업한 경우(16.8%)임.
 - 30대에서는 지속적 비취업형이 49.5%, M자형이 24%, 그리고 연속취업형이 11.8%, 빠른 재취업형이 8.0% 순으로 나타남.
 - 40대에서는 지속적 비취업형의 비중이 38.7%이며, M자형 취업은 36.0%로 전업주부와 재취업한 여성의 비중이 동일함.
 - 20대는 취업을 하였거나, 혹은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하는 두 유형으로 크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음.
 - 30대의 특징은 앞선 20대 기혼여성에 비해 연속취업, 빠른 재취업 그리고 M자형 취업까지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의 비중이 전체의 44%임.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여성 취업유형의 차이
- 남편소득으로 볼 때, 중단형이 평균 282만원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남편의 소득이 많았음. M자형이나 아직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소득수준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임.
 - M자형 취업을 도모하는 여성들이 생계형이라는 점을 보여줌.
 - 자녀를 두지 않은 여성들의 남편소득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이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직 직업경력을 쌓아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 고졸 이하의 학력집단에서는 구성비율이 높은 유형이 지속적 비취업형, M자형 그리고 빠른 재취업형의 순으로 나타남.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여성들은 연속취업형, 지속적 비취업형, 빠른 취업형, 그

리고 자녀 없이 취업한 유형의 순서로 나타남.

□ 결혼과 출산 행태에서의 차이

- M자형에 속하는 기혼여성들은 1997년이나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가 많음. 1998년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에서는 자녀 없이 취업 혹은 연속 취업 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지속적 비취업형의 비율도 이전 코호트에 비해 높음.
- 재취업의 경우만을 보게 되면, 1998년 이후 결혼 코호트에서는 첫째 자녀 출산 후 바로 취업하는 빠른 재취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1997년 이후에 결혼한 기혼여성들의 경우 지속적 비취업형을 제외 하면 1997년 전에 결혼한 코호트보다 취업과 비취업의 유형이 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지님. 이는 1997년 이후 결혼한 코호트가 1997년 전 결혼코호트와는 상이한 취업경력을 선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결혼에서 출산에 이르는 간격은 M자형이 13.1개월로 나머지 유형에 비해 가장 짧았음. 빠른 취업형의 경우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결혼에서 첫 출산까지의 기간이 18.9개월로 길었음. 가장 짧게 나타나는 M자형과 비교해 보면, 첫 출산시기가 대략 평균 6개월 늦은 것임.
- 총출생아수에서는 M자형 여성이 2.1명으로 가장 많음. 반면, 총출생아수가 가장 적은 집단은 빠른 재취업형이었고, 이들의 총출생아수는 1.3명으로 집계되었음.
 - 빠른 재취업형과 M자형은 동일한 재취업형이지만 출산간격과 총출생아수에서 차이가 있음.

□ 취업경력 및 소득에서의 차이

- 여성의 78.4%가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

- 기혼여성들의 대다수가 결혼 전에도 취업경험이 있었음. 연속취업형과 중단형의 경우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결혼 전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남.
- 취업유지 및 단절의 결과, 기혼여성의 50%에 가까운 비율이 현재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 가운데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유형은 연속취업형으로 이들의 임금은 평균 156만원임. 소득이 가장 낮은 유형은 M자형에 속하는 여성들로 이들의 평균소득은 88만원임. 연속취업형과 비교할 때, 약 56.4%에 해당하는 수준임.
- 상용직 비율에서 M자형은 37.7%, 연속취업형 36.0%, 무자녀 취업형 14.6%, 그리고 빠른 재취업형이 11.7%임. 반면에, 임시일용직에서는 M자형과 빠른 재취업형의 비중이 각각 67.0%와 17.6%로 높게 나타남. 무급근로자에서도 M자형 취업이 48.8%로 높았고, 다음이 연속취업형으로 27.6%로 나타남.
-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자녀출산 및 양육기를 거치면서 비취업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의외로 길며, 직업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소위 ‘전업주부’의 수적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혼이면서 취업한 경우에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를 지난 이후에 재취업을 모색하는 유형(M자형)이 기혼여성의 일반적인 취업유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의 지적과도 일치함.
- 연속취업형에 속하는 여성들은 현재 직업지위 및 소득에서는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아직 자녀가 없는 여성들에 비해서도 취업경력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음. 이들은 자녀 출산 및 양육을 꾸려감에 있어서도 비취업으로 남아 있거나 취업을 중단한 사례들(중단형, 지속적 비취업형)들과 크게 차이가 없었음.
- 이 분석을 통해 기존의 M자형 이외에도 다양한 여성 취업과 비취업

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성의 취업조절의 형태는 다양하게 분화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존의 M자형 취업형태는 다른 유형보다도 약간 선행하는 유형으로 생각됨. 전형적인 M자 형태의 취업경로를 택하는 여성들은 연령대도 높았고, 대부분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코호트에 속함. 그에 비해 최근의 결혼코호트는 M자형을 비롯하여, 연속취업형, 빠른 취업형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경로들을 취하고 있음.

3. 자녀양육의 현황과 차별성

□ 2세 이하 자녀를 맡기기 적합한 곳과 실제 맡긴 곳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활용하여 0~2세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아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과 실제 맡긴 곳을 비교하였음.
 - 기혼 여성 중 0~2세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는 791명이며 이중 취업 여성이 218명, 비취업 여성은 574명임.
 - 취업여성들의 경우 0~2세 자녀를 맡기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본인 또는 남편, 그리고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함.
 - 실제로 아이를 맡기는 곳도 시설 이용보다는 친정부모와 시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높음.
 - 즉 영아의 경우는 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친인척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조부모에의 의존이 높은 현실과, 어린 자녀의 경우는 안전사고 대비는 물론 정서발달을 위하여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됨.
 - 시설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소수의 경우에는 주로 국

공립 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실제 이용률은 국공립보다 사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과 같은 곳이 높음. 이는 국공립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됨.

- 취업여성의 종사상 지위와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자녀를 실제 맡긴 곳을 살펴보았음.
 - 상용직 여성들은 임시 및 일용직에 비하여 주간과 야간 모두 다양한 자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이 긴 경우는 야간에 특히 친인척에의 의존도가 높음. 이는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늦은 시간까지 연장보육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비취업 여성들 역시 대부분 0~2세 자녀를 본인이 돌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로 그러한 비율이 높음.
- 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맡기기 적합한 곳과 실제 맡긴 곳
 - 자녀가 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인 경우가 1명이라도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과 실제 맡기는 곳을 살펴보았음.
 - 기혼 여성 중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는 총 964명임. 이 중 취업여성이 348명, 비취업 여성은 616명임.
 - 취업여성의 경우 자녀가 0~2세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음. 실제 이용률도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 친인척에의 의존도가 낮음.
 - 이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 보살핌에서 벗어나서 사회성과 기타 학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비취업 여성 역시 기타 보육시설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 아버지의 자녀양육 분담
 - 여성의 취업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지 않은 경우는 가족 내 성역할 분담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름.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양육 분담을 살펴보았음.

- 주중과 주말에 가사와 자녀돌보기에 투입한 시간을 살펴본 결과, 주중에 남편이 가사와 자녀돌보기에 투입한 시간은 하루 평균 72분임. 반면 부인은 하루 평균 333분을 투입함. 평일에 가사와 자녀돌보기에 투입한 시간이 약 4시간 정도 차이가 남.
 -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남편은 평균 334분, 부인은 평균 834분을 보냄. 주말에는 남편과 부인 모두 가사와 자녀돌보기에 투입하는 시간이 늘어나지만 여전히 여성이 약 2배 정도 많은 시간을 보냄.
-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여성에 비하여 비취업 여성이 평일에 가사와 자녀돌보기에 소요하는 시간은 약 2배에 달함. 반면 남성의 경우는 부인의 취업 여부에 따라 큰 차이 없음.
- 주말에는 여성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과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돌보기에 투입하는 시간이 길어짐. 그러나 비취업 여성이 취업 여성에 비하여 여전히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함. 비취업 여성의 남편 역시 취업 여성의 남편에 비하여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주말에 가사와 자녀돌보기에 투입하는 시간이 길어짐.
-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 분담현황을 살펴보았음.
-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는 어머니가 하루 평균 가사와 자녀돌보기에 투입하는 시간이 약 8~10시간에 달함.
 -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 어머니의 투입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듦.
 - 자녀의 수가 많아지면 아버지가 자녀양육과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은 주중과 주말에 관계없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반면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하여 자녀가 2명일 때 투입시간이 줄어들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면 다시 길어짐.

4. 혼인상태의 변화와 재혼에 관한 태도

- 이혼, 사별, 재혼과 같은 여성 혼인상태의 변화는 가임력과 출산행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그러나 혼인상태의 변화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와 자녀양육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함.
- 1997년의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혼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혼인구의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였고, 이혼인구 내에서도 다양성이 관찰됨. 이혼이 특정 연령이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지닌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화되어가는 추세임.

– 여성의 출산력 및 가임수준도 혼인상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에서 3,802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혼인상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 여성들의 연령분포와 출산수준을 비교하였음.

□ 혼인상태의 분포

- 전체의 92%가 약간 넘는 여성들이 첫 번째 결혼을 유지하고 있었음.
- 혼인상태가 변화한 여성은 모두 271명으로 분석대상 전체 여성의 약 7%를 차지함.
 - 이 중에서 첫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사례는 총 209명이며, 두 번째 결혼을 이미 시작한 사례가 46명, 그리고 아직 이혼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가 161명임.
 - 총 61명이 사별로 첫 번째 결혼을 마감하였는데, 이중에서 13명은 두 번째 결혼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기혼여성 3,800명의 결혼력, 이혼력, 사별력의 조합을 가지고 여섯 가지 유형을 구분하였음: 첫 번째 결혼을 지속한 경우, 재혼한 경우(이혼 후 재혼, 사별후 재혼), 이혼 후 무배우, 사별 후 무배우, 결혼과

이혼을 2차례 이상 한 경우.

- 첫 번째 결혼을 지속한 여성들의 평균연령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관찰 시점까지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 평균 총출생아수는 1.60로 여섯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 사별 후에 재혼을 한 경우가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아 2.15로 집계되었음. 이는 전체 평균인 1.76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치임.
- 예상외로 이혼이나 사별을 겪은 젊은 여성들 가운데 재혼한 경우는 많지 않았음.

□ 편모의 재혼에 대한 태도 및 출산계획

-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에서 관찰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상태의 응답자는 211명임.
- 무배우 여성 가운데 앞으로 재혼을 하겠다는 응답은 50명에 불과하였고, 4분의 3 이상은 앞으로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음.
 - 재혼을 원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결혼생활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음.
 - 2~3순위로 나타난 응답은 사회의 시선과 편견에 대한 걱정에 대한 내용임.
- 재혼 후의 추가출산계획에 대해서는 재혼 의사가 있는 51명 중 39명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5명은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함.
 - 재혼 후 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이유는 여성들 스스로가 ‘나이가 많아서’가 큰 비중을 차지함.
 - ‘계획한 만큼 이미 다 낳아서’ 혹은 ‘현재 자녀를 키우는데 전념하고 싶어서’가 각각 2~3 순위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가족해체 후 재혼을 하더라도 자녀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시사함. 그러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응답자 표본의 규모를 늘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5장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향후 정책과제

1. 과거 정책의 개관

- 과거 한국의 인구정책은 인구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지난 1961년에 가족계획사업이 실시되었음. 이 사업은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 가족계획정책은 시기별로 주요대상과 내용이 변화하였음. 1960년대에는 농어촌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3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하였음. 1970년대에는 도시 영세민과 직장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2자녀 갖기 운동’을 실시하였음. 1980년대에는 20대 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음.
 - 지난 198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 가족계획사업은 유명무실해졌음. 1990년 이후부터는 인구의 자질향상과 복지증진으로 전환되었음.
- 인구억제정책과 더불어 인구분산정책도 추진되었음. 수도권 인구집중과 과잉도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

2. 새로마지 플랜 2010

- 급속히 진행된 출산력 저하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2005년 새로마지 플랜을 수립하였음.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 핵심과제임.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 인프라 구축,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제시되었음.

-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이 강조되었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음.
- 출산 관련 정책 대상이 가족, 여성, 아동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음.
- 장기적인 계획이므로 제안된 많은 내용들 중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제도와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경험을 살펴보았음.
 -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제도임. 다음으로 직장 보육시설, 기업체 학비보조, 육아휴직제도 순서임.
 -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제도는 가족 간호휴가제도와 보육정보센터, 시차별 출퇴근 제도임.
 - 이용경험 유무는 방과 후 교육, 유아 교육비 지원, 기업체 학비보조, 출산 전후 휴가제도였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낮음.
 - 유아 교육비 지원과 기업체 학비보조와 같은 경제적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반면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은 이용도가 낮음.
 - 기업,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실질적인 양육/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당면과제인 것으로 생각됨.

3. 외국의 출산장려 및 가족정책

□ 싱가포르와 대만

- 싱가포르는 지난 1986년에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철폐하고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싱가포르, 대만과 일본의 가족정책 비교

특징	싱가포르	대만	일본
	가족 및 자녀 가치 강조	합의에 근거한 출산 및 인구정책	양육환경개선에 초점
1960대 전후	-인구억제정책 시작 “둘만 낳자”	-인구억제정책 시작	-인구억제정책 시작
1970년대	-인구억제책 유지	-인구억제책 유지	-인구억제책 유지
1980년대	-차별적 인구정책(1984)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의 사별 차별출산력유도 -세제혜택, 가족수당 지급	-인구평가 시도(1988) 인구고령화에 대한 우려 표명, 추가적인 출산을 상승 이 요구됨	
	-자녀가치 홍보 -가족 주일(Family Week) 제정(1985), 친가족주의 마련 세금, 주거, 출산비용, 보육서비스 관련 정책시작		
1990년대	-친가족주의 정책 유지	-인구정책의 방향 재설정 (1992)	-엔젤 플랜(1994)
	가족가치 강화, 결혼 유도, 출산유도 정책 유지	인구부양정책으로의 전환 혼인율상승 유도 -출산부양책 시행	자녀양육의 사회화 도모 보육서비스 확충 및 개선 -신엔젤 플랜(1999) 모자보건, 상담, 교육확대
2000년대	-자녀보너스연금(2000) 자녀수에 따른 누진적 수당 지급	-출산정책강화(2004) 여성단체와의 대화 시작	-저출산사회기본법(2003) 부모교육 확대
	-외국인 보모고용 제도화 (2004)	-새로운 인구정책시행(2006)	-아동 육아 응원플랜 (2005)
	-부모휴가 제도화(2000) 남성의 육아휴가 권고 -가족가치교육 -기업의 친가족정책 ‘family time’ 유도 -주 5일제 근무 시행(2004) -가족부 신설(2006)	인구의 질 향상, 환경 및 보육환경 개선, 아동권리 개선, 공공보육개념 도입, 보육도우미제도 설립, 외국인 보모도입 검토, 부모휴가제도 개선, 아동 있는 가정에 재정지원, 일과 가족 양립방안(탄력근무제, 임금 보장, 직장보육 강화) 건강 및 돌봄 시스템 강화	청년 자립, 근로방법 개선, 지역사회 육아지원 확대

- 출산장려정책은 가족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에서 시작됨. 더불어 세제혜택, 주택관련 우대, 출산시 지원금 및 자녀양육제도 등 다양한 보상책을 제시하였음.
 - 특히 지난 2000년 이후부터는 가족시간, 자녀양육의 다양한 자원, 일과 가정의 양립, 각종 경제적인 지원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함. 특히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각됨.
- 위와 같은 출산장려 정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그 이유로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일’에 대한 가치관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모순되는 점을 꼽을 수 있음. 즉 성과에 근거한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완벽한 충실도와 몰입을 요구하는 ‘일’에 대한 가치관과 역시 완벽한 몰입과 집중적인 돌봄노동을 필요로 하는 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임.
 - 여성의 역할에 대한 모순된 가치관도 이유로 꼽힘. 여성의 취업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변화한 현실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 역시 여성에게 돌려짐으로써 ‘슈퍼우먼’ 이미지가 형성됨. 두 가지를 모두 잘 하도록 기대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 부족 탓으로 여겨지며, 둘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요구됨. 이럴 경우 대다수의 여성들은 출산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됨.
 - 자녀양육의 성공이 여성의 성공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부담을 느끼게 됨. 이는 출산을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함.
- 대만의 경우는 과거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에서 인구장려정책으로 급속히 선회함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됨.
 - 인구장려를 위한 방안들이 환경단체와 여성단체를 비롯한 각종 이익집단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음.
 - 이에 따라 2006년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포괄적인 가족정

책을 입안하였음. 핵심적인 과제는 자녀양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공적 보육시스템의 도입으로 꼽힘.

- 건강 및 보진정책과 기업 수준에서 친가족적인 정책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 일본

- 일본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난 1994년에 ‘엔젤 플랜’을 수립하였고, 이후 2000년에는 ‘신엔젤 플랜’을, 그리고 2006년에는 ‘새로운 저출산대책’이 수립되었음.
- 사회 전체의 인식개혁과 아동과 가족을 소중히 하는 관점에서 보육정책을 강화하고 연령별 육아지원을 제안한 것이 핵심임.
 - 사회 전체의 인식개혁을 위하여 가족과 자녀의 소중함을 홍보하는 노력을 함.
 - 신생아와 수유기에는 경제적인 부담경감, 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축, 건강검진비용 제공 등의 지원을 제공함.
 - 미취학기에는 지역의 육아거점 확충, 소아의료시스템 확보, 육아휴직과 단시간 근무 보급, 직장 내 탁아시설을 통한 육아서비스 제공, 아버지의 참여 장려 등이 제공됨.
 - 초등학생 시기에는 방과 후 대책과 스쿨버스제도 도입,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기에는 교육비 부담 경감이 주요 정책으로 제안됨.
 - 즉 지역사회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연령별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핵심임.
- 위와 같은 정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치관 변화의 문제로 귀결됨.
 - 그러나 일본사회에는 모성에 대한 신화가 보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좋은 엄마 되기 십계명’에 따르면 모성을 강조하여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을 것이 강조되고 있음.

-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이는 일생 동안 자녀의 성격과 인성을 결정짓는다는 주장에 따라 어머니들의 책임이 막중하게 부과됨.
- 따라서 대부분의 일본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취업을 그만두거나 혹은 취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스웨덴

- 스웨덴의 인구관련정책의 특징은 자녀양육환경의 개선과 성 평등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오래 전부터 안정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 왔음.
- 성 평등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에 대한 지향은 가족, 출산, 기업 및 기타 사회복지정책의 전방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해 왔음.
-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부성휴가 제도의 도입이 대표적인 예임. 그러나 실질적인 이용률은 주로 모성휴가에 집중됨.
- 그 외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공적보육 형태가 마련됨.
 - 보육서비스 확대, 무상보육, 부모보험, 아동수당 지급으로 대표되는 공적보육시스템은 이후 아동간호수당, 임신수당, 아동연금, 양육보조수당 등으로 확대되었음.
- 위와 같은 다양한 정책 및 제도는 조세로 충당되며 이는 복지국가라는 합의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가능한 것으로 여겨짐. 그러나 최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주의 정권에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권으로 교체됨에 따라 전방위 복지체제는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 출산력의 저하를 일찍이 경험한 프랑스는 1930년대부터 가족주의 가

치를 강화하고 개별 가족의 출산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시도하였음.

- 세계대전 이후 15~64세에 이르는 생산연령인구의 대다수를 잃어버린 프랑스는 인구감소를 저지하고,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급진적인 처방이 필요했음.
- 따라서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하여 경제적 보상을 주기 시작하였으며 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누진성이 강화되었음.
- 지난 1970년대에는 프랑스의 출산율 저하가 셋째 자녀 출산율의 감소라는 평가가 나오자 셋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셋째 자녀를 우대하는 각종 가족시책(출산휴가연장, 가족수당의 100% 증액, 셋째 자녀 있는 여성에게 고령연금지급 및 최저생계비 지급)을 활용하였음.
-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는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정책에서도 결혼, 가족형태, 출산순위,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불간섭의 중립적 입장을 채택하였음.
- 결과적으로 가족정책은 가족의 형성 및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되었음. 기존에 산발적으로 실시된 가족수당들을 통합하여 영유아수당, 양육부모수당을 제공하기 시작함.

□ 네덜란드와 독일

- 네덜란드 역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형태를 지향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지향되는 부양모델은 ‘1.5 생계부양자 모델’임. 즉 대부분의 가족에서 남편은 전일제 근무, 부인은 시간제 근무를 하는 것임.
 - 이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수요와 어린 자녀는 어머니가 돌보아야 한다는 자녀양육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을 절충하기 위하여 고안된 모델임.

□ 스웨덴, 프랑스, 네델란드 및 독일의 가족정책 비교

특징	스웨덴	프랑스	네델란드/ 독일
	아동의 삶의 질 향상 + 성 평등 정책	가족주의정책	차별성을 인정한 1.5 임금제도의 확립
1940년 전후	-육아휴직제도(1932) (소득보장 없음) -아동수당 지급(1947) -공적보육시설 제도화	-가족수당 지급규정 (Alfred Sauvey, 1938) - 사회보장일반제도, 가족수당의 제도화 마련, (1945)	
1970년대	-부모보험(자녀출산으로 인한 가계의 소득손실 보장, 1974) -부모보험기간 연장(11개월) 및 소득보장 확대(1978) -공적 보육시설 확대	-가족수당의 수직적 보상 제도(소득재분배) -취업모에게 보육비 지급 (1972) -한부모수당 지급(1976) -아동수당 지급(1977)	
1980년대	-부모휴직기간 연장(12개월) 및 소득보장 확대 (소득의 90% 보장, 1989) -출산 직후 부모수당 지급 24개월(1980), 30개월(1986)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 가산율 책정 -영유아수당, 양육부모수당	-바세나르협약(1982)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시간제노동에 대한 차별철폐로 여성 노동력 이용 -유치원과 초등교육의 통합, 4세부터 교육 시작
1990년대	-부모보험의 전환: 아버지의 출산 육아참여 촉진(1995) -아버지의 휴직 의무화 (1개월)	-자유선택부모수당(전업주부수당)	-보육비 지출의 3차 체계 확립(중앙 및 지방정부, 개별가족, 고용주) -기업의 보육비용 지급 확대(25%) 부담 -출산휴가(유급)제 도입 -육아휴직(무급) 보장
2000년대	-무상보육 실시(4-5세) -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아버지 쿼터 2개월로 연장 -임시 아동간호수당 -아동연금	- 유아환영정책(PAJE) 자녀 있는 가족에 기본지원금 - 소득 및 계층별 선택적 추가지원제도 - 양육시스템 개선	-보육공공지출 시작 (2001), GDP 대비 0.24% 수준

○ 독일의 경우도 네델란드와 유사하게 어린 자녀의 양육 책임이 어머니에게 부과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보편적임. 또한 사회주의 시절 집

단보육시설에 대한 반발이 강함.

- 결과적으로 독일의 보육시설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미비한 편이고 따라서 여성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남.

4. 향후 정책과제

- 외국 정책들의 공통점이 가족과 자녀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이 가족문화와 가족생활의 개선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됨.
-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국가주도의 인구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음. 따라서 인구억제정책을 시행한 지 불과 몇 십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인구장려정책으로의 급전환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 대만의 경우는 인구장려 정책이 환경문제나 여성문제를 고려하는 각종 이익집단의 저항에 부딪히는 현실임.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가 가시화 되지 않았으나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자녀 교육에 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높은 사교육비의 현실 속에서 적은 수의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열망에 어떻게 출산장려 정책이 개인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함.
- 한국은 일본과 유사하게 자녀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모성에 대한 가치관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여성 스스로도 이를 내면화 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대다수의 여성이 출산과 동시에 취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관찰됨.
 - 자녀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가치관은 특히 어린 자녀의 경우에

강하게 부각됨. 따라서 0~2세 자녀의 경우는 보육시설이 있어도 실질적인 이용도가 낮으며, 부득이하게 이용을 하는 경우는 여성들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판단됨.

- 부모됨의 경험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지만 자녀는 반드시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과 그렇지 못할 경우의 죄책감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0~2세 영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은 단순히 수적인 증가만으로는 자녀양육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즉 안전사고 예방과 집과 같은 환경에서 가족과 같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지니는 질 좋은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 서구의 인구정책은 기본적인 철학의 바탕 하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립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반면 한국은 단기적인 안목에서 당면과제 해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현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지니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이 연구는 한국가족의 결혼과 출산행태의 최근 변화와 그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결혼과 자녀양육이 이루어지는 현재 한국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저출산의 특성과 가족문화 그리고 앞으로 인구정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한국사회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겪은 인구변화는 다른 사회에서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것이었다. 지난 1960년대 초반 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추진되기 시작한 가족계획사업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출산력 수준을 급속히 저하시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한국의 출산력 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대체수준보다 낮은 단계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에도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지속적인 저하를 거듭하였다.

지난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와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한국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출산력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IMF 사태'로 불리는 외환과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는 불안정한 경제상황은 젊은이들의 혼인과 출산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대량 실업, 노동시장의 왜곡, 빈곤 증대 등의 현상은 이혼, 가출, 가족 유기, 가족 폭력 등 가족의 불안정성과 가족 해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초저출산 단계로 이행한 것은 이러한 요인에 기인하는바 크다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의 출산력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미국의 인구조화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6)이 발표한 2005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1.0)과 마카오(0.8) 뿐이다. 한국은 폴란드, 체코공화국, 벨로루시, 보스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및 구 소련 국가들, 그리고 대만과 함께 1.2로 기록되어 있다. 출산력 수준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합계출산율은 1.3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출산력의 급속한 저하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통계청(2007) 추계에 의하면, 한국인구는 2020년 이전에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력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절대인구가 감소하면,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긴장과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 수준의 지속은 혼인제도, 가족제도와 여성지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비용의 증가로 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길 것이다. 젊은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은 노동시장의 인력부족사태를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서 인식하고 2004년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다루는 기관과 기구를 정부에 설립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이 공표되었다.

현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육아지원시설을 확충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불임시술비용 지원,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지원 시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가치와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 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의 다양화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출산억제정책에 비해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장려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도 정책의 가시적인 효과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재원의 확보와 아울러 정책의 우선순위, 우선 대상집단의 선정 등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산력 저하의 인과구조와 결정요인,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 변화하는 가족생활환경과 자녀양육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제 2 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출산행위 연구에 있어서 가족은 기본을 이루는 중요한 분석단위라고 할 수 있다. 초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족생활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출산 및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의 저출산 관련 연구들의 상당 부분은 거시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변화와 출산력 변천과정의 연계성을 탐색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경제적 변화와 저출산 현상의 인과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출산력이 감소하는 사회적 맥락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그런데, 초저출산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집합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그 변화에 대한 지식은 축적되었지만 그에 비해 미시적 수준에서 자녀가 갖는 가치,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출산 및 양육을 둘러싼 가족생활의 실태과악을 통해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고 전망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이르러 인구학, 보건학, 여성학, 가족학 등의 분야에서 개인 및 가족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저출산의 행태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연구결과들의 축적이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저출산 현상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난 10여 년간의 출산행태를 살펴보는 실증연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마다 한정된 지역과 집단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어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나 해법이 혼재해 있는 상황이다. 가령,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저출산의 관련성에 대해 한편에서는 자녀출산 및 양육이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출산 기피로 인한 현상으로 진단한다. 그런가 하면, 여성의 취업 및 자녀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출산연기 혹은 포기는 가족생활의 유지 및 질적 양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전략이라고 이해하는 연구도 있다. 여성 취업의 의미와 자녀에 대한 태도가 여성의 연령, 자녀의 연령,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다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취업과 저출산의 인과구조에 대

한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출산력 변화의 추세와 인과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출산장려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과 적용대상 집단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출산조절과 억제에 발현되는 가족단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장려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별 가족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 또한 저출산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친가족적인 사회문화 조성, 기업 및 국가정책과의 연계가 충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가족을 주분석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현재 한국사회의 자녀가치, 가족문화 그리고 가족생활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사회적 함의의 도출이 요구된다.

인구변화와 가족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인구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일부 국가들을 선별하여 심층적인 사례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의 출산력 변화의 사회적 맥락과 문화변화의 양상, 관련 정책의 실효성 등을 파악하고 한국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연구는 한국처럼 초저출산 단계에 진입한 다른 국가들의 가족생활 실태와 그들의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저출산 현상은 각 사회와 문화권에 따라 설명의 틀이나 그 과정이 차이를 보인다. 최근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일부 서구유럽 국가들과 일본에서 출산력이 조금씩이나마 상승하는 징후들이 관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국가들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그 동안 시행된 정책기초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 특히 가족환경, 가족문화와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논문들과 정책보고서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첫째,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거주지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근의 경기침체 과정에서 출산행태가 가장 민감하게 변화한 집단을 파악하고자 시도한다.

둘째, 출산행태,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자녀양육의 실태를 파악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결혼과 부모됨의 의미는 무엇이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자녀출산행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초저출산을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대해 파악한다.

셋째, 저출산 사회에서의 자녀양육 및 가사 등과 관련하여 발견되는 부부간 역할분담, 가족구성원의 조력, 가족구조의 변화, 새로운 가족형태의 창출 등을 포함한 가족생활 실태를 파악한다.

넷째,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가족문화 및 자녀양육실태를 점검하고, 각 국가별 가족문화가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해 갖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탐색한다.

다섯째,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가족문화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논의한다.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관련 교육자료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바람직한 교육방향을 모색한다.

제 3 절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는 문헌고찰, 실증자료의 분석 그리고 외국의 정책적 사례분석으로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문헌 및 실증연구고찰을 통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결혼, 출산 그리고 부모됨(parenthood)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가족이 변화하면서 가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개인의 삶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기존문헌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1990년대 이후 출산력의 변화추이와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할 자료는 1990년, 2000년, 2005년 인구센서스와 1990년, 1997년, 2000년, 2005년 동태통계자료,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원자료이다. 실증자료의 분석은 다시 거시적·집합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추이 및 차별출산력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과, 개별 가족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양육의 실태를 조명하는 작업으로 구분된다.

첫째, 가치관 변화 및 차별출산력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혼여성들의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점검하고, 가치관 및 태도가 여성의 연령이나 코호트, 자녀의 수, 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1990년대 이후의 출산력의 변화추세와 출산행태를 분석하는데, 여성의 취업여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사회구조적인 위치에 따라 가치관과 태도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다른지를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1990년 이후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최근에 나타나는 여성의 출산행태는 어떠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특징들이 앞으로의 출산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를 검토한다. 더 나아가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행위의 연계성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로서 가족전략적인 차원에서 둘째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둘째, 다양한 가족생활과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녀양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부모됨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시도한다. 자녀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족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자녀양육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먼저, 자녀보육비 지출 및 부모들의 시간활용 양상이 자녀연령

및 자녀수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출산과 직업 경력의 단절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한다. 기혼여성의 취업 및 경력 단절의 유형별로 출산관련행위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기술하고, 이러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한다. 여성의 취업과 자녀양육의 공백을 메우는 전략의 하나로 나타나는 양육보조자 활용의 실태, 특히 양육보조자로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사례에 대해서도 조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혼과 한부모 가족의 급속한 증가추세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주요 외국사례를 수집하고,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 및 가족문화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출산정책, 가족정책 및 문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출산율이 다소간 회복되고 있는 프랑스, 스웨덴, 독일의 사례도 점검할 것이다. 이들 국가에 대한 비교 분석은 각 사회가 가진 출산력변천의 과정과 원인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가족문화 및 정책의 효과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저출산의 특성과 앞으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니는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제 1 절 결혼의 지연

이 절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초혼연령 상승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초혼연령 상승은 출산수준에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우선적으로 한국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결혼시기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본 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외국의 사례와 연구들을 참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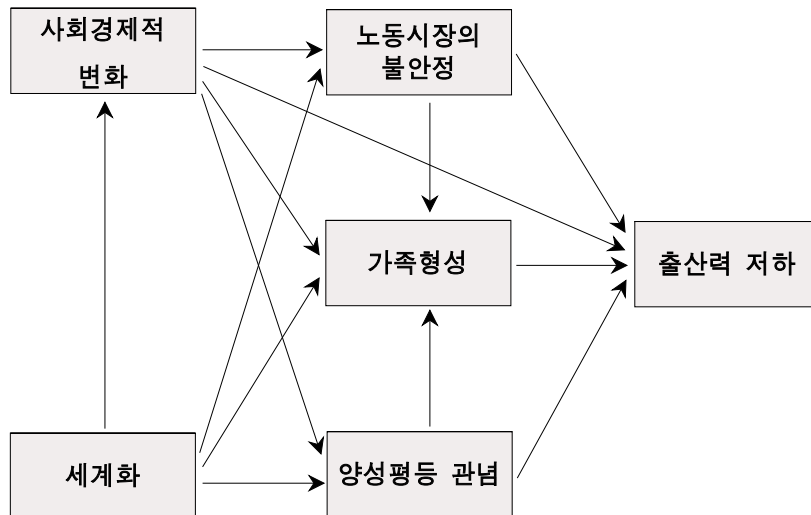
1. 초혼연령 상승에 대한 논의

가. 거시적 논의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초혼연령의 상승을 지적할 수 있다. 혼인제도 내에서의 출산만이 인정되는 한국사회에서 초혼연령의 상승이란 가임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킴으로써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결혼시기를 늦추는 것일까?

김두섭(2005, 2007)은 1980년대 중반이래 초혼연령 상승과 결혼 지연에 대하여 노동시장 불안정, 양성평등 관념과 같은 거시적인 환경변화를 강조하였다(그림 2-1 참조). 특히 세계화 추세에 따른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였다(김두섭, 2007; Kim, 2005). 그리고 젊은이들의 심각한 취업난은 결혼과 첫 출산을 연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 2-1]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의 인과구조



자료: 김두섭(2005, 2007).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역시 초혼연령 상승에 중요한 공헌을 한 것으로 선행 연구들은 지적하고 있다. 결혼이 지연되거나 기피되는 현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제도가족의 미형성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원영희, 2006).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 더 이상 절대적인 사안이 되지 못하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생애 사건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거시경제 및 사회적인 변화로 인하여 결혼적령기 개념이 희석되면서 실제로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보편혼주의 결혼관이 적립되기 어려운 환경이라 하겠다(원영희, 2006).

둘째, 결혼생활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결혼에 따른 비용편익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게 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실증연구결과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크게 ‘손

실'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예전과 비교해 보면 '보상'은 크게 감소하였음을 지적한다. 이는 결혼과 함께 지켜내야 하는 친족관계, 가사 및 육아부담, 역할과중 등의 부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전통적,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대체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非婚)의 삶의 방식이 점차 허용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혼자서도 살 수 있게끔 달라진 생활구조 및 경제구조는 결혼의 필요성을 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혼에 대한 선택적인 가치관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표 3-1참조). 이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 의미하는 바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즉 결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과 그에 투자되는 비용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해 온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란 남성에게 안정적인 보살핌과 지지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여성은 교육수준과 경제활동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보살핌을 베풀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진다. 자녀양육은 물론 남편과 노부모 부양까지 담당하는 주요 주체로 부각됨으로써 여성에게 이중부담이 지워짐은 이미 많은 논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하여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대되고 여성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여성들은 결혼을 연기하는 편을 선택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도 결혼시기를 지연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과 더불어 과거에 비하여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률이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아직까지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다. 위와 같은 상황들은 여성들이 결혼을 '선택사항'으로 간주하는 데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사회와 유사하게 초혼연령 상승을 경험한 일본 역시 초혼연령 상승

을 야기하는 거시적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한 바 있다(Retherford, Ogawa, and Matsukura, 2001). 중매결혼 감소, 개인주의 가치관의 증가, 여성의 교육수준 및 취업률 증가, 혼전 성관계 증가 등이 결혼을 지연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일본사회에서 관찰되는 ‘기생독신(parasite single)’ 현상 역시 초혼연령 상승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즉 일본의 많은 젊은 미혼남녀는 결혼 전 부모와 함께 살면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원(경제적, 정서적, 도구적)은 받지만 가게에는 기여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롭고 편안한 독신생활을 즐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을 할 필요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한국의 상황에도 상당 수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의 초혼연령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것은 여성의 취업률 증가이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능력이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 미시적 논의

개인의 행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일한 사회구조적 환경에 살고 있는 개인이 모두 동일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닌 개인이 결혼시기를 연기하는지, 혹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결혼시기 혹은 결혼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미시적인 수준에서 확인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김정석, 2006; 박경숙·김영혜·김현숙, 2005; 은기수, 1995; 이삼식 외, 2005b; 이수진, 2005).

은기수(1995)는 한국남성의 경우는 결혼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직장이라는 순서규범이 충족되어야 하고, 여성의 경우는 경제활동상태에 관계

없이 연령규범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초혼연령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남성의 결혼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직업적인 요소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곧 거시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바,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실업이 결혼시기를 연장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최근 박경숙 등(2005)은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위기를 중심으로 결혼코호트와 성별에 따라 교육과 취업상태가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과 취업상태가 결혼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이전 코호트는 교육수준이 결혼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의 코호트에서는 교육의 효과는 약해지고 취업한 여성의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결혼의 연기는 특히 고학력 전문직 여성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저자들은 경제위기 이후 남성의 생계부양능력이 약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결혼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위의 안정성이 약해졌다고 해석한다. 이는 여성들에게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와 개인의 자원을 통한 지위획득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고, 결혼에 대한 가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혼에서 기혼으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을 분석한 이수진(2005)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는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거주지, 생활만족도,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방도시에 살수록 결혼으로의 이행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미취업의 경우와 현재의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결혼으로의 이행확률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연령은 결혼으로의 이행확률을 높이지만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결혼으로의 이행확률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다. 연령과 거주지역이 남성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뿐이다. 대상자를 취업

자로만 선별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향을 비교해보면, 남녀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 그 관계가 더욱 두드러진다(김정석, 2006).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에게 연령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미혼남성들의 결혼의향은 교육수준과 취업상태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자원 확보가 남성들에게 결혼의 전제조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취업 여부는 여성의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한국사회에서 남성에게는 경제적인 자원이 결혼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거시적인 수준에서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남성의 초혼연령 상승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연령이라는 사회적 규범이 아직도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남녀의 초혼연령이 동반 상승하는 과정에서 남녀의 결혼연령 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결혼연령의 상승 및 연령차의 감소는 기존의 결혼관계 내에서 부부간의 불평등성 및 권력관계의 변화를 초래하면서 부부간 상호작용방식도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 2 절 출산의 연기와 초저출산

저출산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위에서 논의된 결혼연령의 상승이나 결혼시기의 연기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 출산의 연기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왜 자녀를 낳는 것을 미루는가? 왜 결혼한 부부들이 적은 수의 자녀를 낳고 출산을 중단하는가에 대해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이 절에서는 자녀의 가치 및 부모됨의 보상과 비용에 관한 쟁점들을 정리해 보고, 출산의 연기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1. 자녀의 가치 변화와 부모됨의 보상과 비용

자녀가치의 변화는 지난 30여 년간 서구사회에서 진행된 저출산의 경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전통사회에서 자녀는 종족 보존, 혈통의 계승의 측면에서 가치 있는 존재였으며, 특히 경제적 구조가 가족이라는 생산단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잉여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녀는 경제적 효용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로 오면서 부모됨은 부모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제로섬 혹은 오히려 비용이 더 큰 행동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연구들이 부모역할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 특히 피임기술의 발달로 임신 여부 및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모됨은 점차 생애의 선택적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부모역할 점유에 앞서 기회비용을 따지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둘째, 정규 교육의 도입, 고학력 사회의 지향으로 인해, 전통사회에서 자녀의 경제적 가치가 약화되었고, 반면에 자녀양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spenshade(1984)는 한 자녀일 경우 가계소득의 38%, 두 자녀일 경우에는 한 자녀 때보다 약 1.5배 즉, 가계소득의 45% 정도가 양육비로 지출된다고 추정한 바 있다(차경욱, 2005 재인용). 차경욱(2005)의 연구에서도 한 자녀 가계의 경우 자녀양육비가 가계소득의 37%, 두 자녀의 경우는 소득의 46%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한 자녀 가계에서 자녀의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양육비가 1억 2천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녀양육비용은 자녀를 둔 가족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한편, 수명의 증가로 부모세대의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도 적신호를 보내고 있

다. 가계자금의 흐름이 자녀세대에 집중되면서 노년기 준비를 위한 자금 투자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와 같이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는 개별 가정의 금융자산 축적 부진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고, 추후에는 은퇴자금의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서울신문, 2007). 이에 따라 Becker와 Barro(1984)가 언급한 이타주의 경제학의 논리대로, 자원의 세대 간 흐름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추가자녀의 출산을 기피하고 자녀수를 통제할 가능성은 아주 높아진다.

셋째,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녀양육과 교육의 기술과 방법이 보다 정교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부모가 자녀 양육에 쏟아야 하는 절대적인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가령, 최근의 아동교육서나 심리발달서적들은 자녀의 성장단계에서, 생후 3년을 아동심리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서술하고 있다. 이 시기의 심리적 결함, 특히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와의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아이는 심리발달에 지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Jolivet, 1997). 이러한 논의들은 모성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담론을 형성해왔다. 이러한 담론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정당화하고,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력 단절을 거부하는 여성을 ‘이기적인 여성’으로 몰아감으로써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자녀교육에 관한 열풍도 이들 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경향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지적이다. 한국과 일본 아이들은 3세부터 읽기와 영어회화, 미술교육 등을 받는다. 이는 다른 서구의 영유아들과는 사뭇 다르다. 또한 일본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어머니들은 미국의 어머니들에 비해 아이들이 부모 말에 복종하고, 인내와 참을성 등의 덕목을 지니도록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Jolivet, 1997). 그리고 이들 국가에서 어린자녀가

이른바 영재, 또는 영특한 아이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정보력과 양육기술은 여성의 주요 덕목으로 인식된다. 전업주부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윤택림(1996)은 그의 문화기술지적 연구에서, 여성들에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은 ‘청소’이지만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녀양육’이라고까지 언급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이러한 자녀양육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화된 분업체계이며, 그 가운데서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책임과 주체는 어머니이지, 결코 아버지가 아니다.

넷째, 자녀 양육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들여야 하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몰입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 되면서 부모됨의 기회비용이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직업역할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거세지고, 가족 내의 전통적 역할 이외에 선택 가능한 생애경로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녀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주어 지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취업여성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데서 비롯되는 어려움은 보육시설의 이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취업여성이 모성과 자녀교육 및 양육에 관한 기존의 담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간과 경제적 자원을 조율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부담과 비용이 발생한다.

다섯째, 출산력의 차이를 초래하는 특수한 혼인형태로서 동거사실혼을 들 수 있다. 동거사실혼은 법적인 혼인을 하기 이전의 과도기적인 결합형태로 볼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결합의 이 같은 불안정성은 낮은 성교 빈도나 임신 기피를 야기시켜 출산력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미의 대도시 등 지역에 따라서는 동거사실혼과 법적인 혼인 사이에 출산력 수준의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혼인의 해체와 별거도 출산력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혼이나 사별 등 혼인의 해체는 일반적으로 임신

에의 노출기간을 줄임으로써 출산력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별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혼인의 해체가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빨리 재혼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재혼이 금지되거나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혼인의 해체는 강력한 부의 영향력을 출산력에 미치게 된다(Davis et al., 1987). 또한 이혼은 여성을 경제적으로 빈곤화시켜 결혼제도에 재편입 할 기회를 감소시키기도 한다(Weitzman, 1985). 그리고 가족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부부 관계에서 자녀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를 덜 갖으려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혼을 한 부부는 적은 수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가족(child-free)이 증가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때문에 저출산 경향과 관련해서는 부모역할의 비용, 자녀출산 및 양육의 부담에 대한 논의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자녀는 곧 비용으로, 그리고 성인의 생애에서 부모역할의 점유는 또 다른 스트레스와 역할긴장을 초래하는 사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집합적 수준에서 드러나는 자녀의 비용증가, 부모됨의 부담이 주장된 것과는 다르게, 개인수준의 부모역할 경험을 다룬 연구들은 보상의 측면이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부모됨의 보상은 발달적 관점을 지향하는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많은 실증연구들이 부모됨과 부모역할의 수행이 개개인의 삶에 의미와 목적감을 주며, 자아실현의 한 양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을 지적한다(노영주, 1999; 신기영·옥선화, 1999; Ryff, 1989; Ryff et al., 1994). 그리고 부모됨의 보상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고선주·옥선화, 1994; 송지은·한경혜, 1994)들이나 여성문화에 관한 연구(송유진, 2005; 한경혜, 1998)들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삶에서도 부모역할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경험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모됨은 사회적 통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자녀양육으로 인해 더 많은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다. 더불어서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관리나 직업경력 관리에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은 부모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이 더 양호하였고, 자살률도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다(차승은, 2005). 지난 20여 년간의 미국 부모들의 생활시간을 연구한 Bianchi와 그 동료들(2006)에 따르면 최근에 올수록 부모들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고, 성인의 여가시간 대부분이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들로 짜여 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부모됨, 자녀출산 보상과 비용에 대해 이처럼 서로 엇갈린 논의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관찰되는 것은 개별 연구들이 서로 다른 분석수준에서 부모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 추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치, 부모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개인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부모역할 및 자녀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는 점도 기존연구들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2. 출산 연기와 출산간격(터울)

최근 대부분의 저출산 사회에서의 출산을 저하는 출산시기의 지연에 기인하는바 크다. 결혼시기의 지연과 더불어 첫째 자녀를 낳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가임기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출산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은 여성 노동시장 여건의 변화, 구체적으로는 여성 고학력 취업의 증가와 임금곡선의 상승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들이 높은 임금과 취업유지를 위해 결혼 이후에도 특정기간 무자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취업과 여성임금 상승, 그리고 출산연기의 연계는 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최경수,

2004). 무자녀에서 첫째 자녀로의 이행과정을 분석한 전광희(2006)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는 이전 시기에 비해 첫째 자녀의 출산간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출산연기는 첫째 자녀의 출산 때보다 둘째 자녀의 출산시기에 더 뚜렷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한 한 명의 자녀까지는 예외 없이 출산하고 있다는 경험적 사실에 기반한다. 다만, 둘째 자녀 출산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과는 차별적으로 조금 더 계산적이면서도 계획적인 출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김정석, 2007). 실제로 여성의 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첫째 자녀를 가진 여성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 이행확률을 분석한 박수미(2006)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교육수준, 여성의 취업, 결혼부터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된 시간,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경험이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이거나 취업을 한 여성은 둘째 출산을 연기하거나 혹은 포기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결혼에서 첫째 출산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둘째 출산으로의 이행을 역시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산연기에 관한 연구들은 그 동안 주로 자녀 터울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최근에는 추가자녀 계획까지 포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자연터울이라 할 수 있는 '3세 터울'을 기준으로 터울이 길어질수록 추가 자녀 계획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민현주, 2007). 일부 연구들은 자녀 터울 기간의 증가와 감소의 분포를 추적하고, 자녀 터울이 늘고 줄어드는데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첫째에서 둘째 자녀로의 이행과 계획을 살펴본 이삼식 외(2005b)의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의 시점, 터울에 대한 인식이 둘째 자녀 출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자녀를 계획하는 여성들은 첫째 자녀와의 터울을 고려하여

출산시기를 집중시킴으로써 단산기간을 앞당기게 된다. 이미 첫째 자녀 출산시기가 늦어버린 경우에는 터울조정이 어려워져 둘째 자녀의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터울조절 경향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민현주, 2007; Bhrolchain, 1985). 터울이 길고 짧아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터울조절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다. 가령, 경제위기와 출산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이성용(2006)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하여 첫째 자녀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은 오히려 짧은 기간 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위기 이후의 출산형태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유형과 짧은 기간에 원하는 수의 자녀를 빨리 낳으려는 유형으로 이분화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의 첫째 자녀 출산행위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여성의 안정적인 직업은 부적인 영향을, 남성의 안정적인 직업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직업은 출산행위에 대하여 상반되는 연관성을 보이지만, 남성의 안정적인 직업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적절한 터울(tempo)과 둘째 자녀 출산의 '적기(timing)'에 대한 인식은 개인과 가족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자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출산시기와 간격 그리고 추가자녀의 출산을 예측하는 연구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그동안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들어 소수의 연구자들이 생존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출산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부터 출산시기와 간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요인들 간의 역학관계에 관해서는 종합적인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3 절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출산력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논의되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여성의 교육수준, 도시 거주, 남성의 직업위세 등의 변수들이 출산력 수준과 부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혀냈다(권태환·김두섭, 2002; 은기수, 1997; 전광희, 2002). 또한 김두섭(Kim, 1987)은 미국과 한국 자료의 비교분석연구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변수들이 출산력 수준과 3차 곡선관계를 지닌다고 주장한바 있다.

한국의 출산력 변천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1차와 2차 기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제1차 출산력 변천기간의 출산력의 변화는 분계점 가설(threshold hypothesis)과 Davis의 인구변화와 반응이론(theory of demographic change and response)으로 잘 설명된다(김두섭, 2006; Kim, 1992, 2005). 즉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상호 연관된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분계점에 도달하면 사람들이 인구압력을 느끼게 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출산력의 저하가 시작된다는 것이다(Davis, 1963).

지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기간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출산력의 저하를 더욱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기간에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는, 많은 미시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자녀의 효용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비효용성(경비)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Andorka, 1978; Becker, 1960; Easterlin, 1969, 1975; Freedman, 1963; Leibenstein, 1957, 1975; Mincer, 1963; Willis, 1973). 그리고 자녀양육에 수반되는 경비가 급속하게 상승함에 따라 저출산 지향의 규범, 가치관과 태도가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아울러 핵가족의 비중이 높아지는 가족구조의 전환과 서구적인 가치관과 태도의 확산 역시

출산력의 저하에 크게 공헌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가족 속의 여성은 대가족과 남아선호 경향이 강한 노인들의 압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고, 전통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가족계획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 1980년대 중반은 한국 인구변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 있다. 출산력이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저하하여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 수준의 저출산 단계에 진입하였다. 남녀의 차별의식이나 남아선호관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가족 가치와 규범이 광범하게 정착되어 출산력은 그 이후에도 괄목할 만한 감소를 지속하였다 (김두섭, 2002; Kim, 2004).

한국 출산력의 저하 속도는 일본의 그것보다도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Suzuki, 2003).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초저출산 상태에 도달하였다. 초혼연령의 상승, 혼인적령 여성인구의 감소 및 여자 1인당 평균 출산아수의 감소로 출생아수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2-2]를 보면, 비록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 지기는 하였지만,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의 4.53에서 1983년 2.08로 대체수준보다 낮아졌으며, 2005년 1.08에 도달하였다. [그림 2-2]에서 2000년에 합계출산율이 약간 상승한 것은 ‘새천년 베이비 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2차 출산력 변천기간은 제1차 기간과 다르게 사회경제적 변화가 출산력변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추진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IMF 경제위기 이후 경기 후퇴에 따른 불안정한 노동시장, 가족형성의 지연과 약화는 최근의 초저출산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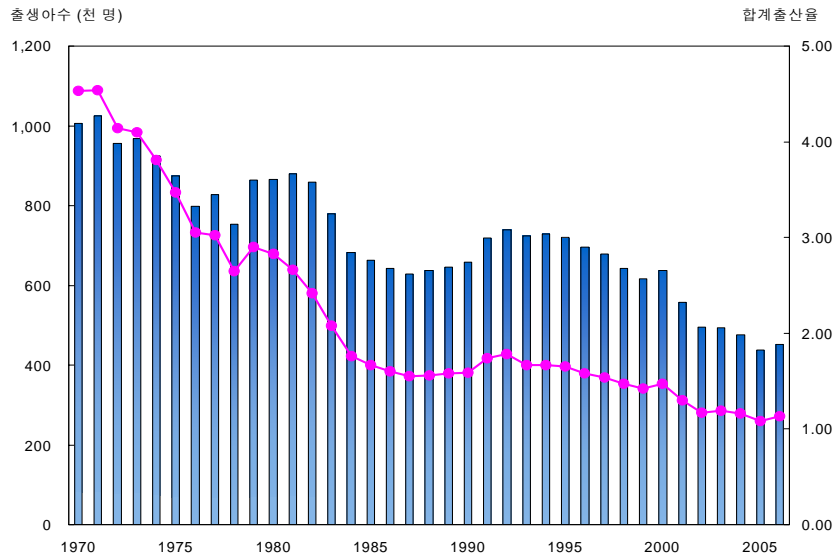
1. 소득수준과 출산력

그동안 경제적 지위나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개발되고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소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다. Malthus는 소득이 증가하면 일찍 결혼하게 되고, 결혼 이후에도 금욕생활을 할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출산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Becker, 1960:212). 지난 1960년대 초에 이르면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녀를 하나의 소비재로 간주하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가족소득에 따라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Andorka, 1978; Becker, 1960; Easterlin, 1969, 1975; Freedman, 1963; Leibenstein, 1957, 1975; Mincer, 1963; Willis, 1973).

Becker(1960)는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소득과 출산력 간에 부(負)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된 것은 소득이 피임지식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만약 피임지식의 수준이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된다면, 소득과 출산력 간에는 정(正)적인 관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다른 많은 경제학자들도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의 상승과 함께 출산력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Namoodiri, 1970).

거시와 미시수준에서 이루어진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소득과 출산력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Wrong(1958:224)은 서구사회에서 이루어진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들을 개관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소득과 출산력의 관계는 세 가지 발전단계를 거친다. 제1단계에서는 소득과 출산력이 부의 관계를 보이며, 제2단계에서 U자 형태로 발전하고, 저출산 저사망의 제3단계에서는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이 없어지거나 정의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2-2]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의 변화추이, 1970~2006



자료: 통계청(2006).

이와 비슷하게 김두섭(Kim, 1987)은 미국과 한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사회경제적 지위)과 출산력 간에 3차 곡선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낸 바 있다. 즉,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면 부양능력이 높아짐으로써 출산력도 상승하지만, 일정 소득수준을 넘으면 자녀의 경제적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어 출산력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최상층 소득집단의 경우에는 충분한 소득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수요가 경제적 효용성에 의하여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며, 따라서 소득증가와 함께 출산력이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는 이러한 3차 곡선의 관계가 국가의 발전수준에 관계없이 일반화 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형태가 일련의 발전단계를 거치며 진화한다고 주장하였다.

2. 교육수준 및 직업과 출산력

여성의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서도 출산수준과 선명한 부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세계 출산력조사(1974 World Fertility Survey)』 자료 분석결과를 보게 되면, 소득은 출산력과 비선형적인(non-linear) 관련성을 갖지만, 여성의 교육수준은 직선적인 부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을 통제하게 되면 소득이나 생활수준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가 감소하거나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에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수준과 교육수준이 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우선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상층 집단의 행위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고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투자의 양이 증가하는 점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자녀에 대한 투자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투자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녀수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출산력이 낮아진 이후에는 교육수준이 상층인 집단의 출산력이 약간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김두섭, 2007).

소득, 교육수준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표는 직업이다. 물론 직업과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은 상호연관이 있기 때문에, 직업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를 직업의 효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다만, 직업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은 대체로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상에서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준거집단으로서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는 물론 실제 출산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권태환·김두섭, 2002). 직종, 종사상 지위와 같은 직업지위와 출산수준의 관련성을 보게 되면, 대체로 농림수산업과 같은 전통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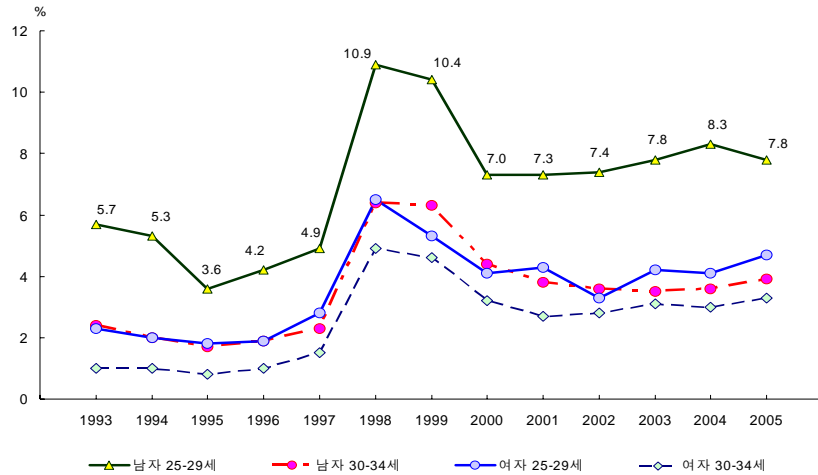
인 방식의 직업에 종사하는 집단에서 출산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련성은 대체로 남편의 직업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90년 센서스 자료에서 직종에 따른 출산력 차이를 살펴본 김두섭(2007)에 따르면,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출산수준이 가장 높았고, 반면에 사무직 종사자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보였다. 그런데,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기혼여성 자신도 직업상의 지위,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게 된다. 그리고 부인의 직종이나 직업환경은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업지위를 공유할 수 있다. 다만, 직업영역에서의 성별 분절화 현상을 고려할 때, 대체로 기혼여성은 남편의 직업지위보다 낮은 직종이나 종사상 지위를 갖는 것이 더 보편적일 것이다. 따라서 부인의 직업과 출산수준의 관계는 남편의 직업과 부인의 중간지점에서 협상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는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의 연령층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거나 혼인적령기의 젊은이들도 심각한 취업난을 겪게 된다. 실업, 해고, 임시직과 비정규직의 증가로 대표되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경기불황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혼인과 첫 출산의 시기를 연기하거나 자녀간 출산터울을 넓히도록 만들었으며, 이는 한국이 최근 초저출산 수준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Davis(1963)는 출산을 제한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기아나 절대빈곤의 위협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공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높은 실업, 그리고 사회적 낙오에 대한 두려움을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산력 저하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림 2-3]을 보면, 25~29세 남자의 실업률이 1997년 4.9%에서 1998년 10.9%로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같은 연령 집단의 여자와 30~34세 남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비록 실업

[그림 2-3] 성 및 연령별 실업률의 변화추세, 1993~2005



자료: 김두섭(2005, 2007).

률은 1999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임금, 노동시간, 해고 등 노동시장의 다른 조건들에 관한 통계들을 보더라도 한국은 아직 경제위기의 후유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청, 2005). 따라서 지난 1997년에 있었던 IMF 사태는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살펴봄에 있어서 변곡점이 될 소지가 높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을 분석함에 있어서 최근의 한국의 경제상황의 변동과 그 영향에 대해 진단해 볼 것이다.

제 4 절 성 불평등과 출산력

여성 교육수준의 향상,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의 측면에서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증가는 필연적인 수순이었다. 비록 그 속도가 더디기는 하나 여성 취업의 증가추세가 드러나면서, 취업여성의 다중역할 부담, 역할 정체성, 역할 스트레스, 취업모/전업주부의 자녀양육 태도 및 방식, 모성취업으로 인한 아동발달의 양태 등 다양한 시각에서 여성 취업의 효과를 검토하여 왔다. 그리고 극히 최근에 이르러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선 각 국가들에서 초저출산 경향이 관찰되면서 여성의 취업과 출산행동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률 증가 및 사회적인 성 불평등의 감소와 저출산의 관련성에 관한 주요 논의와 쟁점들에 대해 점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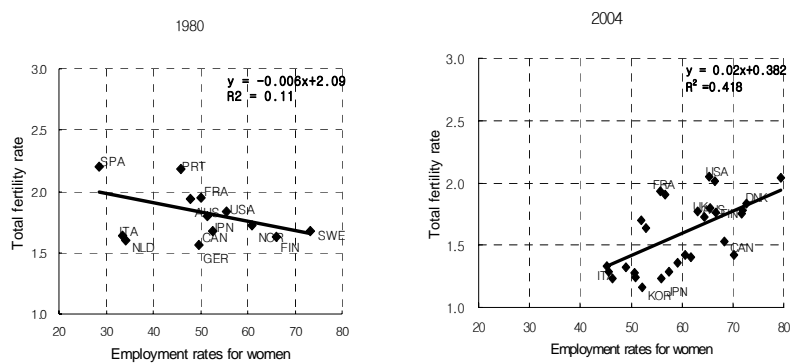
1.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경제활동 증가와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라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초래하게 되고, 더불어 자녀출산 및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미시경제적인 관점 이외에도 경제적 종속이론(economic dependency theory)과 여성자율이론(female autonomy theory)을 지적할 수 있다(윤소영, 2005에서 재인용). 여성자율이론에서는 신경제이론과 유사한 맥락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율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자율성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 자녀출산을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그런가하면, 경제적 종속이론은 자녀가 노후의 삶을 보장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과는 약간 다른데, 이들은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경우는 자신의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 지각하고,

목표로 하는 자녀수(특히 아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출산을 마감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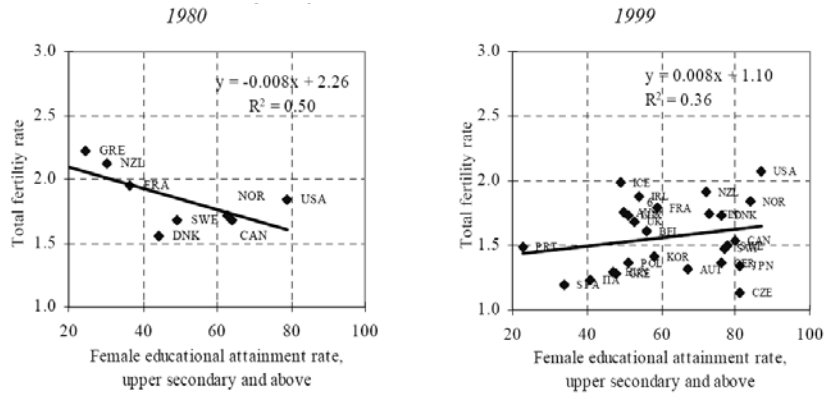
이렇게 취업과 자녀양육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역할양립이론(role compatibility theory)은 특정 조건하에서는 여성과 출산이 부적 상관을 갖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취업이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의 취업 자체가 아니며, 오히려 직종이나 근무환경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같은 중간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Sleebos(2003)는 국제비교를 통하여 여성의 취업률과 교육수준이 출산수준과 반드시 부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님을 주장하였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1980년과 1999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여성의 취업률 및 교육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1980년에는 부적의 관계가 관찰되었으나 1999년에는 정적인 관계가 관찰되었다. 취업률의 경우는 2004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는데, 동일한 결과가 관찰되었다(그림 2-4와 그림 2-5 참조).

[그림 2-4] 여성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1980, 2004



주: Sleebos(2003).

[그림 2-5] 여성의 교육수준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1980, 1999



주: Sleebos(2003).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그는 여성의 취업률과 교육수준이 증가하던 초기에는 출산율이 감소할 수 있으나 안정적인 시기에 도달하면 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정적인 관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2. 가족 내 성 불평등(gender inequality)과 저출산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을 논의함에 있어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내용은 성 불평등(gender inequality)과 관련된 측면이다. 거시적으로는 앞서 Sleebos(2003)의 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여성의 취업 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제도 및 정책적 뒷받침이 주로 논의되어 왔다. 미시적으로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정책 마련과 더불어 가족 내에서의 자녀양육 분담도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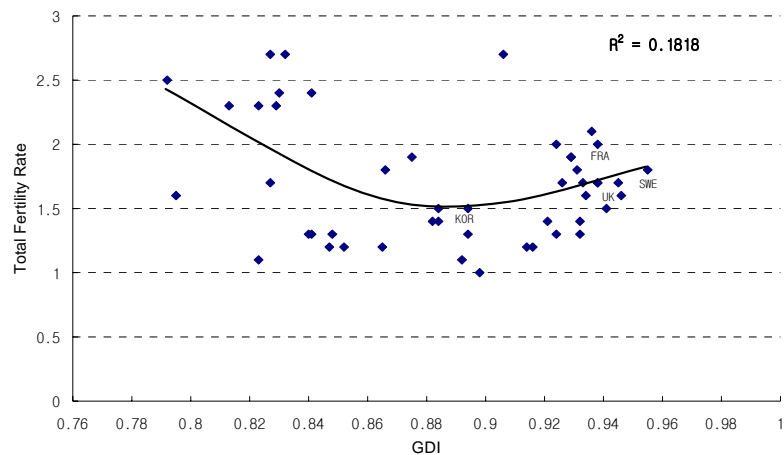
미국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가사분담과 둘째 자녀 출산율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가사부담이 가장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부

부들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orr and Short, 2004).

이는 자녀양육과 가사분담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ünzler와 동료들(2003) 역시 가사와 육아 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남을 주장한 바 있다. McDonald(2000)는 가족 내에서의 성 평등과 사회적인 성 평등이 일치해야만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성의 취업률과 교육수준 등은 높아졌으나 가족 내에서의 성역할 구조 변화가 지체된다면,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회피 혹은 연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재경 외(2005)는 성 평등과 출산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UNDP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와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U자형의 관계가 관찰되었다(그림 2-6 참조). 즉 GDI가 낮은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GDI가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형태가 나타난다.

[그림 2-6] GDI와 합계출산율의 관계



주: Sleebos(2003).

한국은 2004년 현재 GDI가 중간 정도인 국가로서 합계출산율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성 평등 지향의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된다면 출산수준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외국의 성 평등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성별분업 해체, 성별분업 변형, 성 중립, 전통적 성별분업 유지로 나누어진다. 성별분업 해체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일하는 부부를 기본으로 상정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최소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상 최저의 출산력이었던 합계출산율 1.52에서 2000년에 1.54로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출산력 상승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시한 국가는 프랑스인데, 성별분업 변형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가족형태에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자녀양육을 둘러싼 여성의 노동투입을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이었다. 그런데, 이는 자녀양육의 책임의 많은 부분이 여성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아동수당 지급으로 출산율 상승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아동수당 지급과 함께, 다양한 성 평등 정책이 함께 실시되었다. 아동양육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차원의 다각도의 노력, 특히 직장 및 가족역할에서의 성 평등을 지향하는 정책들이 결실을 거두면서, 출산친화적인 사회로 진입하였다.

반면 성 중립 정책을 택한 영국 및 네덜란드와 전통적 성별분업을 유지하는 이태리는 출산력의 상승이 미미하였다(이재경 외, 2005). 성 평등과 출산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와 외국의 정책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성 평등적인 정책들이 출산정책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3장 결혼과 출산행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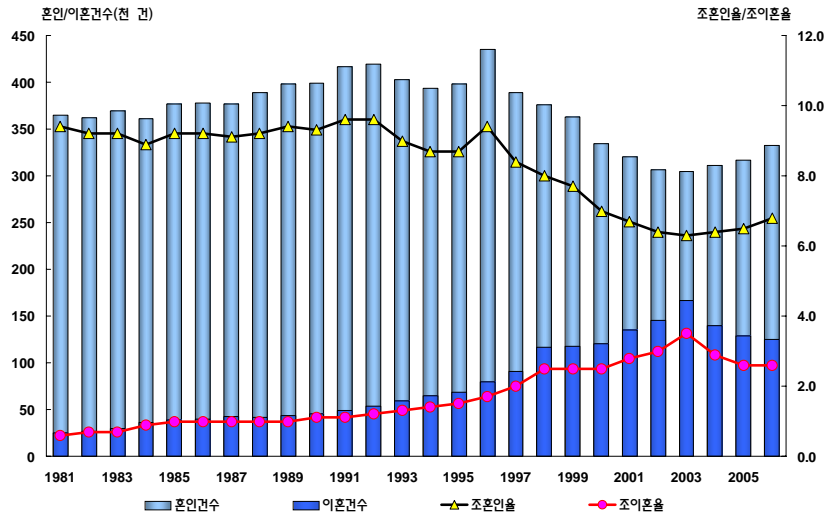
제 1 절 결혼가치관의 변화

지난 반세기에 걸쳐 한국사회의 가족은 결혼연령의 상승, 혼인율의 저하,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그리고 가족구조의 다양성 등 과거 전형화 된 가족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가족의 모습과 함께 그 전까지는 크게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던 혼인율도 최근에 오면서 크게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 및 혼인율은 1980년대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다(그림 3-1 참조). 구체적으로 1970~1980년까지 9.2~10.6의 증가세를 나타내던 혼인율은 1990년에는 인구 천 명당 9.3건 그리고 2000년에는 7.0건까지 낮아졌고 경제위기를 겪었던 1997년을 계기로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된다. 그런가 하면, 이혼율은 1980년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하였다.

[그림 3-1]을 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관찰되는 혼인과 이혼의 변화추세가 2003년을 계기로 다시 반전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즉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이 증가하고,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중노년층의 재혼 경향이 높아졌고,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2005년 자료를 보게 되면, 결혼한 남녀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인 경우는 전체 혼인건수의 25.2%에 달했다.

[그림 3-1] 혼인건수, 이혼건수,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의 변화추세, 1981~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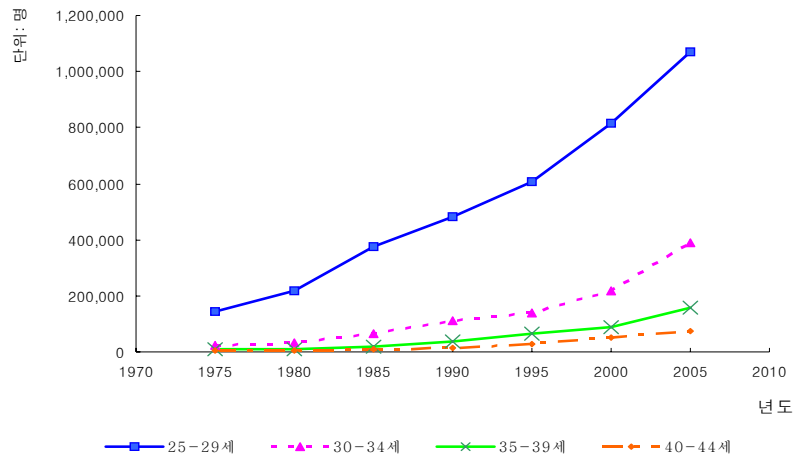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7).

이는 1995년에 부부 모두 재혼의 비율이 13.5%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10년 동안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05년에 혼인신고 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전체 신고건수의 1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루어진 혼인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는 20대 중반 이후 미혼인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최근 들어 결혼시기를 늦추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서, 20~30대의 유배우율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림 3-2]에서 20대 후반의 미혼인구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의 효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30대 연령집단의 미혼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생애 중반에도 여전히 혼인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개인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2] 연령별 미혼여성인구의 증가추이, 1975~2005



자료: 통계청(2007).

이러한 결혼행동의 변화에 대해 학자들은 ‘결혼에 따르는 비용’을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즉,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사회변화에 있어 행동변화와 태도변화 중 어느 것이 선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가령, 결혼을 부담으로 지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 혼인율이 감소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결혼 지연과 낮은 혼인율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미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태도가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것 일수도 있다.

실제로 행동과 태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견해를 같이한다. 이 절에서는 결혼가치관의 변화양상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혼인상태에 따른 결혼 태도의 차이를 통해 결혼에 대한 행동과 태도변화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는 결혼 지연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 <표 3-1>에서 보는 것처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는 점차 약해지며 결혼의 선택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결혼의 개인적 선택에 대한 허용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주류를 이룬다. 실제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혼인율이 급격히 떨어지던 2002년경에도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응답경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약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표 3-1>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1998, 2006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모름
계 (1998)	33.6	39.9	23.8	1.1	0.2	1.4
남자	36.9	42.6	18.4	0.7	0.1	1.4
여자	30.5	37.4	28.9	1.4	0.2	1.5
계 (2006)	25.7	42.0	27.5	1.8	0.4	2.6
남자	30.0	45.1	21.1	1.0	0.3	2.5
여자	21.6	38.9	33.6	2.6	0.5	2.7

자료: 통계청(1998, 2006).

가령,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응답은 1998년, 2000년, 2006년에 각각 33.6%, 25.6%, 그리고 2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에 비해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1998년에는 1.3%, 2002년에는 1.9% 그리고, 2006년에는 2.2%로 늘어났다. 결혼에 대해 ‘모르겠다’는 반응 역시 1998년에는 1.4% 수준이던 것이 2006년에는 2.6%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남녀별로 살펴보면, 여성들이 결혼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구성비가 조금 더 높다. 이는 최근에 이르러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에 수반되는 부담과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도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가령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 비하여 2005년의 경우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은 26.2%에서 10.8%로 현저히 낮아졌다. 반면에, 결혼에 대하여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는 총 43.6%에서 49.6%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앞서 언급한 양성평등 관념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가족구조의 다양성 등의 배경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미혼자 1,378명(남 714명, 여 673명)중 약 50%는 결혼계획이 없거나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혼계획이 없는 이유를 성별로 비교한 결과, 남성은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 여성은 ‘꼭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다(장혜경 외, 2003).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인 요인이, 여성의 경우는 가치관 변화가 결혼시기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이러한 결혼태도의 차이는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결혼에 대한 보상과 비용의 지각방식이 상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에서는 혼인상태와 연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혼인상태에 따른 결혼가치관

결혼가치관이 꾸준히 변화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한 사회내에서도 연령과 세대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경향이 흔히 관찰된다. 그렇다면 동일한 연령대라도 혼인상태에 따라 결혼가치관에 차이가 있을까?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태도는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될 수도 있다. 즉 기혼여성은 이미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더 당위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혼인 상태에 있다는 점 자체가 결혼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반영 할 수 있다. 때문에 가치관 자체만으로는 행위와의 연계성이나 인과성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결혼과 부모됨은 성인의 발달과정에서 당위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이란 개인의 생각과 특성을 어느 정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동일세대 내에서도 결혼과 부모됨에 대한 이질적인 가치관이 공존한다면, 이는 독일사회에서처럼 주요정책 수립 과정에서 개별 집단이 상이한 정치적인 이익과 경향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는 크다.

이 절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연령대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혼인상태(미혼 vs. 기혼)에 따라 가치관 및 기타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2>에는 연령집단별로 미혼과 기혼 여성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기혼여성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세 이상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미혼여성의 경우는 30세 이상이 전체 미혼 응답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소수에 불과하다. 즉 미혼여성 중 40세 이상과 기혼여성 중 20~24세는 평균 초혼연령을 기준으로 볼 때 양극단에 속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출생코호트로 나누어 보면 1960년대 출생자가 약 56.8%, 1970년대 출생이 약 41.1%, 1980년대 출생이 약 2.1%에 해당한다.

혼인상태에 따라 동일한 연령대 여성들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3>과 같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낮아진다. 즉,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결혼에 대한 당위적인 가치관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연령대의 미혼과 기혼자의 응답경향을 비교하면 25~29세만 제외하고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결혼을 더 당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낫다’와 같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35~39세를 제외한 기타 연령 집단에서 기혼여성의 응답률이 더 높다는 것이 위의 결과와 대비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일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이미 결혼한 여성은 결혼에 대한 보상과 비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결혼생활을 하는지, 그 질적인 측면이 반영되면서 이른바 ‘이상적인 결혼’에 대한 인식이 미혼보다는 기혼여성에게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표 3-2〉 여성의 혼인상태별 연령 분포

(단위: %)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세이상	사례수
미혼	54.7	30.3	10.4	3.0	1.7	1,200
기혼	1.8	11.8	27.5	30.8	28.1	3,80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반면 ‘결혼은 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기혼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자의 응답비율이 높다. 미혼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에 대한 중도적인 입장의 비중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이 각각, 44%, 53% 그리고 66%로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30대 후반에 이른 미혼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임을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혹은 연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미혼으로 살아가는데 대한 비용이나 사회적인 압력을 적게 받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는 동일한 연령대의 기혼

여성이 미혼여성에 비하여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나, 당위적인 가치관과 부정적인 가치관은 기혼여성에게서 공존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표 3-3>에서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3-3> 혼인상태에 따른 결혼가치관과 부모가치관

(단위: %)

구 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모르겠다
25~29세	미혼	12.7	36.9	44.4	2.8	3.3
	기혼	11.6	41.0	41.4	5.4	0.7
30~34세	미혼	9.6	29.6	53.6	4.8	2.4
	기혼	10.1	39.3	43.3	5.9	1.4
35~39세	미혼	8.3	11.1	66.7	11.1	2.8
	기혼	8.6	40.1	42.4	7.6	1.2

구분		부모가 되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전적으로 찬성	대체로 찬성	별로 찬성하지 않음	전혀 찬성하지 않음	
25~29세	미혼	40.8	51.8	6.3	1.1	
	기혼	60.6	36.5	2.7	0.2	
30~34세	미혼	39.2	56.0	4.0	0.8	
	기혼	65.1	32.3	2.4	0.2	
35~39세	미혼	41.7	41.7	13.9	2.8	
	기혼	63.1	35.0	1.7	0.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전반적으로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아직까지도 한국사회에서는 실제 행위는 다르게 나타날 지라도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혼인상태에 따른 차이는 근소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기혼여

성이 미혼여성에 비하여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됨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기혼여성의 경우는 연령이 어릴수록, 미혼여성인 경우는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대비된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한국여성들은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가치관은 약하지만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은 긍정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혼인상태와 연령에 관계없이 약 70% 가량이 부정적인 답을 함으로써, 혼외출산은 인정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여주었다. 결혼과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부각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이혼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한국가족의 변화를 이해하는 작업의 성격을 가진다. 최근의 이혼연구들은 지난 몇 년간의 이혼이 문제 있는 결혼에 대한 하나의 선택적 대안으로 수용되고 있다는데 주목하였다(이현송, 1999). 이는 결혼제도를 둘러싼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구성물로서 이혼을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때문에 이혼증가에 대한 이해는 한국가족의 외형적 변화와 더불어서 가족가치관, 가족에 대한 태도 등 가족의 내적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의미한다(한경혜·강유진·한민아, 2003).

이혼에 대한 태도는 결혼생활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이혼을 문제 있는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보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한다(Amato and Rogers, 1999). 또한 이혼을 결정할 때 이혼에

대해 허용적이고, 선택가능하다고 인지할 경우 이혼에 대한 비용이나 장애요인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에 비해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혼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틀 지워진 시각으로 인하여 이혼 시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설명도 있다(노영주, 2001). 더욱이 Booth 와 Amato(1991)에 의하면, 이혼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이혼 후 우울증 및 행복감 저하를 더 많이 경험한다. 이는 이혼에 대한 태도가 이혼 후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혼에 대한 태도는 결혼의 질,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기대와 규범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4〉 성별에 따른 이혼에 대한 태도: 1998, 2002, 2006

구 분	이유가 있으면 하는게 좋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모름
계(1998)	8.6 ¹⁾	29.9	41.3	19.0	2.0
남자	7.3	26.7	43.8	19.9	2.2
여자	9.7	31.3	38.9	18.1	1.9
계(2002)	6.6 ¹⁾	32.9	41.5	16.9	2.2
남자	5.0	27.8	46.3	18.5	2.4
여자	8.1	37.6	37.0	15.3	1.9
계(2006)	6.8	29.4	40.4	19.5	4.0
남자	5.4	24.4	44.2	22.0	4.4
여자	8.1	34.5	36.8	17.0	3.6

주: 1) '이혼은 하는 것이 좋다'와 '반드시 해야 한다'의 문항을 합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1998,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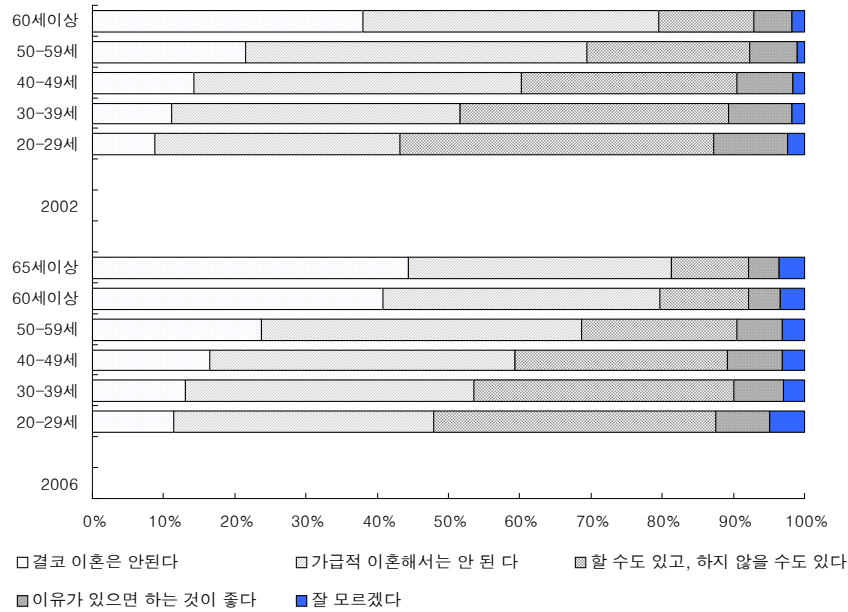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1998년, 2002년 및 2006년 사회통계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지난 8년간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5% 가량이 이혼을 생

애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으로 보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전체 60%가 약간 넘는 응답자들이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에서 보는 것처럼, 비교한 세 시점에서 이혼에 관한 태도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다만 2002년의 경우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전체의 40%에 육박하여 30% 중후반대에 머물렀던 1998년이나 2006년과는 차이가 있었다. 실제로 2002년에서 2003년은 조이혼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정점에 도달하였던 시기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지난 8년간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남성보다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문항에 응답률이 높았고 반면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응답하는 비율은 더 낮았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세 개 년도에서 모두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다만 2002년에는 여성의 경우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의 비중이 1998년과 2006년에 비해 조금 더 늘어난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3]은 이혼에 대한 태도의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이 그림에서 2006년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2002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현저하게 많아졌다. 이에 비해 20대나 30대 연령층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거의 50% 가량이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비록 이들도 2006년에는 2002년에 비해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조금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변화폭은 60대 연령집단과 비교해보면 크지 않았다. 전반적으로는 이혼에 대한 견해가 2006년에 보다 부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주로 나이든 연령에서 주도한 것이고 젊은 연령층에서는 이혼에 대한 태도가 그보다는 더 허용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 이혼에 대한 태도의 연령집단별 차이, 2002, 2006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2, 2006.

극히 최근에 수행된 이혼에 대한 태도 연구들은 부부간의 정서적인 문제가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이혼태도가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이현송, 1999; 한경혜 외, 2003). 또한 이혼을 둘러싼 과정에서 더 이상 자녀가 이혼억제 요인으로서 작용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녀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리의 이혼현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이다. 개인에게 충분히 보상적이지 않은 결혼은 해체될 수 있다는 태도가 우리사회에 이미 상당 정도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조이혼율이 2003년의 정점에서 약간씩이나마 낮아지는 추세와 함께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도 강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이 ‘즉흥적인 이혼’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혼에 관한 태도의

연령별 차이에서 드러나듯이, 본격적으로 결혼과 부모됨을 겪는 20대에서 40대 중반의 연령층에서는 이혼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의 비율이 2000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도 가족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가족의 안정성과 부모역할의 연기나 포기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짐작된다.

제 2 절 초혼연령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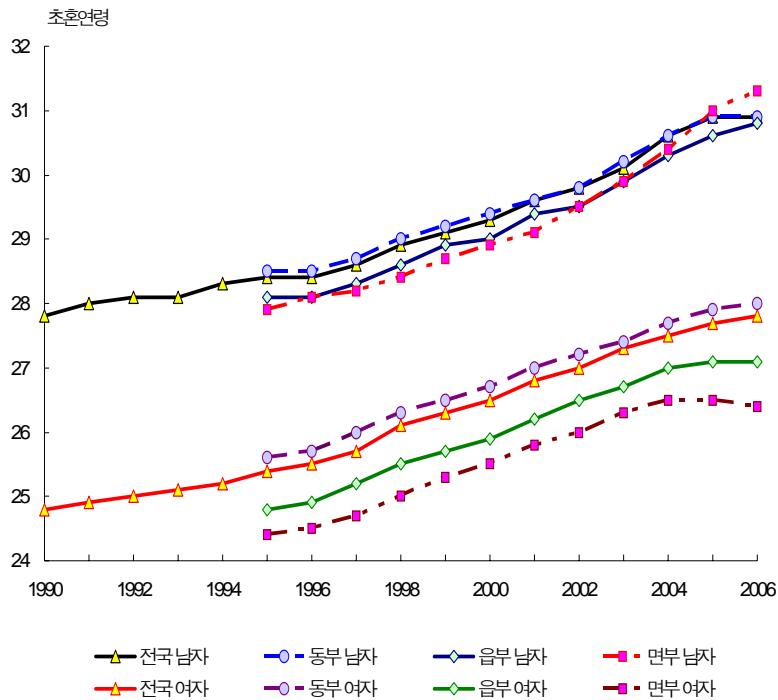
한국의 출산력변천 과정에서 초혼연령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은 앞에서 이미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혼외출산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는 초혼연령, 특히 여성의 초혼연령이 출산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김두섭, 2005; 김태현 외, 2005). 지난 1990년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24.8세였으나 1997년에는 25.7세, 1998년에는 26.1세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27.8세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초혼연령 역시 1990년 27.8세에서 1997년 28.6세, 그리고 1998년에 28.9세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에는 30.9세로 집계되었다(그림 3-4 참조).

초혼연령을 거주지에 따라 살펴보면, 동부에 거주하는 남성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반면 읍부와 면부 거주자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2004년 이후부터는 면부에 거주하는 남성들의 평균 초혼연령이 빠르게 상승하여 전국 평균을 웃도는 현상을 나타낸다. 반면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동부 거주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다음으로 읍부와 면부의 순서로 나타난다. 거주지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의 차이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더불어 첫 출산연령과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도 감지

되었다. 즉 20대 여성의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반면,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약간이나마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나는 것이다. 초혼연령 상승의 원인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관 변화와 더불어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 및 청년실업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김두섭(2005)은 여성의 초혼연령이 1997년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이 절에서는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위기 전후의 초혼연령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4] 거주지별 평균초혼연령, 1990~2006



자료: 해당연도 동태통계자료(혼인).

1. 경제위기와 초혼연령의 변화

경제위기 전후의 초혼연령을 비교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집단을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과 1997년 및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로 구분하였다. 초혼연령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결혼상태에 관계없이 ‘첫 번째 결혼한 연도’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대상인 20~44세 기혼여성 3,802명 중 1997년 이전에 결혼한 경우가 2,463명(약 65%)이었고, 1997년 및 그 이후에 결혼한 경우가 1,339명(35%)으로 집계되었다. <표 3-5>에 제시된 것처럼,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응답자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3.6세이며, 1997년 및 이후에 결혼한 응답자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6.2세로 계산되었다. 이는 응답자의 출생코호트나 구체적인 결혼연도와는 상관없이 1997년을 기준으로 이분하여 살펴본 것이다. 그러면 결혼시기를 1997년을 기준으로 이분한 집단 내에서 응답자의 출생코호트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3-5> 결혼시기와 출생코호트에 따른 초혼연령

결혼시기	출생코호트	평균 초혼연령	전체 평균 초혼연령
1997년 이전	1960년대 출생	23.9	23.6
	1970년대 출생	22.4	
1997년 및 이후	1960년대 출생	31.6	26.2
	1970년대 출생	25.8	
	1980년대 출생	2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표 3-5>에는 결혼시기에 따른 출생코호트의 분포와 각각의 평균 초혼연령이 제시되어 있다. 즉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총 2,463명을 출생코호트에 따라 살펴보면 1960년대에 출생한 경우가 대다수(약 81%)에 해당하고 1970년대에 출생한 경우가 19%를 차지한다. 반면 1997년 및 이후에 결혼

한 총 1,339명 중에는 1970년대에 출생한 경우가 대다수(약 81%)를 차지하지만 1960년대에 출생한 경우가 약 13%, 1980년대에 출생한 경우가 약 6%로 나타난다. 결혼시기로 구분하여 출생코호트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을 살펴보면,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사람들 중 1960년 출생코호트의 평균 초혼연령은 23.9세로 나타났다. 반면 1970년대에 출생한 이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22.4세이다. 또한 1997년 및 이후에 결혼한 사람들 중 1960년대에 출생한 이들의 평균 초혼연령은 31.6세, 1970년대 출생코호트는 25.8세, 1980년대 출생코호트는 21.3세로 나타났다.

2. 교육수준과 평균 초혼연령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을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는 학력이 가장 낮은 집단과 가장 높은 집단에서 여성이 평균 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김태현 외, 2005). 저학력 여성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증가한 상황에서 결혼 상대자를 찾기가 어려운 것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되었다. 반면 고학력 여성은 교육기간의 증대 혹은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학력이 높은 것이 선호되기 때문에 유사한 조건을 지닌 상대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동태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부의 교육수준별 평균 초혼연령을 살펴본 김두섭(2005, 2007)의 연구에서, 경제위기 이전인 1990년에는 저학력(무학)과 고학력(대졸)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각각 24.5세와 25.0세로 높고 기타 교육수준은 그보다 낮은 23~24세 사이로 집계되었다. 위와 같은 경향성은 1997년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2004년에는 중졸 부인의 결혼연령이 가장 낮고 이보다 학력이 높거나 낮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좌우대칭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 역시 고졸 학력이 가장 낮고 이보다 학력이 높

거나 낮은 경우에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여성에 비해 저학력의 결혼연령이 현격히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성은 1997년 이후에 두드러진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이 결혼시기(1997년 이전 vs. 1997년 및 이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결혼시기에 따른 여성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보다 1997년 및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이 더 높다. 이는 출생코호트의 차이와 교육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6> 결혼시기에 따른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구 분	1997년 이전 결혼	1997년 및 이후 결혼
교육수준		
무학 및 초등학교	2.3	-
중학교	9.3	1.8
고등학교	60.2	47.4
전문대 이상	28.2	50.8
사례수(N)	2,463(100.0)	1,339(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표 3-7> 결혼시기에 따른 남편의 교육수준

구 분	1997년 이전 결혼	1997년 및 이후 결혼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1	1.0
고등학교	47.4	41.2
전문대 이상	45.5	57.8
사례수(N)	2,162(100.0)	1,273(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표 3-6>에서 배우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하여 남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결혼시기에 따라 남성들의 교육수준 역시 높아지는 것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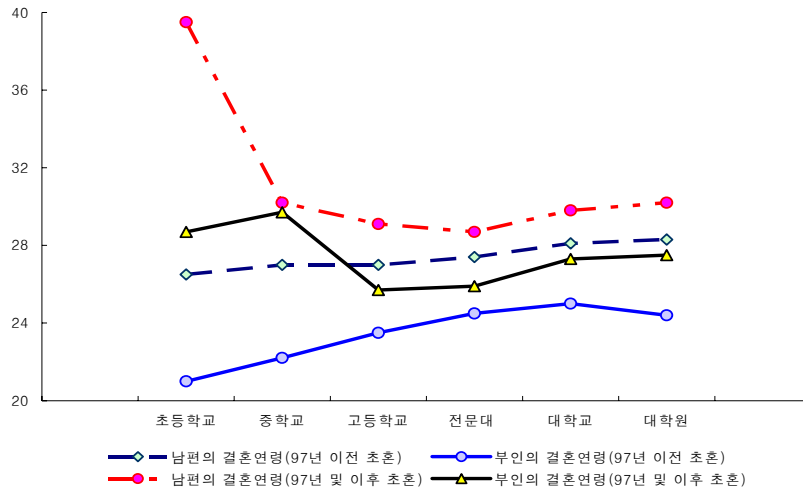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결혼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그림 3-5]와 같다.¹⁾ 결혼시기와 성별에 따라 교육수준과 평균 초혼연령간의 관계는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에 따라 평균 초혼연령이 꾸준히 높아짐을 알 수 있다.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은 대다수가 1960년대 출생코호트임을 고려할 때, 교육수준의 증가가 교육기간의 증대로 이어져서 결혼연령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에 따라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형태가 나타난다.

결혼시기에 따라 비교하면, 1997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과 남성 모두 저학력의 결혼연령이 현격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의 보편적인 향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저학력은 남녀 모두에게 결혼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저학력인 경우는 사례수가 상당히 작음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1997년 이후에 결혼한 사례 중 고학력의 경우 역시 성별에 관계없이 초혼연령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 차이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최근 나타나는 고학력 여성의 만혼현상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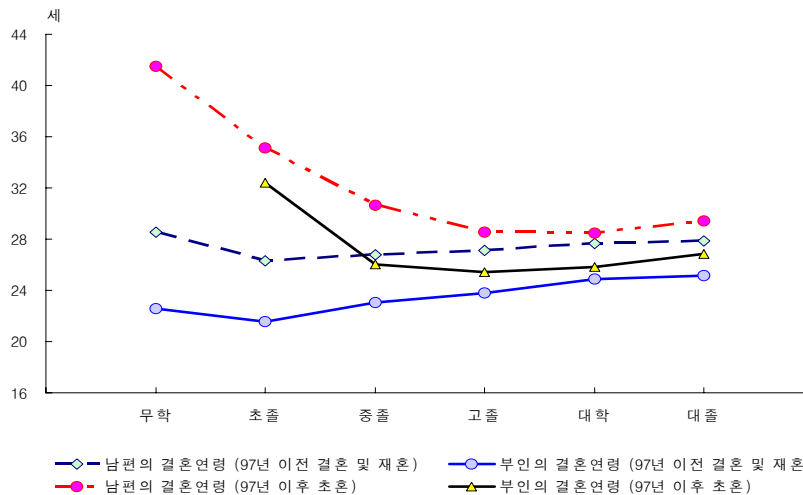
1) 이 연구에서 여성응답자의 초혼연령 분석은 현재의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첫 번째 결혼 당시의 연령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초혼연령 분석에서는 남성이 재혼인 경우와 양쪽 모두 재혼인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사례수의 차이가 난다.

[그림 3-5] 부부 교육수준과 결혼시기별 부부의 결혼연령, 2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6] 부부 교육수준과 결혼시기별 부부의 결혼연령,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3-6]을 살펴보면, 1997년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저학력의 초혼연령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학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약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결혼시기를 1997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을 때 저학력의 초혼연령은 성별에 관계없이 확연히 높아진다. 고학력 역시 초혼연령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3. 취업 상태와 평균 초혼연령

이 연구에서는 결혼당시 여성의 취업관련 특성에 따라 평균 초혼연령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결혼시기에 따라 전반적인 경향성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표 3-8>에는 여성응답자의 결혼당시 취업관련 특성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배우자의 결혼당시 취업관련 특성에 대한 정보는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특성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표 3-8>을 보면, 결혼시기에 관계없이 비취업의 구성비율이 4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취업여성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임시 및 일용직,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순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인 분포는 유사하나 경제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 임시 및 일용직의 분포가 약간 증가하였다.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무직, 농어업 및 단순노무직, 전문 및 준전문직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1997년 및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무직, 전문 및 준전문직, 판매직 순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직종별 분포는 전반적으로 농어업 및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줄어든 것과 최근 여성들이 전문 및 준전문직에 진출이 늘어난 현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당시 여성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결혼연령은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다.

〈표 3-8〉 결혼 당시 여성의 취업관련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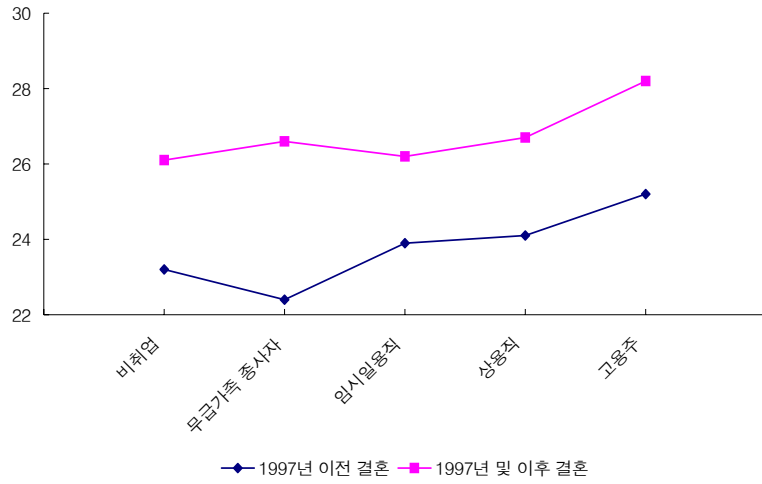
취업관련 특성	1997년 이전 결혼	1997년 및 이후 결혼
종사상 지위		
비취업	42.6	41.2
자영업, 고용주	3.1	2.3
무급가족종사자	2.0	2.1
상용직	43.3	43.4
임시, 일용직	9.0	11.0
직업		
전문, 준전문	10.8	16.3
사무직	26.7	24.2
서비스직	3.8	4.9
판매직	4.2	6.8
농어업 및 단순노무	11.9	6.6
비취업	42.6	41.2
사례수(N)	2,168	1,27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결혼당시 여성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평균 결혼연령을 살펴보면, 결혼 시기에 관계없이 고용주 및 자영업자의 연령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혼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7년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결혼연령이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반면 1997년 및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결혼연령이 기타 종사상 지위를 점유하는 여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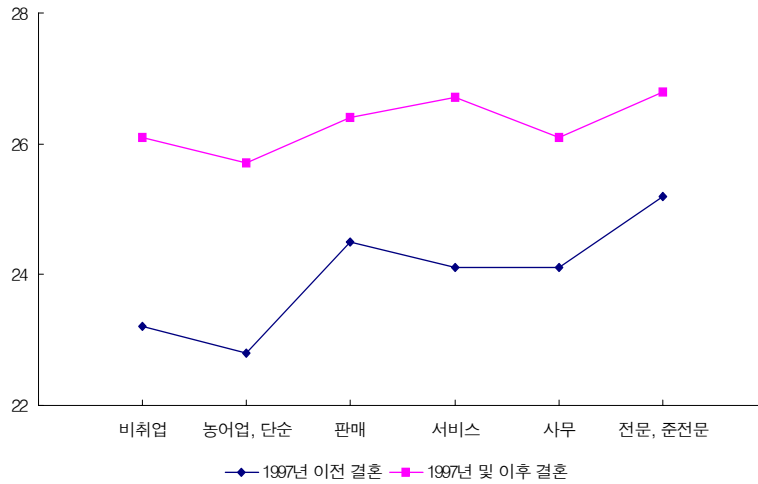
[그림 3-8]에서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시기에 관계없이 전문, 준전문직 여성의 결혼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지난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하여 1997년 및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여성의 취업 여부나 직업에 따른 결혼연령의 차이가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비취업과 농어업 및 단순직 종사자의 결혼연령이 기타 직종에 비하여 현격히 낮았다.

[그림 3-7] 결혼당시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평균 초혼연령, 2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8] 결혼당시 여성의 직업별 평균 초혼연령, 2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반면 1997년 이후에는 판매, 서비스, 전문 및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결혼연령이 비취업, 농어업 및 단순직, 사무직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날 뿐이다. 여성의 취업관련 특성과 초혼연령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제 3 절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행위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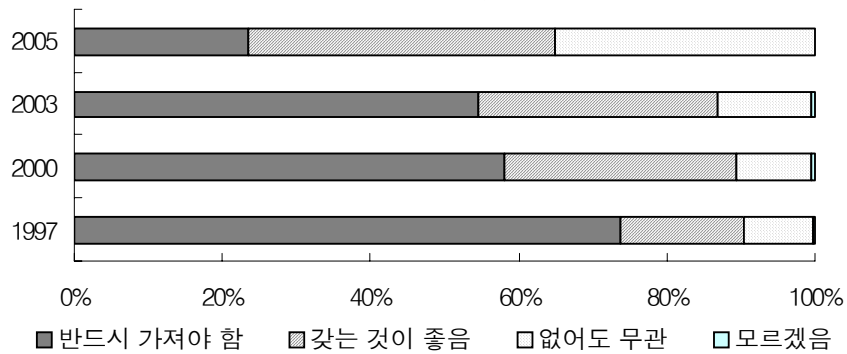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초저출산이 이루어지는 최근의 추세와 출산행태에서의 계층적 차별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녀의 가치 및 자녀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 간 한국사회에서는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였다. 백(1987)은 부모역할이 자아를 이해하고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하는 문화적 기류와 연관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부모에 대한 비용과 부담에 대해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부모역할이 자아형성의 중심이 되고, 부모역할에 더 매몰되는 상호 모순되는 경향이 동시에 관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녀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개인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혹은 개인의 부모역할의 질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령, 서구사회에서는 부모역할 비중의 확대가 특히 중간층과 상층계급을 중심으로 더 강해지는 특성이 발견된다고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 및 자녀에 대한 태도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른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특히 둘째 자녀 출산을 둘러싸고 어떠한 심리사회적 요소들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맞물려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자녀출산 및 부모역할의 보상과 비용의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출산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부모역할과 자녀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자녀의 필요성, 이상자녀수 그리고 자녀의 효용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먼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자녀의 필요성을 묻는 동일한 응답에 대해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1997년 73.7%에서 2005년 23.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이삼식 외, 2005a). 반면에,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1997년 9.4%에 머물던 것이 2005년 조사에서는 35.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체로 찬성 한다’는 중도적 태도는 1997년 16.6%에서 41.5%로 증가하였다(그림 3-9 참조). 대부분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들 조사에서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줄고 중도적 혹은 자녀 출산의 당위성에 반대하는 응답이 증가한 것은 결혼과 자녀 출산의 연계가 상당히 약해졌음을 시사한다.

[그림 3-9]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변화, 1997~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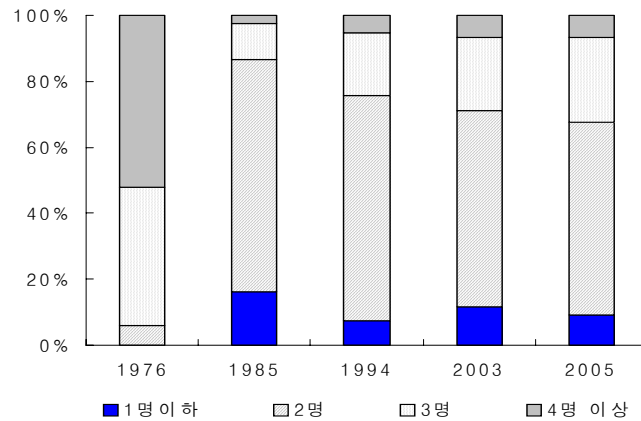


주: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찬성하는 경우는 ‘반드시 가져야 함’으로, 대체로 찬성은 ‘갖는 것이 좋음’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자녀의 수에 대한 태도를 묻는 이상자녀수를 보게 되면,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2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58.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명(25%), 1명(9.0%)이다. 이상자녀의 수에 대한 응답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살펴본 분석결과는 [그림 3-10]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수준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에 비하면, 이상자녀수에서는 많은 수의 자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금은 모순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10] 유배우 부인의 이상자녀수 변화추이, 1976~2005



자료: 이삼식 외(2005b:255).

[그림 3-10]을 자세히 보게 되면, 최근 3년간의 자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이상자녀수를 3명으로 응답한 경우가 약간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비해 자녀 1명 이하에 대한 응답 경향은 1985년 이후 1994년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2000년 이후에는 답보상태에 있다. 앞서 살펴본 자녀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동일기간 내에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이상자녀수를 3명이라는 응답이 약간 증가하는 점에 대해

이상자녀수가 증가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응답자들이 최근의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나 정부에서 출산율의 심각성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저출산 현상으로 개인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상이한 개인들이 자녀의 필요성 및 이상자녀수를 다르게 응답한 결과가 평균값에 희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즉, 이상자녀수를 3명으로 인식한 집단과 이상자녀수를 1명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성격이 차별적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이러한 결과는 개개인의 인식 수준에서의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부모역할 경험에서의 양가성(ambivalence)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가시화되면서, 이상자녀수는 높게 책정하면서도 자녀의 필요성은 부정적으로 인식한 결과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적정자녀수는 자녀의 필요성의 수준과 이상자녀수의 중간지대에서 협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상자녀수보다 현실적으로 갖게 될 자녀의 수가 훨씬 더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출산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분석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이상자녀수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것이다. 이 두 문항만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것은 현상을 단순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는 자녀 효용의 가치를 7문항(4점 척도)에 걸쳐 질문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한 결과를 <표 3-9>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녀효용의 가치는 당위적 가치, 정서적 가치의 두 요인으로 묶일 수 있었는데, 부모의 자유제약에 관한 문항은 정서적이나 당위적 가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따로 구분하였다.

〈표 3-9〉 자녀의 효용가치에 대한 문항들 간의 요인분석 결과

구 분	요인 1	요인 2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이 가치 있는 일이다	0.054	0.851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해 준다	0.068	0.875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0.323	0.613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0.634	0.078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	0.635	0.306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이 당연하다.	0.761	0.028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0.674	0.065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의 자유가 희생되지는 않는다.	0.431	0.12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녀효용가치를 당위적·도구적 가치, 정서적 가치 그리고 부모자유의 제약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가치를 높게 지각한다고 보았다. 부모의 자유에 대한 항목은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높도록 척도를 구성하였다.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가족을 구성함에 있어 자녀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경제적, 도구적인 도움이 된다는 데 대해 응답자들은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다(표 3-6 참조). 당위적·도구적 가치에 대한 응답자 평균은 척도의 중간값에 근사한 9.35였다. 자녀가 정서적인 위안의 대상이며 부모역할은 그 자체로서 생의 보람이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수준은 척도의 중간값을 웃도는 10.31였다.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는 평균값이 2.5로 척도의 중간값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역할의 비용을 어느 정도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당위적 가치나 자녀의 비용에 대해서는 중도적인 입장인데 비해 정서적 가치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표 3-10>에 제시된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는 비용적 측면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F=7.66, p<.001$). 즉, 20대와 30대는 40대 기혼 여성에 비해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다만, 자녀에 대한 당위적 가치나 정서적 가치와 같은 부모역할의 긍정적 측면에서는 연령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10〉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에 대한 효용가치

(단위: 평균, 표준편차)

구 분	당위적 가치 (점수범위: 4~16)	정서적 가치 (점수범위: 3~12)	부모자유제약 (점수범위: 1~4)
전체	9.35(2.23)	10.31(1.51)	2.52(.78)
연령	($F=3.09$)	($F=0.78$)	($F=7.66$)
20대	9.46	10.33	2.51
30대	9.28	10.32	2.56
40대	9.48	10.24	2.43
교육수준	($F=15.40$)	($F=3.74$)	($F=24.73$)
고졸이하	9.47	10.35	2.47
전문대졸 이상	9.16	10.24	2.61
소득수준	($F=3.1$)	($F=5.07$)	($F=3.74$)
하위 20%	9.46	10.18	2.46
중간집단	9.37	10.30	2.54
상위20%	9.18	10.48	2.5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태도 차이를 살펴보면, 학력이 낮은 집단이 고학력 집단보다 자녀에 대한 당위적, 도구적 가치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학력이 낮은 집단은 고학력 집단에 비해서 정서적 가치 역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부모자유를 제약한다는 부모역할의 비용에 대해서는 고졸 이하의 여성들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당위적, 정서적 가치와 같은 긍정적 효용에 대해서는 더 높게 지각하는 반면,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하는 비용의 측면은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와는 유사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자녀의 당위적이고, 도구적인 가치는 더 낮게, 반면에 부모역할의 의미와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해서는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높은 소득집단은 낮은 소득집단보다도 부모자유 제약의 비용 측면을 강하게 지각하는 응답경향을 보였다. 소득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은 자녀를 당위적, 도구적인 가치로 인식하는 성향이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이들은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해서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보다 동의하는 수준이 낮았고, 부모자유를 제약한다는 인식도 다른 소득집단들에 비해 높지 않았다.

이에 다음에서는 소득 및 교육계층에 따라 둘째 자녀 출산계획 여부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자녀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추가자녀 출산계획

기혼여성들의 첫 출산의 시점은 결혼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결혼 코호트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의 추세는 결혼시기의 지연과 함께 첫 출산을 이루는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결혼으로 이행한 조사대상자 3,800명 가운데, 실제로 첫째 자녀 출산을 이행한 비율은 3,530명으로 전체의 92%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2005년 현재 20~44세 사이의 기혼여성 중에서 첫 출산을 하지 않은 비율은 7.2%에 불

과하다. 이들 무자녀 상태인 기혼여성들 가운데서도 전체의 87.1%는 추가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산행위 및 첫째 출산계획의 분포로 볼 때, 초저출산을 겪고 있으나 첫 출산 자체는 여전히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김정석, 2007).

첫째 자녀 출산과 둘째 자녀 출산은 상이한 사회경제적 원인과 가족 차원의 전략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시경제이론의 관점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가 주는 효용과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여 가족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자녀 출산을 결정한다. 특히, 첫 출산에 비해 둘째 자녀 출산부터는 그 행위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cost-benefit)의 사교가 많아진다. 김정석(2007)은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보상과 비용에 대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첫째 자녀 보다는 둘째 자녀의 경우에 더 극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둘째 자녀 출산계획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가족경제의 안정성, 양육보조자의 존재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존의 경제적 관점의 논의를 지지하였다.

연령이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자녀 출산을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단일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부담감²⁾, 부부간의 자녀양육에 대한 의견차이, 자녀에 대한 태도도 추가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성들은 그 자체로서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인구학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복합적으로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

2) 벡(1987)은 후기산업화사회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단절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자신이 중심을 차지하고 유동성, 독립, 자립과 같은 적극적인 인생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속과 강요는 부모역할을 경험하기 이전보다도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삶에서의 다양한 제약과 갈등을 경험한 이후에 더 극명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소규모 면접자료에 의거하여 추가자녀 출산에 대한 부부의사결정의 차이를 살펴본 천혜정(2005)의 연구결과는 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천혜정(2005)의 연구에서는 추가자녀 출산에 대해 ‘남편과 부인 모두 원하지 않는다’는 경우와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은 반대’와 같이 추가자녀를 대체로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추가자녀를 원하지 않는 가족이 지적한 주요 원인은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는데, 흥미로운 점은 남편만 추가자녀를 원하고 아내는 반대하는 경우 부부갈등 수준도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들이 추가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은 경제적 부담만을 지각하는 가족보다도 그 확률이 더 낮았다. 이는 경제적인 부담이외에도 부부의 관계적인 요인,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남편의 관심이나 도움에 대한 부부의 의견 차이가 추가자녀 출산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사회적 상황과 자녀출산 특히 둘째 자녀의 출산을 살펴본 실증연구는 그 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 중에서 7세 이하의 자녀를 1명 둔 544명 여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들의 추가자녀 계획 여부와 관련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자녀에 대한 가치(요인분석 결과 도구적 가치, 정서적 가치, 부모자유계약으로 구분됨)는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자녀양육의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첫째 자녀와의 터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첫째 자녀의 연령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첫째 자녀 양육에서의 부담을 경제적 및 시간적 부담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 사교육비와 영유아 보육료, 자녀돌봄의 공평분담 정도, 부인의 하루평균 가사노동 및 자녀돌봄 시간, 남편의 경우 주말

평균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남편의 경우 하루평균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이 절대적으로 작고, 그 분산도 매우 작았기 때문에 하루평균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보다는 주말시간 활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분석결과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첫째 자녀 연령이 7세 미만이고 자녀를 한명 둔 기혼여성들의 둘째 자녀 출산계획과 그 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다(표 3-11 참조). 우선 7세 미만의 자녀를 한 명 둔 기혼여성 544명 중에서 둘째 자녀를 출산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0.9% 이었다. 반면에 둘째 자녀 출산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녀 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혼여성 가운데, 66.8%는 둘째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의 성을 구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반면, 32.5%는 자녀 성을 구별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이때 희망하는 자녀의 성은 아들은 원한다는 응답이 53명으로 딸을 원한다는 응답보다 약간 더 많았다. 둘째 자녀를 계획함에 있어서 시가 혹은 친정부모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해 전체의 60.3%는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양가 부모님이 혹은 한쪽 부모님이라도 자녀양육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성은 39.7%였다. 한편, 첫째 자녀 이후 둘째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들은 제1 순위로 '경제적 이유(예. 자녀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41명, 소득이 낮아서: 27명)'를 지적하였고, 이는 응답자의 거의 절반가량이 이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난 것이 가치관에 관한 항목(계획한 만큼 아이를 다 낳아서: 15명,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9명)이 합쳐서 전체의 19.7%를 차지하였다.

<표 3-11> 한 자녀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계획 유무에 대한 기술분석
(N=544)

구 분	둘째 계획 있음	둘째 계획 없음
성별 구별 여부		
아들·딸 구별 없이	185 (66.8)	-
구별해서	90 (32.5)	-
모르겠다	2 (0.7)	-
부모님(양가포함) 도움 기대		
도움 기대	110 (39.7)	-
도움 기대하지 않음	167 (60.3)	-
추가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경제적 이유	-	106 (51.0)
사회적 이유(보육 및 사회적 차별)	-	22 (10.6)
가치관(자녀양육 및 출산의 비용)	-	41 (19.7)
가족 및 부부불화	-	2 (1.0)
건강문제(예. 불임)	-	20 (9.6)
기타	-	17 (8.2)
사례수	277 (50.9)	267 (49.1)

주: 결측값으로 인하여 개별 변수의 사례수에서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사회적 이유에는 ‘자녀를 돌볼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15명), ‘본인의 사회생활에 방해’(4명)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응답자의 10.6%가 지적하였다. 소수의 의견으로 건강문제도 9.6%로 꽤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부부 불화, 불안정한 부부관계 때문에 둘째 자녀 출산을 미루고 있다는 응답은 1%대로 극소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첫째 자녀를 이미 둔 사례들을 중심으로 분석에 활용된 독립변수들의 전반적인 분포와 둘째 자녀의 출산계획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12>에서 제시되어 있다. 둘째 자녀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을 보게 되면 20대와 30대 여성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다. 즉 20대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웠다.

〈표 3-12〉 한 자녀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계획 유무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N=544)

구 분 N	둘째 계획 있음		둘째 계획 없음	
	277	(50.9)	267	(49.1)
연령				
20대	137	(65.9)	71	(34.1)
30대	137	(42.6)	184	(57.4)
40대	3	(20.0)	12	(80.0)
소득수준				
하위 20%	58	(46.8)	66	(53.2)
중간집단	163	(53.3)	140	(46.7)
상위 20%	56	(47.9)	61	(52.1)
교육수준				
고졸 이하 학력	112	(50.0)	112	(50.0)
전문대 이상 학력	165	(50.0)	165	(50.0)
취업 여부				
취업 여성	90	(46.2)	105	(53.8)
비취업 여성	187	(53.6)	162	(46.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반면에 둘째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30대와 40대 비중이 20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둘째 자녀 계획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표 3-12>에서 둘째 자녀 계획 여부가 소득 및 교육수준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에 따른 둘째 자녀 출산계획의 차이는 소득수준이 중간에 해당하는 집단이 상위 20%나 하위 20%에 해당하는 집단보다도 둘째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교육수준에 따른 둘째 자녀 계획여부의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고졸 이하 학력자 및 전문대 이상 학력자 모두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둘째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둘째 자녀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비취업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지만, 이는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3-13>은 이들 두 집단이 자녀에 대한 태도 및 자녀양육의 비용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여성들은 모두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만, 둘째 자녀의 출산계획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태도나 자녀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에 대한 인식은 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3-13> 한 자녀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계획과 관련 특성

구 분 N	(N=544)			
	둘째 계획 있음		둘째 계획 없음	
	277	(50.9)	267	(49.1)
당위적·도구적 가치	9.27	(2.25)	9.00	(2.11)
정서적 가치	10.59	(1.48)	10.17	(1.50)
부모 자유 제약	2.55	(0.81)	2.69	(0.74)
첫째 자녀 평균 연령				
0~2세	173	(62.5)	113	(42.3)
3~7세	104	(37.5)	154	(57.7)
평균 영유아 보육료(만원)	13.04	(19.2)	17.33	(23.12)
평균 사교육비(만원)	.55	(3.79)	3.35	(11.84)
돌봄 분담형태				
남편 및 기타 분담	129	(54.2)	109	(45.8)
부인 전담	148	(48.4)	158	(51.6)
부인의 가사·돌봄 시간 (평일:분)	486.13	(257.81)	424.04	(257.81)
남편의 가사·돌봄 시간 (주말:분)	458.45	(380.36)	409.08	(350.5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둘째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보다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였고, 반면에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데 대해서는 낮게 지각하였다. 둘째 자녀 계획이 있는 경우는 현재 첫째 자녀가 아직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첫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기혼 여성들이 한 달 평균 지출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및 사교육비 평균을

살펴보면, 둘째 자녀를 낳을 생각이 별로 없는 여성들은 둘째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한 여성들보다도 유의미하게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비 및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출수준이 둘째 자녀 출산계획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돌봄의 분담형태를 보게 되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부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형태가 더 많았고, 반면에 둘째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첫째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남편 및 다른 사람과의 공조나 도움을 받는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돌볼 경우, 양육부담이 높아 둘째 자녀 출산을 꺼리게 된다는 기존의 논의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둘째 자녀 출산 여부에 따라 부인의 가사·자녀돌봄 시간, 남편의 가사노동·자녀돌봄 시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개별 변수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태도, 양육비용과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둘째 자녀 출산계획 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가 ‘둘째 자녀 출산을 계획한다’, ‘둘째 자녀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다’와 같은 두 가지 값을 가지므로, 이항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14>의 [모형 1]에서는 이 연구에서 주된 독립변수로 설정한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 태도에 대한 인식, 자녀양육의 경제적 비용 및 시간적 투자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모형 2]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통제된 후에도 이들 자녀 태도 및 양육 관련 특성에서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형 1]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게 되면, 다른 변수들이 모두 통제된 상황에서도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가 부모자유를 제약한다는 생각을 적게 할수록 둘째 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태울이라고 언급되는 ‘3세 태울’을 벗어나면 추가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세라는 터울을 벗어나게 되면 부모는 두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적 비용과 관련해서는 예측된 바와 같이 첫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나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가정은 추가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이는 첫째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볼 때, 추가자녀를 갖는 것이 부담스럽게 작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모형 2]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모델에 포함시킨 이후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둘째 자녀 출산계획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관련성은 김정석(2007)의 연구와 유사한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즉,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여성의 연령과 소득이 둘째 자녀 계획과 연관이 있었고, 교육수준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관련이 있었다.

젊은 기혼여성과 비교해 보면, 나이든 기혼여성이 둘째 자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은 낮았다. 소득이 낮은 집단보다 소득이 중간집단에 해당할 경우 둘째 자녀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소득이 하위 20%와 상위 20% 간에는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간집단과 비교해 보면, 소득수준이 하위 20% 그리고 상위 20% 모두 둘째 자녀 출산을 미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수준은 다른 관련요인들이 통제된 이후에도 둘째 자녀 출산계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는 고졸 이하의 학력자보다도 둘째 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포함되자, 터울에 대한 인식에서의 유의미도가 사라진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자녀에 대한 태도나 자녀양육 관련변수들의 효과는 더 분명해졌다. 먼저, 첫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출과 둘째 자녀 계획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첫째 자녀의 보육비 및 교육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항목에 지출이 많을수록 추가자녀를 계획할 가능성은 낮아지

는 방향이여서 [모형 1]에서와 동일한 결과이다. 소득이 고려된 이후에도 보육 및 교육비 지출이 여전히 유의미한 결과를 낸 점은 흥미롭다.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보육 및 교육비 지출이 추가자녀 출산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모형 1]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던 터울 관련 특성이 [모형 2]에서는 그 연관성이 사라진 것은 아마도 기혼여성의 연령과의 상호관련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인식하는 3세 터울을 지키고자 하는 경향은 관찰되지만, 이 자녀 터울에 대한 부담보다도 기혼여성의 연령이 진행할수록, 추가자녀에 대한 출산을 포기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기혼여성의 연령이 둘째 자녀 출산을 가로 막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결혼시기와 첫 출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젊은 엄마’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지향성이 드러난 결과로 생각된다.

자녀에 대한 태도의 경우 정서적 가치 및 부모자유계약의 로지스틱 계수가 커지면서 유의도가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는 부모역할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정서들, 자녀로 인한 가족관계의 유연함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둘째 자녀를 계획할 확률은 높아진다. 반면에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인식이 적을수록 추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높았다. 연령과 소득, 기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이후에도 이러한 가치관의 영향이 유의미하였다는 것은, 둘째 자녀를 계획함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요인의 하나임을 시사한다. 앞에 제시된 <표 3-14>에서 소득계층이나 연령에 따라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계층별 출산행위의 차이를 조금이나마 읽어볼 수 있다. 두 계층 모두 둘째 자녀를 출산할 계획은 소득이 중간계층보다 낮지만 이러한 둘째 자녀 출산계획을 둘러싼 설명요인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3-14> 한 자녀 가족에서 둘째 자녀 출산계획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분석
(N=543)

구 분	종속변수: 둘째 자녀 계획 여부			
	[모형 1]		[모형 2]	
	B	Exp(B)	B	Exp(B)
<자녀태도 및 양육관련 변수>				
당위적·도구적 가치	-0.01	0.99	-0.02	0.97
정서적 가치	0.17 **	1.20	0.20 **	1.22
부모 자유 제약	-0.23 †	0.78	-0.25 *	0.77
첫째 자녀 연령 (준거: 만 0~2세)				
만 3~7세	-0.45 *	0.63	-0.21	0.80
영유아 보육료	-0.01 †	0.99	-0.01 †	0.99
사교육비	-0.06 **	0.94	-0.05 **	0.94
돌봄 분담형태(준거: 남편 및 기타분담)				
부인 전담	-0.25	0.77	-0.31 †	0.73
부인의 가사·돌봄 시간(평일)	0.00	1.00	0.00	1.00
남편의 가사·돌봄 시간(주말)	0.00	1.00	0.00	1.00
<사회인구학적 특성>				
모의 연령(준거: 20대)				
30대			-0.80 ***	0.44
40대			-1.70 **	0.18
소득수준(준거: 하위 20%)				
중간집단			0.53 *	1.71
상위 20%			0.47	1.60
교육수준(준거: 고졸이하 학력)				
전문대 이상 학력			0.32 †	1.38
취업 여부(준거: 비취업)				
취업여성			-0.04	0.96
상수	-1.25	0.28	-1.57 †	0.20
LR. χ^2	56.02		81.04	
d.f.	9		15	

주: † p<.10, * p<.05, ** p<.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소득의 하위계층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우세하게 나타나서, 이들의 둘째 출산의 포기는 그야말로 경제적 사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고 판단된다. 그에 비해 소득의 상위계층은 자녀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을 높게 지각한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둘째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태도와 둘째 자녀 출산 계획에서 드러나는 소득계층 간의 차이는 이후 그들의 차별출산력 분석을 통해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녀를 키우면 보람과 기쁨을 많이 느낄 경우 추가적인 자녀를 계획할 가능성도 높다는 결과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최근의 자녀양육에 대한 담론들이 대체로 자녀양육의 부담과,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위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제로 부모역할의 기쁨이나 생산감(generativity)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지나치게 부모역할의 경제적 부담을 강조하면서 출산축하금, 양육에 대한 현금급여 측면에 집중하는 것만이 저출산 극복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제 4 절 첫 출산의 지연과 출산간격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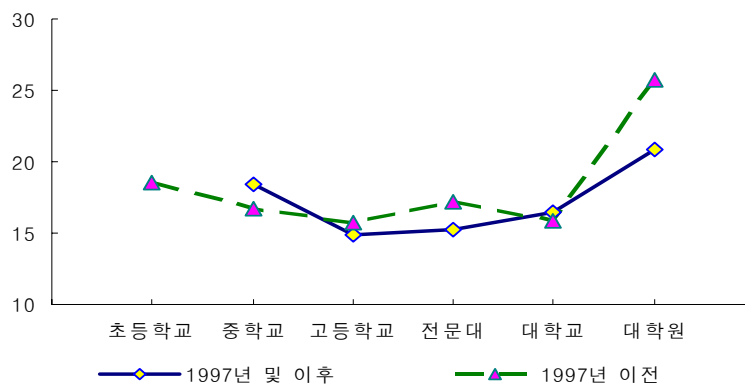
1. 경제위기와 첫째 자녀 출산까지의 소요기간

경제위기를 기준으로 초혼연령 뿐만 아니라 첫 출산간격(결혼으로부터 첫 자녀 출산까지의 간격)도 변화하였다는 논의가 제시된 바 있다. 이 절에서는 경제위기가 첫 출산간격에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기초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평균 출산간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녀를 1명 이상 가진 기혼여성으로 결혼시기를 1997년 이전과 1997년 및 이후로 구분한 결과,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된 평균기간은 거의 유사했다. 즉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여성들이 첫 자녀를 출산하는 데 소요한 시간은 평균 16.1개월이었으며, 1997년 및 이후에 결혼한 여성 역시 약 첫 자녀 출산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15.7개월이었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첫 출산간격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3-11]과 같다. 동일한 결혼코호트끼리 비교하면 결혼 시기에 관계없이 저학력과 고학력 여성이 첫 출산간격에의 소요기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결혼시기를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1997년 및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은 1997년 이전 결혼코호트에 비하여 저학력의 첫 출산간격이 더 길어지고 고학력의 첫 출산간격은 짧아지는 형태를 보인다. 이는 앞서 살펴본 초혼연령의 상승과 어느 정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1997년 및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 저학력의 초혼연령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학력 여성들은 첫 출산에의 소요기간도 길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이 처한 경제적인 현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11]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첫 자녀 출산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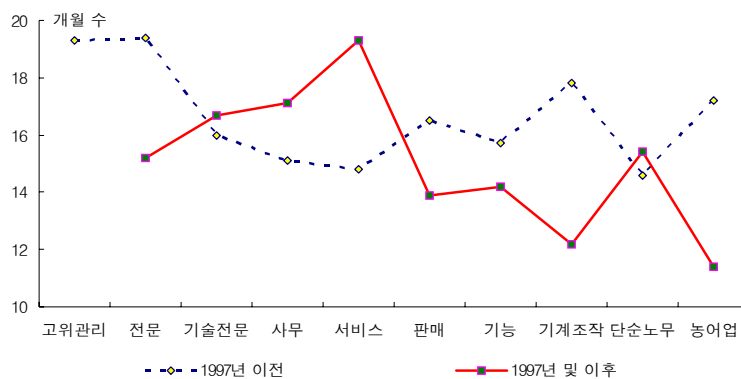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으로는 여성과 그들의 배우자의 직종별로 첫 출산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을 살펴보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유사하다. 즉 1997년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상위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첫 출산간격이 길었다. 반면 1997년 및 이후에 결혼한 경우에는 상위직종들의 첫 출산간격은 짧아지고 사무직,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첫 출산간격이 길게 나타난다. 위와 같은 현상은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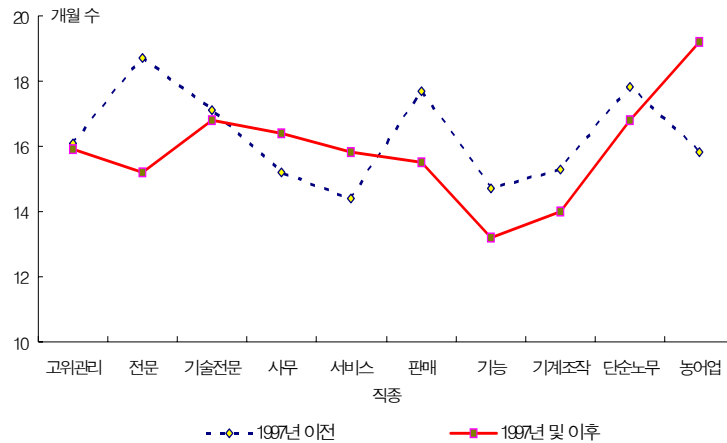
이는 여성의 직업의 안정성이 첫 출산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경제위기 이후에 두드러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의 특성상 비정규직 여성이 많음을 감안할 때, 이들은 출산휴가나 기타 지원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첫 출산을 미루는 반면 전문직은 직업의 안정성과 출산 관련 지원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첫 출산간격이 짧아지는 것은 아닌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3-12] 부인의 직업에 따른 첫 자녀 출산간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13] 남편의 직업에 따른 첫 자녀 출산간격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2. 출산시기와 간격

가. 분석대상 및 방법

이 절에서는 개인의 출산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단면으로 출산시기와 간격을 살펴본다. 출산력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출산의 양(quantum)과 속도(tempo)라고 할 수 있다. 출산시기를 조절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출산포기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력을 낮추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초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산시기와 간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시기와 간격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시간을 종속변수로 한다는 특성에 가장 적합한 생존분석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독립변수 역시 종속변수에 선행하는 특성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조사시점에

서 수집되는 정보인 소득이나 취업상황과 같은 경제적인 특성은 활용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여성의 종사상 지위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이 출산시기 및 간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 관련 변수는 과거에 일어난 행위인 반면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특성은 조사 시점에서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차이는 변수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제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을 제한적으로 선별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분석대상은 결혼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없는 유배우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개인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특성이 결혼 후 자녀가 없는 상태로 지속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두 번째 분석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유배우 기혼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결혼부터 첫째 자녀 출산까지의 간격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첫째 자녀 출산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유배우 기혼여성을 분석대상으로 선별하였다. <표 3-15>에 제시된 것처럼, 분석대상은 각각 228명, 322명, 345명이다.

<표 3-15> 결혼기간 및 자녀수에 따른 세 분석대상 집단

분석대상 1	분석대상 2	분석대상 3
결혼 기간이 5년 이내인 무자녀 기혼여성 (N=228)	최근 3년 이내에 첫째 자녀 출산한 기혼여성 (N=322)	최근 3년 이내에 둘째 자녀 출산한 기혼여성 (N=345)

독립변수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자가 소유 여부,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구체적인 예이다. 종속변수는 분석대상의 평균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이분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분석대상의 경우는 자녀가 없이 지속되는 평균 기간이 약 18개월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가 없이 지속되는 기간이 18개월보다 긴 여성들과 짧은 여성들도 이분하였다. 마찬가지로 결혼부터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 약 20개월을 기준으로 두 번째 분석대상을 이분하였다. 마지막 분석대상은 첫째 자녀 출산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평균 소요기간인 약 41개월을 기준으로 이분하였다.

나. 분석결과

이항 로지스틱분석에 앞서 각각의 분석대상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기간이 5년 이내인 유배우 기혼여성 중 자녀가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자녀가 없는 평균 기간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표 3-16>에 따르면 자녀가 없이 지내는 평균 기간은 약 18개월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20대 여성에 비하여 30대 이상 여성이 자녀가 없이 지내는 평균 기간이 더 길다. 즉 20대 여성은 전체 평균 기간보다 짧은 약 15개월, 30대 이상 여성은 전체 평균보다 긴 약 23개월을 평균적으로 자녀가 없이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가 없이 지내는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기간을 살펴보면,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취업 여성이, 특히 취업 여성 중에서도 일용직이나 임시직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자녀 없이 지내는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경우에 비하여 자기 집이 없는 여성이 자녀가 없는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표 3-16〉 무자녀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결혼기간

구 분	무자녀 여성의 결혼기간(개월)
부인연령	
20대	14.6
30대 이상	23.1
부인 교육수준	
중졸 이하	22.5
고졸 및 중퇴	16.1
전문대졸 이상	15.6
남편 교육수준	
중졸 이하	19.9
고졸 및 중퇴	15.9
전문대졸 이상	18.4
부인 종사상 지위	
상용직	18.4
임시 및 일용직	21.1
비취업	17.2
자가소유	
있음	16.8
없음	19.1
가치관(부모됨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	
찬성	17.8
반대	27.2
전체 평균	18.3
사례수(N)	22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표 3-17>에서 보는 것처럼, 이항 로지스틱분석에서 변수를 순차적으로 추가하였다. 우선적으로 응답자의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의 교육수준만을 포함하여 살펴본 후 경제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와 자가소유 여부를 추가하였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응답자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20대 여성은 30대 이상 여성에 비해 자녀가 없는 기간이

평균 18개월보다 짧아질 확률이 높다. 중학교 중퇴 및 졸업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은 전문대 이상 학력의 여성에 비해 무자녀 기간이 평균 18개월보다 짧아질 확률이 낮다.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와 자가소유 여부를 추가해도 연령과 교육수준의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추가로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령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임시 및 일용직 여성의 무자녀 기간이 평균 18개월보다 짧아질 확률이 낮다. 즉, 임시 및 일용직 여성들은 비취업 여성에 비해 무자녀 기간이 길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

〈표 3-17〉 무자녀 여성의 평균 결혼기간 이항 로지스틱분석 결과

구 분	회귀계수	
부인 연령(준거: 30대 이상)		
20대	0.97 ***	0.99 ***
부인 교육수준(준거: 전문대 학력 이상)		
중졸 이하(중퇴 포함)	-1.10 **	-0.64 *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0.11	0.22
남편 교육수준(준거: 전문대 학력 이상)		
중졸 이하(중퇴 포함)	0.51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0.81	
부인 종사상 지위(준거: 비취업자)		
상용직		-0.47
임시 및 일용직		-0.71 *
자가소유(준거: 없음)		
있음		0.05
LX2	20.89 ***	21.04 ***
-2LL	284.129	283.983
N	228	

주: † p<.10, * p<.05, ** p<.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표 3-18>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첫째 자녀를 출산한 유배우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결혼부터 첫째 자녀 출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약 20개월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의 연령과 종사상 지위는 유사한 방향성을 보였다. 즉 20대 여성은 결혼부터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인 20개월보다 짧게 나타났다.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취업 여성이 전반적으로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게 나타났는데, 특히 임시 및 일용직의 경우가 두드러진다.

<표 3-18>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첫째 자녀 출산까지 평균 소요기간

구 분	결혼 후 첫째 자녀 출산까지 기간 (개월)
전체 평균	19.6
부인연령	
20대	13.8
30대 이상	20.1
부인 교육수준	
중졸 이하	20.9
고졸 및 중퇴	16.9
전문대졸 이상	20.3
남편 교육수준	
중졸 이하	19.2
고졸 및 중퇴	18.2
전문대졸 이상	20.2
부인 종사상 지위	
상용직	20.0
임시 및 일용직	27.6
비취업	18.7
자가소유	
있음	18.5
없음	16.2
사례수(N)	32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반면 자가소유 여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와 반대되는 특성을 보였다. 즉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결혼부터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더 길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 역시 무자녀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의 학력을 지닌 여성들이 저학력이나 고학력 여성들에 비하여 결혼부터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항 로지스틱분석의 결과, 연령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특성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19 참조).

〈표 3-19〉 최근 3년 이내 첫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까지 평균 소요기간

구 분	회귀계수	
부인 연령(준거: 30대 이상)		
20대	0.93***	0.87***
부인 교육수준(준거: 전문대 학력 이상)		
중졸 이하(중퇴 포함)	-0.49	-0.22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0.09	0.09
남편 교육수준(준거: 전문대 학력 이상)		
중졸 이하(중퇴 포함)	0.38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0.29	
부인 종사상 지위(준거: 비취업자)		
상용직		0.02
임시 및 일용직		-0.42
자가소유(준거: 없음)		
있음		-0.22
Lx2	16.38***	16.92***
-2LL	402.121	402.121
N	322	

주: † p<.10, * p<.05, ** p<.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최근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유배우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첫째 자녀 출산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을 살펴보면, 약 41개월로 나타난다(표 3-20 참조). 연령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평균 기간의 차이는 자녀가 없는 여성들과 첫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하다. 한 가지 차이점은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상용직 여성들이 첫째 자녀 출산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표 3-20〉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간격

구 분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간격(개월)
전체 평균	40.5
부인연령	
20대	30.2
30대 이상	41.1
부인 교육수준	
중졸 이하	41.2
고졸 및 중퇴	37.0
전문대졸 이상	42.0
남편 교육수준	
중졸 이하	39.8
고졸 및 중퇴	44.1
전문대졸 이상	40.0
부인 종사상 지위	
상용직	47.4
임시 및 일용직	41.4
비취업	38.9
자가소유	
있음	37.1
없음	36.2
월평균 가구소득	
상위 50%	38.5
하위 50%	42.5
사례수(N)	34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자가 소유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소득 수준을 포함하였다. 소득수준은 분석 대상을 이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경우가 높은 경우에 비하여 첫째 자녀 출산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에 제시된 이항 로지스틱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모형에서는 연령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20대 여성이 30대 이상에 비하여 첫째 자녀 출산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인 41개월보다 짧을 확률이 높다.

<표 3-21> 최근 3년 이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출산간격

구 분	회귀계수	
부인 연령(준거: 30대 이상)		
20대	1.68 ***	1.72 ***
부인 교육수준(준거: 전문대 학력 이상)		
중졸 이하(중퇴 포함)	-0.04	0.07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1.58	0.26
남편 교육수준(준거: 전문대 학력 이상)		
중졸 이하(중퇴 포함)	0.18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0.55	
부인 종사상 지위(준거: 비취업자)		
상용직		0.30
임시 및 일용직		0.72 *
월평균소득(준거: 상위 50%)		
하위 50%		0.35
Lx2	37.39 ***	36.58 ***
-2LL	405.846	406.666
N	345	

주: † p<.10, * p<.05, ** p<.01, *** p<.00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경제적 특성을 추가한 두 번째 모델에서는 연령과 종사상 지위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취업 여성이, 특히 임신 및 일용직 여성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1개월보다 짧을 확률이 높다.

전체 결과를 종합하면, 연령은 모든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즉 20대 여성은 30대 이상에 비하여 무자녀 상태인 기간,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기간, 그리고 둘째 자녀 출산까지의 소요기간이 짧다. 교육수준의 효과는 무자녀 상태인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다. 예를 들면 낮은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이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에 비하여 자녀가 없는 상태인 기간이 길다. 여성의 종사상 지위는 무자녀 상태와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난다. 임신 및 일용직 여성들은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무자녀인 상태나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반면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오히려 둘째 자녀 출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

이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분석대상 자체가 이미 출산을 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중도에 출산을 포기하였거나 중단한 사례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종사상 지위의 효과는 주목할 만하다. 임신 및 일용직 여성들은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첫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반면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첫째 자녀 출산과 둘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비취업 여성에 비하여 짧다. 이 분석에서는 포착할 수 없지만 많은 임신 및 일용직 여성들이 첫째 자녀 출산 이후 둘째 자녀 출산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터울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Bhrolchain(1985)은 영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 위와 유사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출산후

가와 같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임신 및 일용직 여성들이 취업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간의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풀이하였다. 즉 출산 후 복직이 가능한 정규직 여성들은 첫 출산과 둘째 자녀 출산간의 간격을 늘려서 오히려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려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불안정한 직종의 여성들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터울을 단축하여 취업단절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 역시 위와 같은 설명이 한국사회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 5 절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 분석

1. 분석자료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거주지에 따라 출산력 수준에 차이가 있음은 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검증 이미 검증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부인의 교육수준, 도시거주, 남편의 직업위세와 같은 변수들이 출산력 수준과 부적인 관계에 있음을 밝혀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에 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1980년대 중반 이전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출산력이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진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시수준에서 차별출산력에 관한 정밀한 분석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 절에서는 개인의 교육, 직업,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소득, 거주지 등의 특성과 출산수준의 관계의 양상이 최근에 이르러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효과적인 장·단기 출산장려정책과 그 주요 적용대상집단을 찾아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절의 차별출산력 분석을 위해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종류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1) 1990년, 2000년과 2005년에 실시된 인구센서스의 2% 표본

원자료; 2) 1990년, 1997년, 2000년 및 2005년의 동태통계(출생) 원자료;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이 연구는 이들 자료에서 가용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활용하여 차별출산력을 분석하고, 1990년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인구센서스는 인구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널리 사용된다. 인구센서스는 5년의 간격을 두고 실시되기 때문에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며, 차별출산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센서스의 성격상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변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약점을 지닌다. 아울러 두 센서스 기간 사이의 변화 또는 마지막 센서스 이후의 인구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 2000년과 2005년 인구센서스의 2% 표본 원자료에서 20~49세의 기혼여자 각각 147,305명, 159,275명, 145,057명을 추출하여 총출생아수(CEB, children ever born)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출생신고 자료는 표본이 아닌 전수자료(全數資料)이다. 동태통계는 매년 작성되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변화가 심한 사회에서 출산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신고의 목적과 응답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조사항목이 센서스보다도 더 한정된다는 약점을 지닌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출산력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0년, 1997년, 2000년 및 2005년의 네 시점을 선택하여 출생신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 3-22>에는 이들 네 시점의 출생신고 자료로부터 집계된 주요 인구학적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표를 보면, 1997년 이후 출생아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2000년대에 들어와 더욱 급격해졌다. 그 결과, 2005년의 출생아수 43.8만 명은 1990년과 2000년 출생아수의 66.5%와 68.8% 수준에 불과하다. 합계출산율도 1990년의 1.59에서 2000년 1.47, 그리고 2005년에는 1.08로 저하하였

다.3) 이 표에서 부인의 평균 총출생아수가 1990년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은 부부의 평균연령이 현저하게 높아진데 기인하는 현상이다. 또한 이 표는 남녀 모두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결혼연령의 상승은 IMF 경제위기를 겪었던 1997년 이후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출생신고 자료로부터 계산된 주요 인구지표, 1990~2005

구 분	1990	1997	2000	2005
해당 연도 출생아수	658,552	678,402	636,780	438,062
합계출산율(TFR)	1.59	1.54	1.47	1.08
부인의 평균 총출생아수	1.58	1.63	1.66	1.65
남편의 평균 연령	29.7	30.9	31.5	41.6
부인의 평균 연령	26.6	27.8	28.5	31.9
남편의 평균 결혼연령	26.9	27.7	28.2	29.0
부인의 평균 결혼연령	23.8	24.7	25.3	26.3
사례수(N)	658,834	675,500	629,932	438,062

자료: 해당 연도 동태통계(출생) 원자료.

이 연구에서는 인구센서스와 출생신고 자료에서 가용한 변수들이 제한되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들은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인구센서스나 출생신고 자료에 비해서 포함된 사례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약점을 지닌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출산력에 관한 풍부한 정보가 포함

3)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6년 출생신고 잠정집계에 의하면, 2006년의 총출생아수는 45.2만 명으로 2005년보다 1.4만 명이 늘어났으며, 합계출산율도 1.13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잠정집계 결과가 그동안 지속되던 출산력 저하추세의 반전을 의미하는가의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직 2006년 출생신고 원자료가 가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출산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두 조사 자료를 활용한 다음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우선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에서 20~44세의 기혼여자만을 추출한 다음, 이들이 출산한 총출생아수와 1999년 이후의 출생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이 값들이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조직적으로 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출산력의 인과구조에 변화가 초래되었다면,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총출생아수와 1999년 이후 출생아수의 편차가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의 분석도 20~49세의 기혼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1999년 이후의 출생아수를 산출한 결과 그 평균값과 분산이 너무 작아, 이를 종속변수로 하는 차별출산력의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의 분석에서는 최근 출산력의 지표를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로 대체하였다.

〈표 3-23〉 두 조사자료에서 추출된 분석 대상 부부의 연령과 출산력 수준

구 분	2005 출산동향조사		2003 출산력조사	
	20~44세 기혼여자		20~49세 기혼여자	
	평균값	N	평균값	N
부인의 총출생아수(CEB)	1.8	3,433	1.9	6,525
부인의 1999년 이후 출생아수	0.6	3,433	-	-
부인의 1998년 이후 출생아수	-	-	0.4	6,660
남편의 연령	38.6	3,433	41.0	6,660
부인의 연령	35.6	3,433	37.7	6,66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표 3-23>에는 이 두 자료에서 계산된 분석대상 부부의 연령 및 출산수준 지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 20~44세 기혼여자의 평균 총출생아수는 1.8명이다. 이 중에는 1999년 이후의 평균 출생아수 0.6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20~49세의 기혼여자 6,660명이 분석대상으로 추출되었고, 이들의 평균 총출생아수와 1998년 이후 평균 출생아수는 각각 1.9명과 0.4명이다. 부부의 평균 연령은 두 조사자료에서 각각 3세와 3.3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에 포함된 부부의 평균 연령이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분석대상 부부보다 약간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교육과 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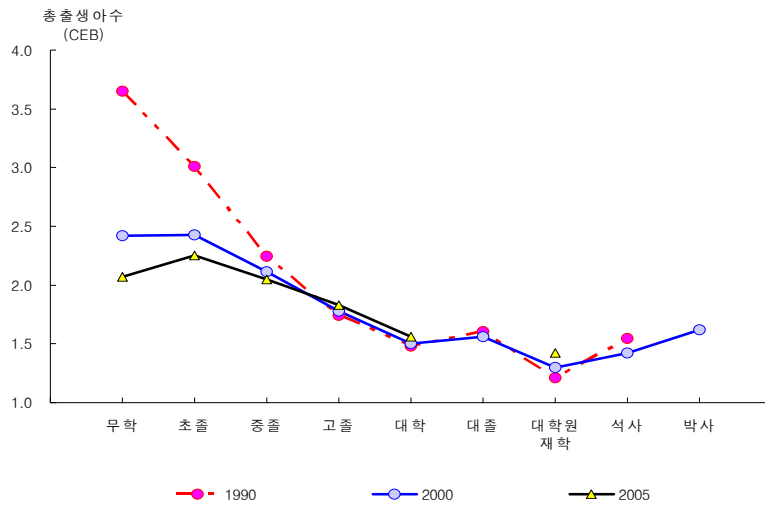
교육수준, 특히 부인의 교육수준은 사회경제적 지표 중에서도 출산수준과 가장 선명하고 직선적인 부(negative)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인의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이 변수를 통제하면 소득이나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한편, 남편의 교육수준은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가구소득의 영향력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1987).

[그림 3-14]는 1990년, 2000년 및 2005년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총출생아수를 제시한 것이다. 센서스 자료에서는 출산력에 관련되는 정보가 어머니에 연결되어 있을 뿐, 아버지와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의 교육수준에 따른 출산력 분석이 어렵다. 이는 특히 부부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재혼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림 3-14]를 보면,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총출생아수가 대

체로 작아지지만,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는 총출생아수가 약간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과 2000년 센서스 자료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5년 센서스에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3-14] 부인의 교육수준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0~2005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1990, 2000, 2005)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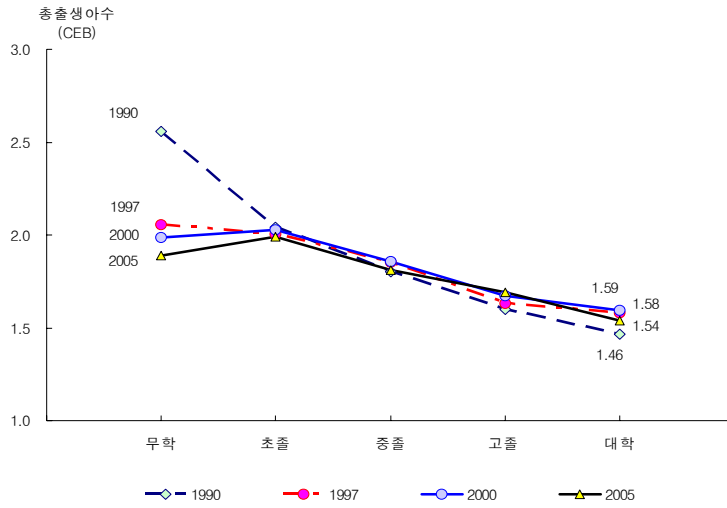
소자녀 지향의 가치관과 아울러 출산억제의 방법과 수단이 사회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출산력이 저하하면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격차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림 3-14]에서도 중학교 졸업 이하의 부인들의 총출생아수가 1990~2005년의 기간에 가장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부인들에게서는 1990년 이후 총출생아수의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초저출산단계로 진입한 것이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인들의 출산력 저하에 기인하는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출산력의 이러한 변화추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와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젊은이들의 결혼시기와 출산력 수준에 미친 과급효과가 저학력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990년대에 이르면 교육수준이 중간이거나 높은 집단의 출산력 수준은 더 낮아지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출생신고 자료는 출생아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관한 정보도 출산력 분석에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림 3-15]와 [그림 3-16]에는 1990년, 1997년, 2000년 및 2005년의 출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총출생아수의 변화추세가 제시되어 있다. 이 그림들을 보면, 부부의 교육수준과 총출생아수는 대체로 선명한 부의 직선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관찰되는 관계의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 단지 [그림 3-16]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출산수준 변화의 폭이 [그림 3-15]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더 컸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두 그림에서 1990년 무학자의 총출생아수가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으나, 무학자의 구성비율이 지극히 작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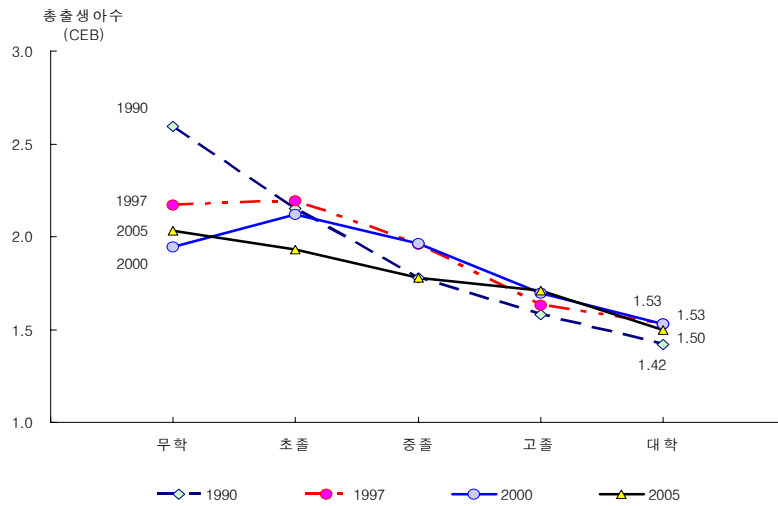
그런데 출생신고 자료를 활용한 [그림 3-16]에서 부인의 교육수준과 총출생아수가 직선에 가까운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그림 3-14]에 제시되었던 바, 센서스 자료의 분석결과와 대비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출생신고 자료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분화되지 않고 모두 같은 범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그림 3-15]와 [그림 3-16]의 중졸 이상의 학력에서 1990년의 총출생아수가 미세하나마 다른 연도보다 작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1990년의 출산력 수준이 더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림 3-15] 남편의 교육수준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0~2005



자료: 『인구동태통계(출생)』 해당연도 원자료.

[그림 3-16] 부인의 교육수준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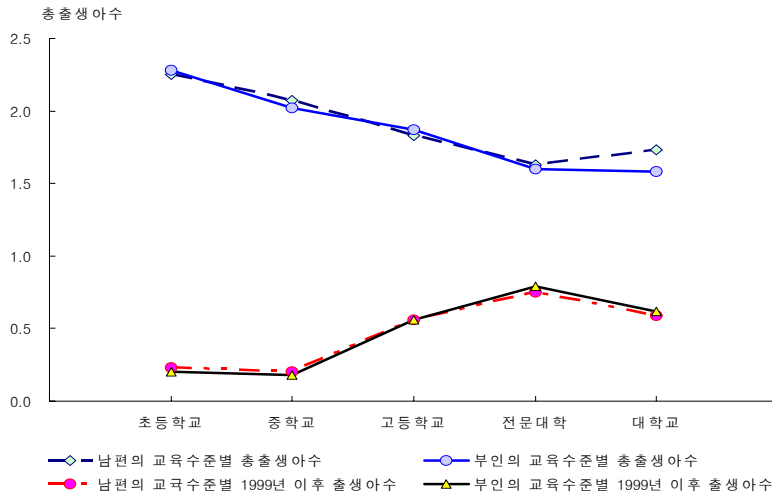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출생)』 해당연도 원자료.

이러한 현상은 이미 <표 3-14>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0년 출생신고 자료에 포함된 부부들의 평균연령이 다른 연도보다 현저하게 낮았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는 최근 출생아수가 부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조직적으로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만약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특정 집단의 출산행위나 그 인과구조에 변화가 초래되었다면, 총출생아수와 1999년(혹은 1998년) 이후 출생아수의 체계적인 편차는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비교분석은 최근의 출산수준이 지극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 편차와 분산(variance)이 매우 작아져 통계적 규칙성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표 3-23>에 제시된 것처럼,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분석대상 집단의 평균 총출생아수는 각각 1.8명과 1.9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두 자료의 분석에서 최근 출산력의 지표로 집계한 1999년 및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는 각각 0.6명과 0.4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총출생아수와 1990년대 말 이후 출생아수의 조직적인 형태변화를 찾아낸다면 이 연구의 주장은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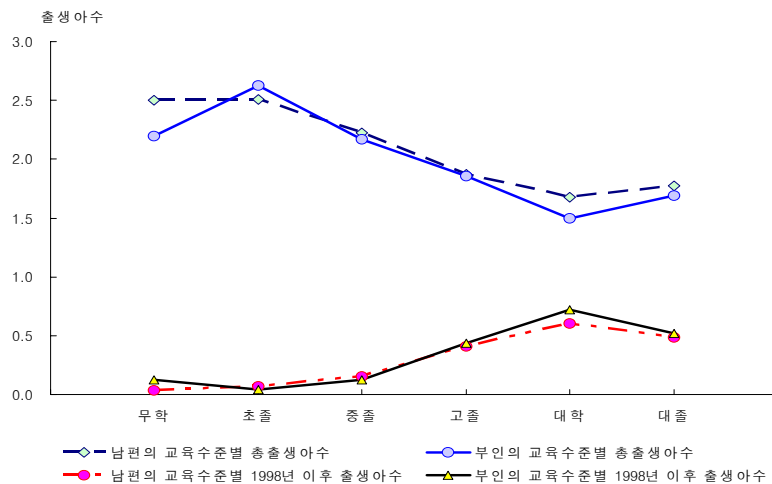
그러면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에서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출생아수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림 3-17]과 [그림 3-18]에서 총출생아수와 최근 출생아수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이 두 그림 모두에서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출생아수는 감소하나,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부부들은 바로 아래 집단보다 총출생아수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남편과 아내의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부부의 교육수준별 평균 총출생아수 및 1999년 이후 평균 출생아수, 2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3-18] 부부의 교육수준별 평균 총출생아수 및 1998년 이후 평균 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3-18]에서 부인이 무학자일 때 초등학교 졸업자보다 총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불과 36명의 사례에 기초하여 집계된 것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교육수준과 총출생아수 간의 이러한 관계는 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그림 3-14]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그런데 [그림 3-17]과 [그림 3-18]에서 1999년 및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는 부부의 교육수준과 전혀 다른 관계의 양상을 보인다. 즉,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최근 출생아수도 증가하다가,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 이르러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 두 그림을 보면, 최근 출산행위를 가장 민감하게 변화시킨 집단은 교육수준이 낮은 부부들이다. 노동시장이 불안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부부들일수록 민감하게 자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부부들도 바로 아래의 학력 집단에 비해서 보다 민감하게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학력이 높거나 상층 집단의 경우에도 교육비와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보다 급격하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이러한 변화양상은 아직 다른 사회나 기존의 연구에서 관찰된 바 없으며,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만약 최근의 이러한 변화양상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교육수준과 출산력의 전반적인 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직업과 출생아수

직업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은 개개인 출산행위의 준거집단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분석은 그 동안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직업이 등간척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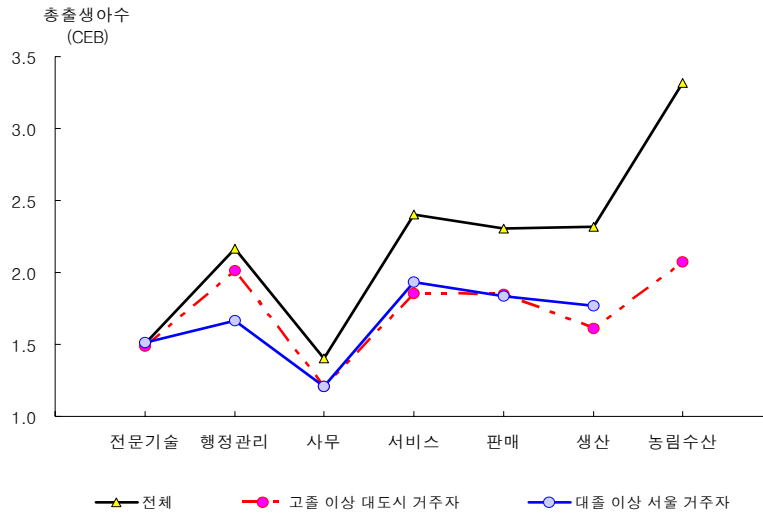
측정하기가 어렵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많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직업분류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어 직업 변수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기존의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직업은 교육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과 교육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양상은 대체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90년, 2000년과 2005년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부인의 직업에 따른 출생아수를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직업분류체계가 두 번이나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직업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1990년 부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위관리직 등 일부 직업범주에는 정밀분석에 필요한 사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3-19]를 살펴보면, 대체로 직업위세가 높아질수록 총출생아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사무직 종사자의 총출생아수가 가장 낮고, 직업위세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전문기술직과 행정관리직 종사자는 출산수준이 사무직 종사자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출생아수의 편차는 학력이 높아지거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일관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고등학교 졸업 이상 대도시 거주자와 대학 졸업 이상 서울 거주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분석을 하여도 사무직 종사자의 출산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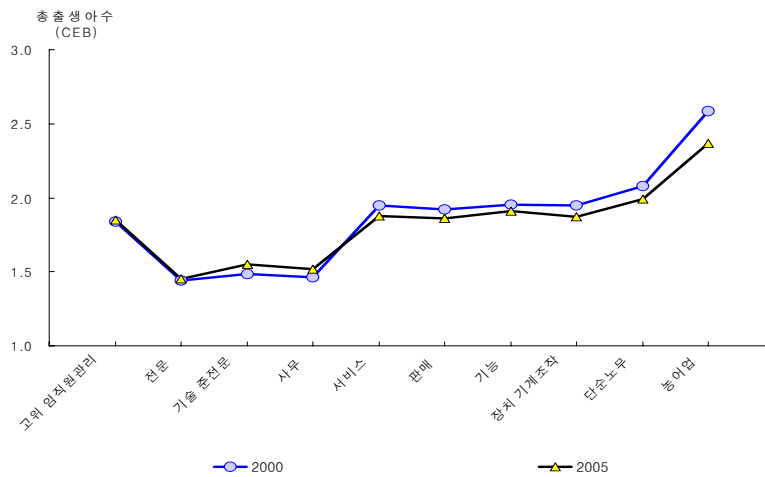
직업과 총출생아수 간의 이 같은 J 자형의 형태는 2000년과 2005년 센서스 자료를 활용한 [그림 3-20]에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났다. 농어업 종사자의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고 사무직 종사자에 이르기까지 직업위세와 출산수준은 대체로 부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3-19] 부인의 직업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0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1990) 원자료.

[그림 3-20] 부인의 직업별 평균 총출생아수, 200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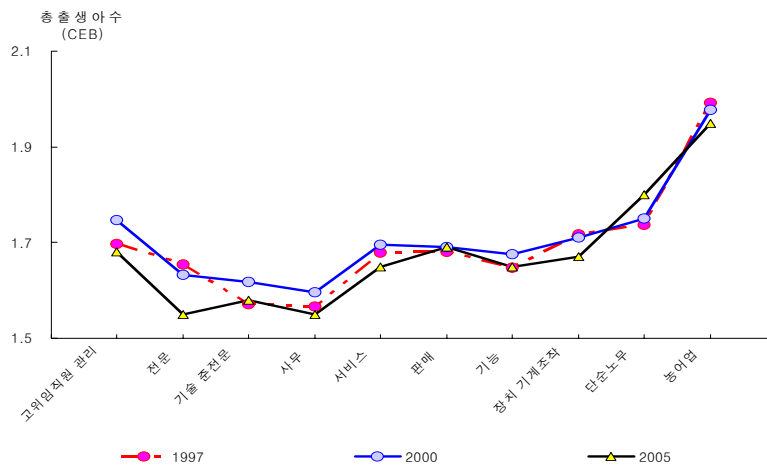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2000, 2005) 원자료.

그러나 직업위세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총출생아수는 차상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의 총출생아수보다 두드러지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이러한 양상은 1997년, 2000년과 2005년의 출생신고 자료를 분석하여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그림 3-21]에서 남편의 직업별 총출생아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태의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직업위세가 높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2000년 총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부인의 직업별 총출생아수의 편차를 [그림 3-22]에서 살펴보면 약간은 다른 관계의 양상이 발견된다. 우선, 서비스직과 판매직 부인의 총출생아수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3-21]에서도 미세하게나마 감지되었으나, [그림 3-22]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훨씬 더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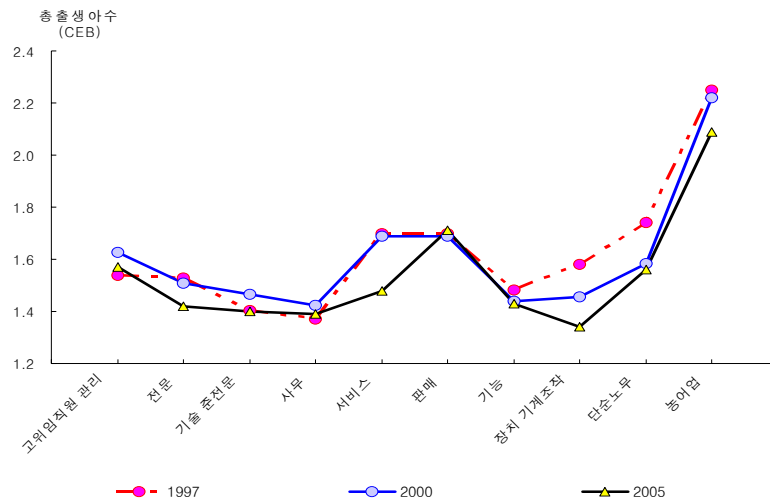
[그림 3-21] 남편의 직업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7~2005



자료: 『인구동태통계(출생)』 해당년도 원자료.

최근에 이르러 서비스직과 판매직이 직업위세와 소득의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직업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에 대한 해석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그림 3-22]에서는 기능직, 장치 및 기계조작 관련직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부인들의 총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2000년과 2005년 출생신고 자료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이들 직업집단의 총출생아수가 1997년 이후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저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서비스직 부인의 총출생아수도 현저하게 저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센서스 자료와 출생신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 발견된 직업과 총출생아수의 관계는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및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에서도 일관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비슷한 형태의 그림 제시를 생략하고, 1999년 및 1998년 이후 출생아수의 분석결과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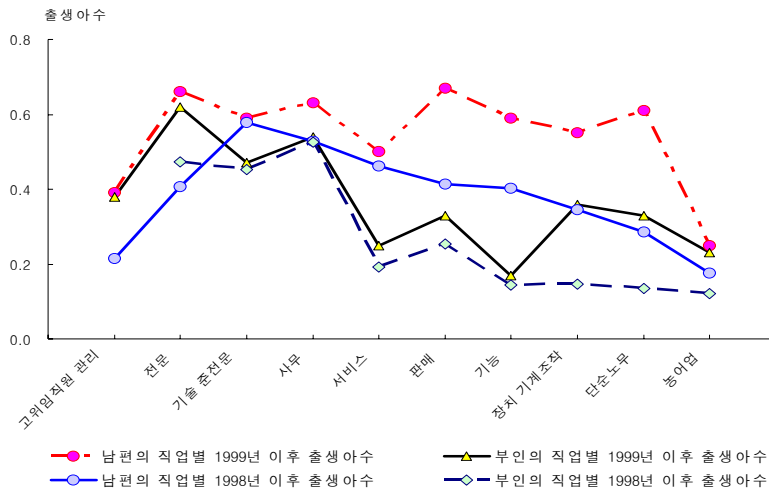
[그림 3-22] 부인의 직업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7~2005



자료: 「인구동태통계(출생)」 해당년도 원자료.

[그림 3-23]에서 1999년 및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는 총출생아수와 전혀 다른 관계의 양상을 나타낸다. 비록 그 관계의 양상이 아주 선명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직업위세가 가장 높은 부부의 최근 출생아수가 차상위 집단보다 오히려 낮고, 직업위세가 낮아질수록 대체로 출생아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이 두 그림에서 발견된다.

[그림 3-23] 부부의 직업별 최근 출생아수, 2003, 20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단지 [그림 3-23]에서 판매직, 기능직, 장치 및 기계조작 관련직,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남편의 경우 1999년 이후 출생아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직과 기능직에 종사하는 부인의 1998년 및 1999년 이후 출생아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부부 직업에 따른 최근 출생아수의 편차가 총출생아수의 편차형태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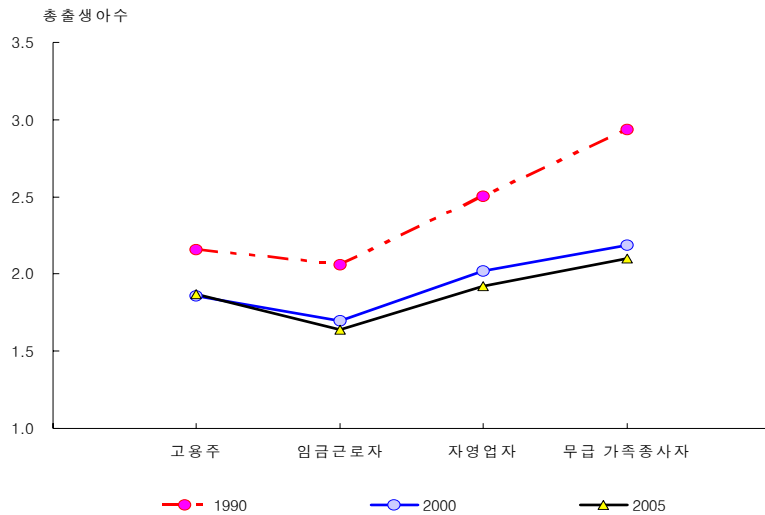
3-23]에서 발견되는 최근 출생아수 편차의 변화양상은 [그림 3-17]과 [그림 3-18]에서 살펴본 바, 부부의 교육수준과 최근 출생아수의 관계 형태와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4. 종사상 지위 및 직장유형과 출생아수

부인의 경제활동과 출산수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의 발전단계와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에 따라서 그 관계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자들은 부인의 경제활동에 따라 출산수준이 달라지는 이유를 흔히 소득효과와 기회비용효과로 설명한다. 사회학적으로는 부인의 경제활동이 모성역할상반(maternal role incompatibility)을 초래하고, 소가족 지향의 가치관과 규범을 내면화하거나 출산조절정보와 수단에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설명된다. 또한, 부인의 경제활동은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출산수준에 따라 경제활동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자녀수가 많아지면 생계비, 자녀 교육비 등을 마련하고자 부인이 경제활동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부인의 경제활동과 출산수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일의 성격, 내용, 장소, 직장유형, 환경 등을 반영하는 종사상의 지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종사상의 지위란 취업자가 일하고 있는 신분과 기능 상태를 지칭하며, 일반적으로 고용주,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의 네 범주로 구분된다.

[그림 3-24]는 1990년, 2000년 및 2005년의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부인의 종사상 지위별 총출생아수의 변화추세를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종사상 지위와 총출생아수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단지 2000년 이후보다 1990~2000년의 기간에 총출생아수가 더 빠른 속도로 줄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3-24] 부인의 종사상 지위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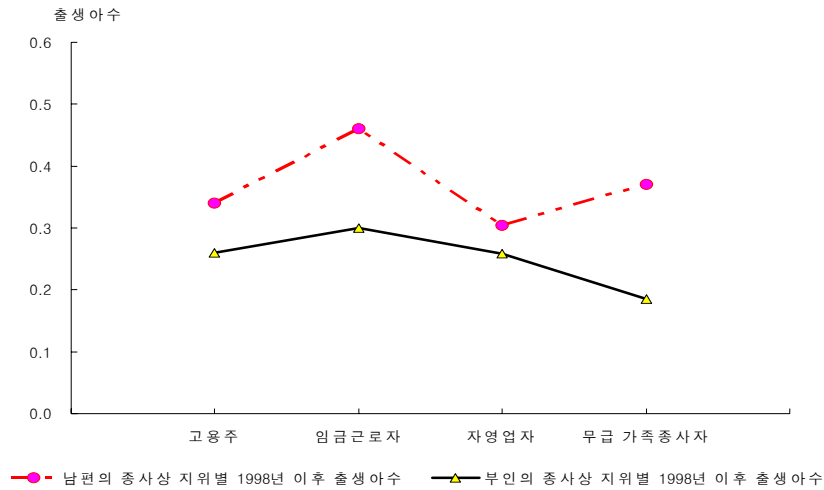


자료: 『인구센서스』 2% 표본(1990, 2000, 2005) 원자료.

그리고 무급 가족종사자의 출산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영업자, 고용주의 순이었으며, 임금근로자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종사상 지위 간에 서열을 매기기는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라고 하여 모두 규모가 작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림 3-24]에서 옆으로 누운 J 자형의 관계가 관찰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부인의 종사상 지위와 총출생아수 간의 이러한 관계는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와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림 3-25]에 제시된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는 총출생아수의 경우와 전혀 다른 관계의 양상을 나타낸다. 즉 임금근로자의 최근 출산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순이었다.

[그림 3-25] 부부의 종사상 지위별 1998년 이후 총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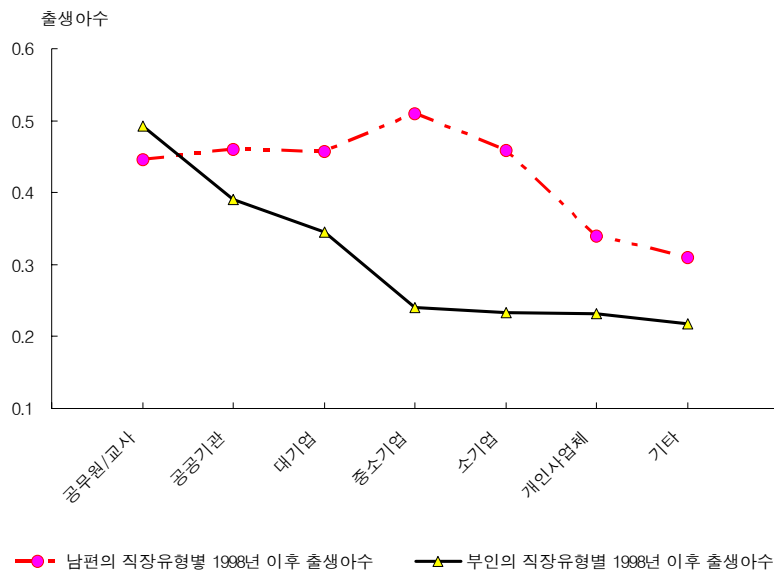
이 그림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인 남편의 경우 출생아수가 높게 집계되었으나, 작은 사례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결국 [그림 3-24]와 [그림 3-25]에 나타난 관계의 양상을 비교해보면, 1990년대 말 경제위기의 파급효과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자 집단에서 자녀수를 줄이고자 하는 동기가 보다 절실했고, 이에 따라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낮아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최근의 출산수준 감소의 폭은 기존의 출산수준과 정비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즉 출산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의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완만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해석은 교육수준이나 직업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지난 1990년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출산력에 심

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림 3-26]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이 그림에서 최근의 출산수준은 부인이 공무원 또는 교사이거나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에 가장 높고, 직장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출산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이르러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이 가장 안정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간주되는 최근의 세태를 반영하는 결과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교육, 직업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별출산력의 양상은 남편과 부인의 속성에 따라 그 관계가 두드러지게 구분되지 않고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림 3-26]에서 1998년 이후의 출생아수를 직장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편과 부인의 속성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 3-26] 부부의 직장유형별 1998년 이후 출생아수, 20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즉, 최근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사업체 종사자의 출산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 종사자의 최근 출산수준이 미세하게나마 가장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직장유형별 출산수준의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직장유형별 차별출산력이 남편과 부인의 속성에 따라 유독 다른 관계의 양상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거주지와 출생아수

출산력의 수준은 부부의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격차는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농촌은 도시보다 출산수준이 뚜렷하게 높다. 지역사회의 생태환경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출산력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널리 인정된다. 그러나 시·군·구 지역사회 수준의 거시적인 요인들이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과 지역적인 편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김두섭, 2007; 유삼현 2006; Kim, 1987).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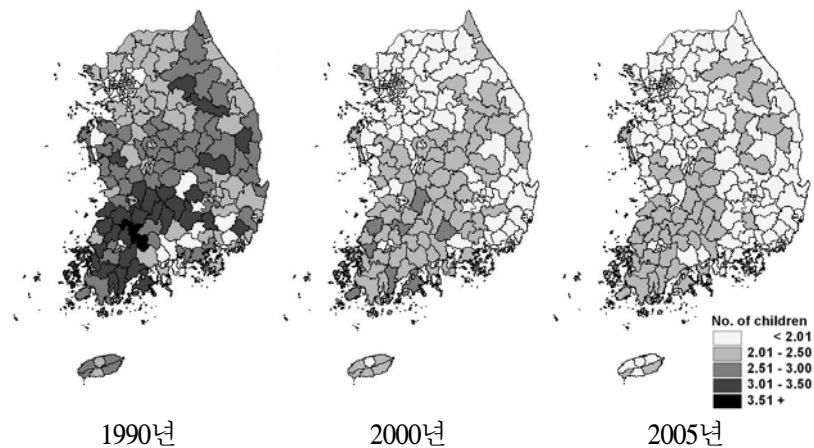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1990년의 270개 시·군·구와 2000년 및 2005년의 234개 시·군·구를 분석단위로 하여 지역별 차별출산력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 2000년, 2005년 센서스의 2% 표본 원자료에서 20~49세의 기혼 여성들을 추출하여 각 시·군·구의 평균 총출생아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좀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각 시·군·구의 연령구조를 전국인구에 맞추어 표준

4) 그간의 많은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생태환경, 생활양식, 사회경제적 수준과 구조에 따르는 차별출산력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사회인구학적 조사들은 표본의 크기가 작아 시·군·구 단위의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화에 따라 행정구역의 잦은 변경과 행정체계의 잦은 변경도 시계열분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생태환경, 생활양식, 사회경제적 수준과 구조를 반영하는 변수들이 시·군·구 단위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가용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화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1990년과 2000년의 두 센서스 사이에 직할시가 광역시 체제로 바뀌고,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는 등 행정구역체계의 커다란 변화는 분석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분석과정에서 일부 시와 군들이 충분한 규모의 사례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3-27]은 1990년, 2000년과 2005년 20~49세 기혼여성의 평균 총출생아수를 시·군·구별로 계산하여 지도로 표시한 것이다. 이 지도를 보면, 1990년, 2000년, 2005년 모두 전라남도 남서해안과 강원도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시·군·구들이 뚜렷하게 높은 평균 총출생아수를 보인다. 반면, 수도권과 경상남도 일부 지역의 평균 총출생아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그동안의 출산력 저하가 반영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의 시·군·구들이 옅은 음영으로 처리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총출생아수의 지역별 편차가 줄어드는 추세 역시 확인된다. 참고로 1990년 270개 시·군·구와 2000년 및 2005년의 234개 시·군·구의 평균 총출생아수의 평균값은 각각 2.44, 1.96, 그리고 1.87이었다.

[그림 3-27] 시군구별 평균 총출생아수의 변화, 1990~2005



자료: 「인구센서스」 2% 표본(1990, 2000, 2005)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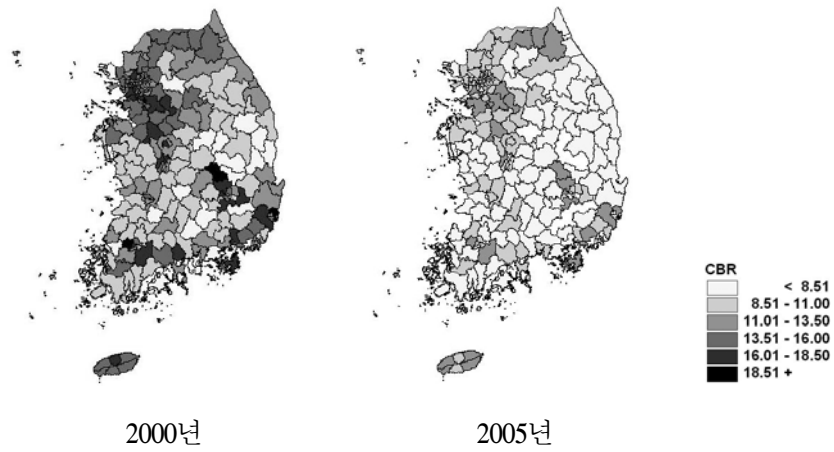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동태통계와 관련 인구자료를 활용하여 각 시·군·구의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을 계산하여 [그림 3-28]에 제시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연령구조 차이가 출생률 수준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성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지도가 [그림 3-29]에 제시되어 있다.⁵⁾ 만약 각 지역의 연령구조가 유사하다면,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 지도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두 지도의 형태가 크게 다르다면, 이는 지역에 따라 연령구조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도들은, [그림 3-27]에 제시된 바,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총출생아수 지도와는 다른 분포형태를 보인다. 우선 2000년과 2005년의 조출생률은 대도시 중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울산 및 대전광역시의 일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외곽의 오산, 시흥, 군포, 이천, 안산과 영남지역의 구미, 칠곡, 거제, 창원, 호남지역에서는 광양, 화순, 그리고 제주지역의 조출생률이 높았다. 반면, 호남지역의 고창, 신안, 진도와 영남지역의 청도, 의성, 남해의 조출생률은 매우 낮게 집계되었다. 서울, 부산과 대구의 조출생률도 전국의 평균값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그림 3-28]에 표시된 조출생률의 분포가 바로 지역 간 차별출산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간 출산수준의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의 연령구조를 표준화한 상태에서 작성된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29]에 제시된 2000년과 2005년의 합계출산율지도는 조출생률 지도와 비교적 유사한 분포형태를 나타낸다. 대도시 중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가 낮았고, 광주, 울산, 대전은 높았다. 그리고 강원도의 화천, 인제, 양구와 전라남도의 광양, 화순, 영암, 그리고 경상남도의 거제에서 현저하게 높은 합계출산율이 산출되었다.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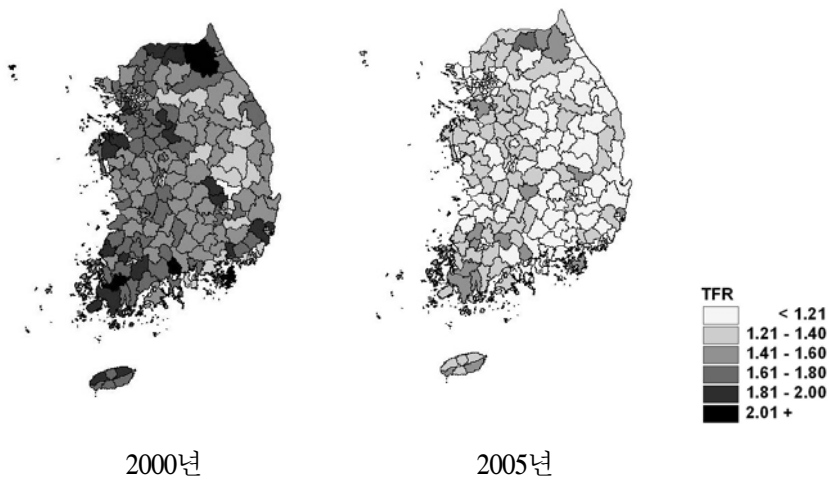
5) 1995년 다섯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주변의 농촌지역을 흡수하여 그 면적이 대폭 넓어졌으므로, 개편 이전과 이후의 출산력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조출생률 지도와 합계출산율 지도를 2000년과 2005년에 한하여 제시하기로 하였다.

[그림 3-28] 시군구별 조출생율(CBR)의 변화, 2000~2005



자료: 통계청(2007).

[그림 3-29] 시군구별 합계출산율(TFR)의 변화, 200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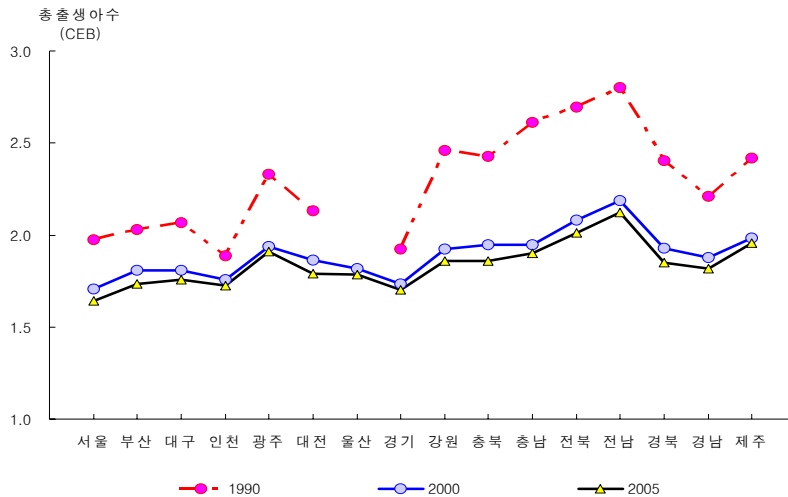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07).

대로 경상북도의 청도, 경상남도의 남해와 고성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뚜렷하게 낮게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서 부부의 센서스와 동태자료를 활용하여 거주지 시도별 총출생아수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기로 하자.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된 [그림 3-30]을 보면, 1990년에는 전라남도과 전라북도의 출산수준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출산수준이 높은 것으로 집계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반대로 출산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은 수도권의 인천직할시였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순이었다.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직할시들도 출산수준이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경상남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수준을 보였다. [그림 3-30]을 보면, 1990년에 출산수준이 높았던 지역들이 2000년에 이르는 기간에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도의 순서로 출산수준이 1990~2000년의 기간에 크게 떨어졌고, 반면에 인천과 경기도에서 감소의 폭이 가장 작았다.

[그림 3-30] 시도별 평균 총출생아수의 비교, 199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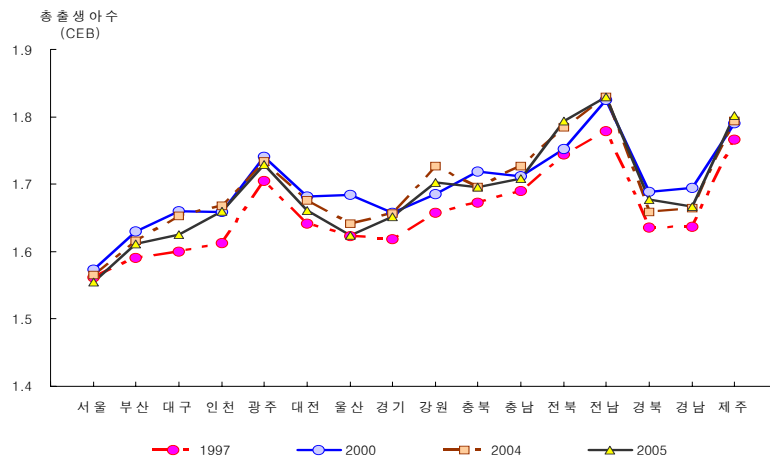


자료: 『인구센서스』 2% 표본(1990, 2000, 2005) 원자료.

대도시 중에서는 출산수준이 높았던 광주에서 가장 현저한 저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총출생아수의 지역별 편차가 1990년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출산력이 극도로 낮은 상태에 진입한 2000년 이후부터 2005년에 이르는 기간에는 총출생아수의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0]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역별 편차의 변화는 두드러지게 감지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1990년 총출생아수의 지역적 편차는 2000년과 2005년에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단지 출산수준이 가장 낮은 지역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순서로 바뀌었는데, 이들 지역간의 출산수준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출생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시도별 총출생아수의 편차를 살펴 보아도 비슷한 양상이 발견된다.

[그림 3-31]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과 경기도는 출산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수준을 보인다. 반면, 전라남도, 제주도, 전라북도와 광주광역시의 총출생아수는 매우 높게 집계되었다.

[그림 3-31] 부부의 거주지 시도별 평균 총출생아수, 1997~2005



자료: 『인구동태통계(출생)』 해당연도 원자료.

[그림 3-31]에서도 1997~2005년 기간에 지역별 편차의 변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1997년의 총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점선이 2000년, 2004년 및 2005년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1997년의 출산력 수준이 더 낮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초혼연령의 급속한 상승이 이루어졌고, 1997년에 출생신고를 한 부인들의 연령이 2000년, 2004년 및 2005년보다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총출생아수가 미세하게나마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된다.

가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수준에서 생태 및 사회경제적 환경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는 그동안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유삼현(2006)과 김두섭(2007)은 시·군·구 단위의 생태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산분석(ANOVA), 경로분석(path analysis)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시도한 바 있다. 이들의 분석에서는 지역사회의 교육수준, 지방세의 수준,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의료환경이 높거나 좋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 중에서는 교육수준이 합계출산율에 대해 설명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같다고 하더라도 해안과 농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들은 대도시보다 합계출산율이 뚜렷하게 높았다. 대도시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에 이르면 다른 생태환경을 지닌 지역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1994년에 비해 그 격차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김두섭, 2007: 143~144).

제 4 장 자녀양육과 가족생활의 실태

제1절 자녀양육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

자녀의 출산, 부모됨은 언제 나아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언제까지 투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야말로 ‘자원과의 싸움’이다. 일상생활에서도 자녀양육은 하루 24시간 주 7일의 시간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자녀출산 및 양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구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사회학이나 심리학, 가정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각도로 수행되어 왔다. 가령,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성취업으로 발생하는 자녀양육의 공백을 누가 어떻게 매울 것인지,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과 양육이 자녀의 발달과 성장의 어떠한 측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이 그것이다. 그런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경제적, 사회적 고비용에 경악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현재 개별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절에서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혼 및 사별자는 제외)의 자녀양육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녀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족생활실태를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자녀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족의 경제적, 시간적 자원을 가늠해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비용이 자녀연령 증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그런데 단일시점에 조사된 자료를 시계열적으로 해석하는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른

양육비지출 차이를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자원 및 시간배분의 대략적인 추이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자녀연령에 따른 양육 및 교육비 비교

가. 분석대상자의 특성

분석을 위해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로부터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족 3,273명에 관한 자료를 추출하였다.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4-1>에 제시되어 있다.

<표 4-1> 분석대상자의 주요 변수별 특성

(단위: 빈도/평균/(표준편차/%)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연령		소득수준	
20대	507 (15.5)	하위 20%	592 (18.1)
30대	2,100 (64.2)	중간집단	1,950 (59.6)
40대	666 (20.3)	상위 20%	731 (22.3)
교육수준		첫째 자녀 연령	
고졸 이하	1,959 (59.9)	만 0~2세	324 (10.8)
대학(교)졸	1,239 (37.9)	만 3~5세	455 (15.2)
대학원 이상	74 (2.3)	만 6~8세	520 (17.4)
취업 여부		만 9~12세	756 (25.2)
취업	1,500 (45.8)	만 13세 이상	940 (31.4)
비취업	1,773 (54.2)		
<연속변수>			
평균 영유아보육비 (단위: 천원)			90.74(177.72)
평균 사교육비 (단위: 천원)			303.82(36.60)
총자녀교육비 (단위: 천원)			394.57(363.28)
부인의 하루평균 가족관련 시간 (단위: 분)			330.55(229.22)
남편의 하루평균 가족관련 시간 (단위: 분)			826.14(463.76)
부인의 주말평균 가족관련 시간 (단위: 분)			71.20(77.87)
남편의 주말평균 가족관련 시간 (단위: 분)			332.63(31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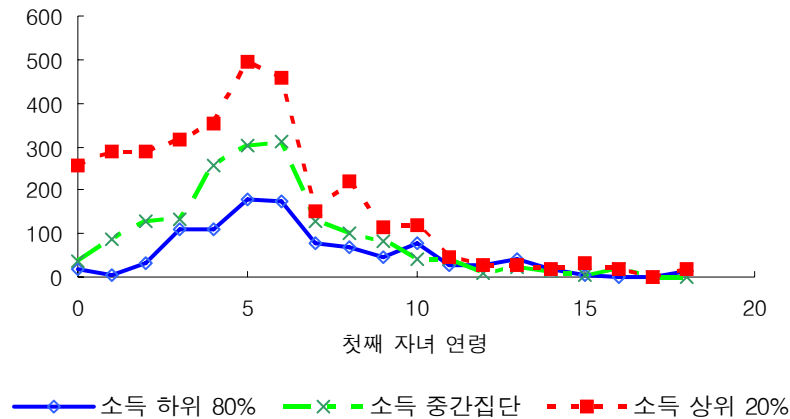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나. 자녀 연령별 보육 및 교육비 지출 비교: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사교육비 및 보육비 지출은 정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지난 2005년에서 보고된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에 따르면,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나누면, 최하위 집단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14.0만원, 최상위 집단은 53.4만원을 지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5b). 이 2005년도 보고서에서는 초·중·고 와 그 이상 연령의 자녀 그리고 영·유아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연령이 구분되면 사교육비에서의 차이는 제시된 약 3배의 차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은 세 집단으로 나눈 소득집단에 따라 자녀양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을 첫째 자녀의 연령별로 제시해 본 것이다. 총보육비의 경우 보육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보육비 지출이 관찰되는 것은 둘째 및 셋째 자녀의 보육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별 소득계층에 따라 보육비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첫째 자녀가 만3세에서 만7세에 걸쳐 있는 시기에 보육비 지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보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 시기는 첫째 자녀가 5~6세에 이르고, 둘째 자녀 및 셋째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 상위 20%는 첫째 자녀가 5~6세 시기에 자녀보육비를 월 평균 50만원을 지출한다. 소득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은 월 평균 20만원 내외로 자녀보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가 하면,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은 첫째 자녀 출산과 함께 월 평균 25만원 내외의 보육비 지출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소득계층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상위 소득계층에서 조기교육과 관련한 보육비를 이미 0세 연령부터 지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1] 첫째 자녀의 연령 및 소득집단별 보육비 지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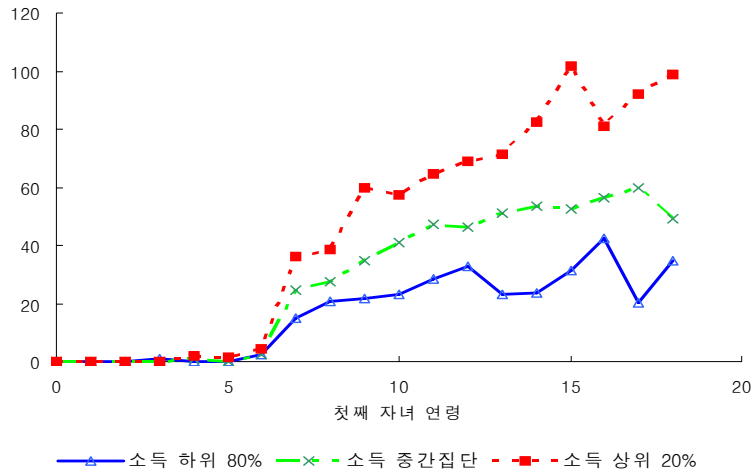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1]을 보게 되면, 첫째 자녀 연령이 만 8세를 지나 초등학교 시기에 이르면 보육비 지출은 크게 떨어진다. 이는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해당 아동의 영유아보육비가 함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육비 지출로 보았을 때 보육비 지출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개별 가족에는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4-2]는 초·중·고등학생 이상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현황이다. 때문에 첫째 자녀가 아직 미취학 아동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있더라도 이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고 그 값을 0으로 처리하였다. 여기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주요 경향은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서는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는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2] 첫째 자녀의 연령 및 소득집단별 사교육비 지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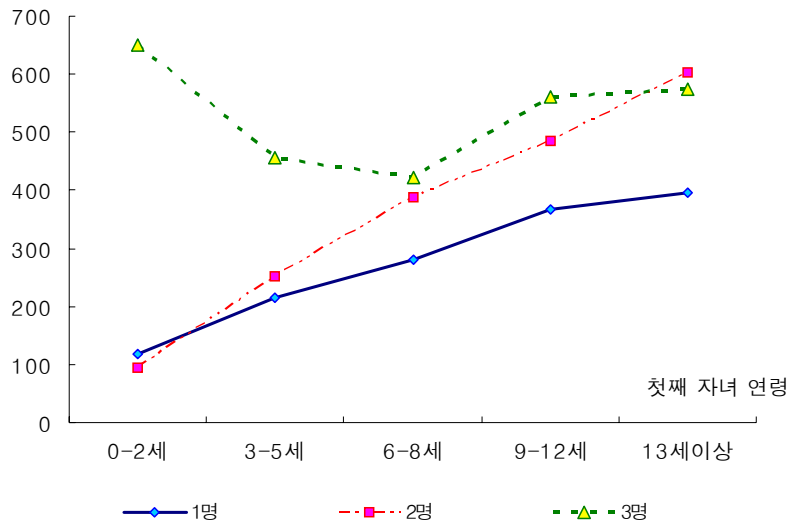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대략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시기는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5~16세로 고등학교 진학시기로 추정된다. 한편,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는 비록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사교육비 비중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의 월평균 가계 소득이 123.0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사교육비(평균 29만원)는 소득의 30%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사교육비의 비율은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 나타나는 소득 대 사교육비율인 20%보다 더 높아서 이들 소외계층의 가계부담이 예상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자녀수에 따른 보육 및 교육비

그렇다면 자녀수에 따라 보육 및 교육비 지출 규모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자녀의 수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개별 자녀에 대한 지출의 합이 증가하면서 총지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녀수에 따른 자녀 보육비와 교육비 증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째 자녀의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이는 자녀수에 따라 가계경제에 크게 부담을 주는 시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된 분석결과는 [그림 4-3]에 제시하였다. 이때, 종속변수는 자녀 보육 및 교육비 지출을 모두 합한 값으로 여기에서는 총자녀양육비로 명명하였다. 이렇게 하면 첫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각 자녀발달시기에 해당 가정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액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림 4-3] 첫째 자녀의 연령 및 자녀수에 따른 총자녀양육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자녀수에 따라 자녀양육비 지출액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시기는 대략 첫째 자녀가 만 2세에서 만 5세로 나타난다. 첫째 자녀가 만 2세이면서 두 자녀 이상을 갖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으나, 첫째 자녀가 아직 어린 상황에서 둘째, 셋째 자녀의 출산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자녀 가정에서 지출하는 총양육비의 규모는 자녀연령이 높아져도 감소하지 않고 대체로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직 그들의 생애과정에서도 소득이 낮은 시기에 속한다.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자녀수의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보육료지원과 같은 금융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첫째 자녀의 영유아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자녀가 1명과 2명인 가족에서는 첫째 자녀 연령이 만 5세에 이를 때까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 6세 이후가 되면 자녀 1명인 가정과 2명인 가정의 양육비 지출규모가 서서히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이는 추가자녀 출산으로 인한 보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이 기존자녀에 대한 지출에 보태지면서 전체 자녀양육비가 증가한 결과라 판단된다.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자녀 돌봄과 가사 분담 및 투여시간

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사 분담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률의 증가는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참여를 요구하고 그러한 수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 전반기부터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참여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일부학자들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친구 같은 아버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적어도 젊은 세대에서는 남성의 자녀양육 분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이숙현, 1995; 한경혜,

1998).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실증연구결과들은 남성의 긴 노동시간과 아버지 역할의 모형 부족으로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지적한다(송유진, 2005). 이렇게 아버지들이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바로 자녀양육의 많은 부분을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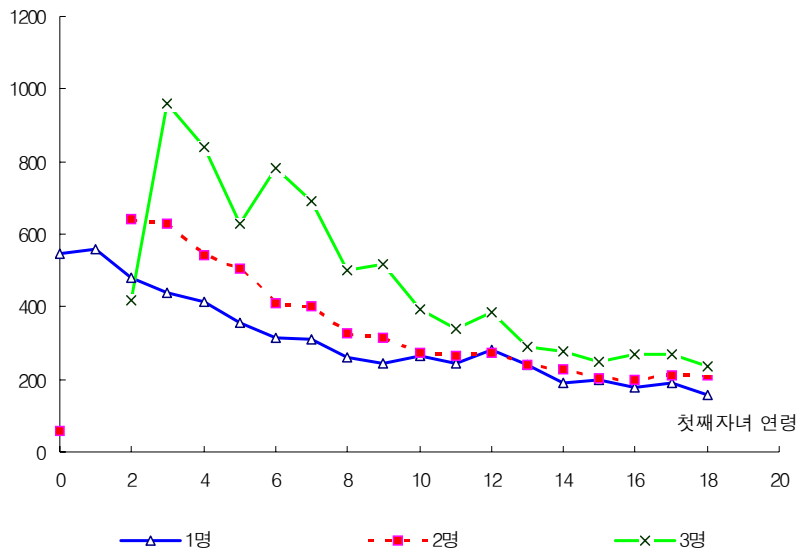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가운데 남편과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쳐서 41.5%에 이른다(이삼식 외, 2005b). 그런데, 공평하다는 태도는 자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자녀의 경우 공평도를 64.4% 정도 지각하지만,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은 45.9%, 두 자녀를 둔 경우는 38.2%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을 둔 기혼여성들은 37.5%였다.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가사 및 집안일이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여성은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5b). 공평도에 대한 지각과 더불어서 가사일 분담 실태에서도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남편이나 부부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감소하면서, 부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돌볼 자녀가 많아지면서 부인이 가사에만 전념하게 되는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자녀양육비용에서도 살펴본 결과와 연관 지어 본다면,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가계의 자원소실로 인하여 기혼여성들이 자녀양육을 함에 있어서 남편이나 타인의 도움을 이끔 여력은 더 감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여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

이처럼, 자녀양육이 온전하게 기혼여성의 부담으로 지어지고 있다면, 여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에 시간적 투자는 가족생활주기에서 언제 가장 집

증되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자녀수별로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기혼 여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의 양을 비교해 보았다(그림 4-4 참조). 전체적으로 기혼여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관련 시간투여는 첫째 자녀가 아직 어린 가족형성기에 집중되어 있고,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투여량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하루 평균 200~250분은 지속적으로 자녀돌보는 시간으로 투여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자녀가 18세가 되더라도 절대적인 시간의 양은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다. 자녀수에 따른 기혼여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예상된 바와 같이 자녀를 3명 둔 기혼여성이 가사 및 자녀 돌보는 데 투여하는 시간은 그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둔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많다.

[그림 4-4] 첫째 자녀의 연령 및 자녀수에 따른 기혼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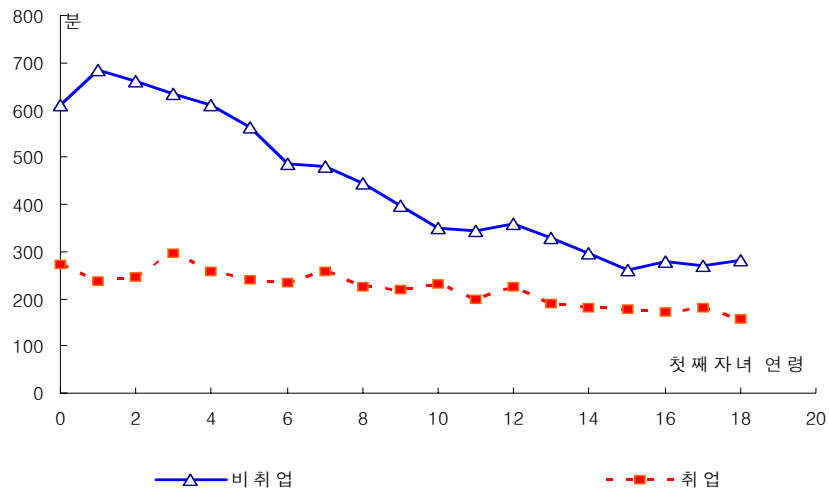
실제로 자녀 1명과 2명의 경우에 나타나는 차이는 크지 않지만 자녀수가 3명인 경우는 자녀 1명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서 예측되는 증가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로 보게 되면, 첫째 자녀가 아직 미취학 아동이면서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동생이 있을 경우에 기혼여성에게 부과되는 시간적인 비용은 가장 많다. 이때 기혼여성이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800~1000분 즉, 13~15시간으로, 이는 하루 24시간 중에 절반을 훨씬 넘는 시간이다.

다.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은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것이다. 이는 취업여성의 경우 생활시간의 절대적인 비율이 근무시간으로 할당되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기혼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자녀양육에 따르는 시간적 비용은 상이할 것으로 보여 진다.

평일 하루에 이루어지는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의 분포를 보게 되면, 취업여성은 전업주부보다 평균 250분 정도가 더 짧다. 실제 취업여성이 하루 8시간을 직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취업여성은 하루 중에서 평균 200분 가까이를 가사와 자녀돌봄에 사용하고 있었고, 반면에 전업주부는 435분을 투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단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어린자녀를 둔 경우 기혼여성의 가족관련 시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림 4-5]는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여 첫째 자녀 연령을 중심으로 취업여성과 전업주부의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의 차이를 재구성 한 것이다. [그림 4-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취업여성의 경우는 하루 평균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에 투여하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짧다. 그에 비해 전업주부여성은 자녀가 어린 시기에 특히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에 투여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5] 첫째 자녀의 연령 및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그런데, 이러한 차이도 자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비취업여성의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자녀연령이 10세를 전후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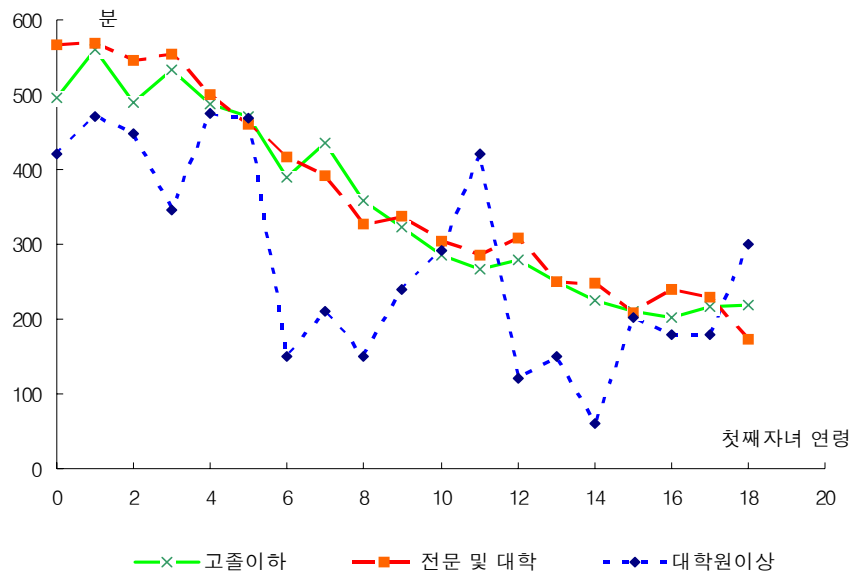
라.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

Bianchi와 동료들(2006)에 따르면,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는 여성이 보유한 인적자본의 양에 따라 자녀의 인적자본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술과 내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보통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자녀에게 책 읽어주기, 놀아주기, 함께 다양한 과외활동 참여 등을 더 많이 하고, 관련 활

동시간도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양육시간의 차이는 과거 20년 전보다도 최근에 오면서 더 그 간격이 넓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와 교육수준에 따라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만,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서는 가사일과 자녀 돌보기 (밥먹고, 옷입는 것 도와주기, 함께 놀아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숙제나 공부돌봐주기,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하교 돕기)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측정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림 4-6] 첫째 자녀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기혼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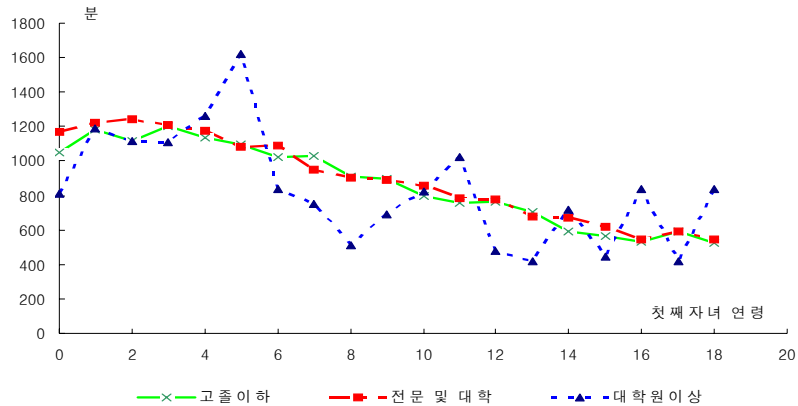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6]을 보면, 고졸 이하 학력자와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여성 간에는 평일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에서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발달단계에서 동일하게 발견된다. 다만, 대학원졸 이상 학력의 여성이 다른 교육집단에 비해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의 투여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 여성이 대부분 직장을 다닐 확률이 높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자료에서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자 가운데 취업여성은 63.5%로, 고졸 이하 학력과 전문대·4년제 대학졸업 이하의 학력여성의 취업자 비율이 각각 48.2%, 45.2%인 것 보다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취업여성과 비취업 여성의 절대적 시간량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평일시간의 경우 이처럼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자를 제외하면 실제로 교육수준에 따른 시간활용의 차이는 없어 보인다. 주말에 이루어지는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에서 역시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주말의 가사 및 자녀돌봄 시간을 나타내는 [그림 4-7]을 보게 되면, 대학원 졸업 이상 학력 집단을 제외하면,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세 집단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집단은 예외적으로 시간투여의 증감이 다른 집단과 차이를 나타낸 지점이 관찰되었지만, 이것은 다른 두 집단과 구분될만한 유의미하게 큰 차이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시간 및 자녀양육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서구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본다면, 낮은 학력을 가진 여성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가사일에 투자하는 시간은 고학력 여성 못지않게 길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자녀연령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로 발전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어머니들이 교육수준과는 무관하게 자녀 및 가족문제에 얼마나 몰입되어 있는지를 시사한다.

[그림 4-7] 첫째 자녀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기혼여성의 주말 평균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마.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부부공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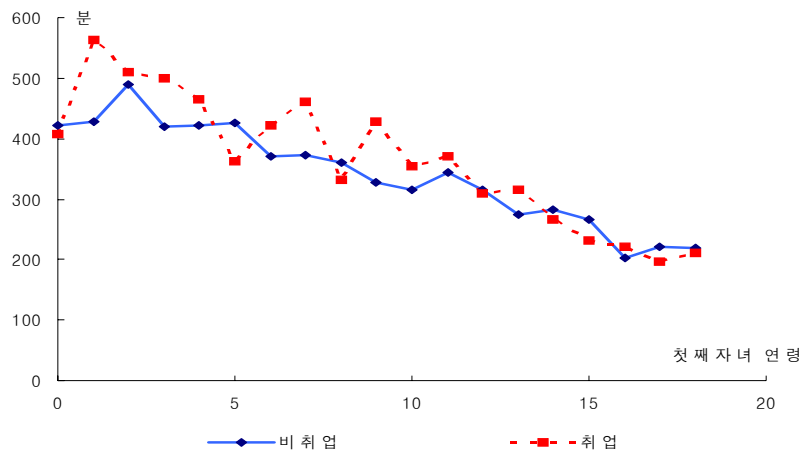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 절에서는 부부간의 시간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들은 개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V자형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해 왔다. 신혼 및 가족형성기에 결혼만족도가 높지만,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축이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부관계는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녀가 청소년기를 지나게 되면 결혼만족도나 부부의 상호작용 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만족도의 문제는 이것이 가족해체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예측변수라는 점에서 가족의 안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에서는 결혼만족도나 부부관계를 예측할 만한 문항은 없었다. 다만, 부부간의 상호작용의 양을 알 수 있는 부부공동시간에 대한 자료가 있다. 부부공동시간이란 기혼여성과 남편이 함께 보내는 시간(수

면시간은 제외)으로 대체로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시간(부부여가시간으로 명명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주말의 부부여가시간이 어떠한 분포를 갖게 되는지 살펴본 것이 [그림 4-8]이다.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주말에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497분, 약 8시간 정도로 나타난다. 이 값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의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대략 4시간 정도 수준에서 부부가 여가시간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취업한 여성의 가정에서는 주말에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468분이었고, 전업주부의 가정에서는 521분으로 여성이 취업한 경우 남편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은 더 짧다. 이는 현재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기는 하나 주말에도 일을 하는 사례가 맞벌이 부부에서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취업여성의 경우 평일에 밀린 가사 및 자녀돌보는 일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남편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림 4-8] 첫째 자녀의 연령 및 부인의 취업 여부에 따른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그림 4-8]을 보게 되면,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부여가시간의 차이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다름을 관찰할 수 있다. 어린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여성의 취업/비취업에 따른 부부여가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매우 미미하였다. 취업여성의 경우에서 여가시간의 분산이 크게 나타나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7세를 기준으로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부부여가시간에서의 차이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삼식 외(2005b: 325)의 보고서에서는, 취업여성들이 전업주부에 비해 남편의 가사공조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남편의 주말 가사 및 자녀양육 시간도 평일에 비해 평균 2시간가량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남편의 협조가 취업여성에서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조와 분담에 비하면, 부부만의 시간에서는 취업여성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취업여성은 전업주부보다 일과 자녀, 가사 그리고 남편과의 상호작용시간에서 시간압박을 경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가하면, 전업주부의 경우에서도 부부여가시간이 갖는 함의는 상당히 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자녀 돌봄 및 양육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비록 취업여성의 가정과 비교해 볼 때 부부여가시간이 평균 60분, 즉 1시간가량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업주부가 취업여성에 비해 크게 혜택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전업주부는 남편의 가사분담을 많이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부부여가시간이 이들에게 보상으로 인식될 소지는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을 담보한 채, 여성은 생애 상당기간을 자녀와 가사일 그리고 직업역할에 매몰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활시간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제 2 절 여성의 삶의 변화와 자녀양육

여성의 취업경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여성의 직업역할과 가족역할 특히 출산 및 자녀양육을 여성들은 어떻게 병행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증가하였다.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을 분석한 박수미(2002)의 연구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학력과 같은 인적자본이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생애과정에서의 사건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른 연구들 역시 한국의 기혼여성의 취업 단절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들의 이면에는 ‘출산’이라는 사건이 개입해 있고, 예상외로 이 생애사건의 효과가 최근의 코호트로 올수록 강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박경숙·김영혜, 2003).

최근에 오면서, 여성의 취업과 출산에 관한 연구들은 여성에게 있어서 노동권에 못지않게 부모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과 자녀수, 출산계획, 자녀 태움 등 출산관련 특성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발견된다. 관련 연구들은 일과 가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취하기 위한 선택으로 혹은 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적응방식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민현주, 2007; 장지연·부가청, 2003; 황정미, 2005).

이들은 취업을 위해 출산을 조절하거나 혹은 출산을 위해 취업을 조절하는 두 가지 방식은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동적으로 선택될 수도 있고, 혹은 사회구조적으로 상이한 위치에 있는 개인들이 선택하게 되는 전략의 차이로서 드러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된 논의가 더 진행되면서 최근 연구들은 여성의 취업증가, 취업연속성의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단일하지 않으며 반드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여성취업률이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마다, 시기마다 변화의 방향과 수준은 다르게 나타

나는데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기혼여성의 취업과 출산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경로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절에서는 첫째 자녀부터 둘째 자녀 출산까지 기혼여성들이 취업 상태 변화 실태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취업의 지속과 단절 양상을 직업과 가족역할을 모두 수행하려는 여성들이 선택하게 되는 ‘전략(strategy)·가족전략(family strategy)’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⁶⁾

이 연구에서는 여성 개인의 수준에서 여성의 일과 출산경험이 어떻게 조절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탐색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일과 부모됨은 어떠한 방식으로 조율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일과 가족의 양립을 시도하는 여성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그들은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지의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사건사 연구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행과정 분석을 통해 여성취업과 출산행태에 따른 유형화를 실시하였다(박경숙·김영혜, 2003; 은기수·박수미, 2002).

기존 연구들은 자녀출산과 양육기를 하나의 이행과정으로 분석해 왔지만, 이 연구에서는 결혼부터 각 자녀의 출산시점에 이르는 시기에 노동시장에의 지속과 이탈의 조합을 가지고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 출산까지의 관찰기간 동안 여성들의 취업

6) 장지연(1997)의 지적처럼 출산을 전후한 시기의 여성의 고용단절과 재취업 행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건사분석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자녀출산기와 출산직전까지 노동시장이탈률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후에는 이탈률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장지연, 1997). 이 상승과 하강하는 시점에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여성들은 직종, 임금을 비롯한 직업상황이나 가족상황 그리고 직업과 가족에 대한 태도에서 상이한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동일한 범주로 묶어 이탈률을 계산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할 소지가 높다.

조절형태와 특히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주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각 시기마다 취업을 지속하는 사람들과 지속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였다.

- ② 첫째 자녀 출산, 둘째 자녀 출산, 셋째 자녀 출산 그리고 2005년 현재까지 네 시점의 취업 여부를 가지고 여성들의 취업경력을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에 속하는 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자녀출산행태와 취업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분석방법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에서는 20에서 44세 기혼여성의 결혼과 출산행위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일과 가족을 경험하는 여성의 생애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절에서는 자녀출산이 이루어지는 각 시기마다 여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취업조건을 조절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사 자료에는 첫째 자녀부터 다섯째 자녀까지 출산을 전후로 6개월의 취업 상태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 중에서 넷째와 다섯째 자녀를 둔 경우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이 분석에서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그리고 셋째 자녀의 출산 전후의 취업 상태에 대한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2. 분석 결과

이 분석의 대상은 2005년 현재 첫 자녀연령 18세 이하인 응답자 3,434명(당시 취업한 사례=1,159명)이다. 둘째 자녀 출산전후의 취업 조절상황은 자녀가 둘 이상인 기혼여성 2,400명(당시 취업한 사례 45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가. 각 출산시점의 취업조절 실태와 취업중단의 주요 이유

<표 4-2>는 각 자녀 출산 전 6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 사이의 기혼여성의 취업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자녀출산시기에 비취업 여성의 비율이 취업여성에 비해 높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자녀 출산시에는 이미 직업을 그만두었거나, 그 시기에 중단하여 비취업상태에 있는 사례가 전체의 80%가량 된다.

<표 4-2> 자녀 출산시점의 취업조절 실태

첫째 자녀 출산시 취업상태(N=3,160)		둘째 자녀 출산시 취업상태(N=2,400)		셋째 자녀 출산시 취업상태(N=332)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비취업 중단	조절 ¹⁾ 지속	비취업 중단	조절 ¹⁾ 지속	비취업 중단	조절 ¹⁾ 지속
2,001 (63.3)	538 (18.4)	1,944 (81.0)	91 (3.8)	125 (5.2)	240 (10.0)
277 (83.4)	14 (4.2)	8 (2.4)	33 (9.9)		

주: 1) 조절은 시간조절,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혹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경우를 말한다.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이는 여성이 출산기에 접어들수록 노동시장의 이탈률이 높아진다는 장 지연(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비취업 경향은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 출산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둘째 자녀 출산시기만을 살펴보면, 직장이 있다가 일을 그만두는 여성의 비율이 다른 시기에 비해 낮았다. 둘째 자녀 출산시에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는 휴직 및 근무조건을 조절하거나 그대로 지속하는 경우의 비율이 다른 두 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둘째 자녀 출산시기에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특별히 취업여성들보다도 지속하고자 하는 성향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셋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수가 매우

적다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셋째 자녀 출산 전후 시기에 취업여성은 매우 소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자녀 출산 당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 자체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직장을 중단한 경우의 비율도 매우 낮았을 뿐 아니라 근무조건을 조절하거나 지속한 경우도 드물었다. 셋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이 대부분 전업주부라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4-3> 각 자녀 출산시의 취업중단 사유

첫째 자녀 출산시 취업경력 (N=3,160)	둘째 자녀 출산시 취업경력 (N=2,400)	셋째 자녀 출산시 취업경력 (N=332)
1. 직접 키우고 싶어서 (43.4%)	1.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37.3%)	1.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37.3%)
2.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20.2%)	2. 직접 키우고 싶어서 (21.7%)	2. 직접 키우고 싶어서 (23.1%)
3.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 (12.4%)	3.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 (18.1%)	2.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 (23.1%)
4. 산후조리 때문에 (6.4%)	4. 산후조리 때문에(10.8%)	4. 아이 맡길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7.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표 4-2>에는 각 자녀 출산시기를 전후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응답자들의 취업중단 사유가 제시되어 있다. 취업중단 사유의 1, 2위는 ‘직접 키우고 싶다’, ‘아이 맡길 곳이 없다’로 나타났다. 제3순위에는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없어서’를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후조리의 문제’,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발생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와 같은 부분도 여성이 일을 그만두게 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자녀양육에 직접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모성’을 대신할 보조양육자에 대한 신뢰부족이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주요 사유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자녀출산 시기별 비취업 및 취업 여성의 특성

<표 4-4>은 각 자녀 출산시기에 취업과 비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여성들이 전혀 다른 사회적 상황에 있는 상이한 집단인가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표 4-4> 자녀 출산시점의 취업상태와 인구학적 특성

(단위: 평균값, %)

구 분	첫째 자녀 출산시 취업경력 (N=3,160)		둘째 자녀 출산시 취업경력 (N=2,400)		셋째 자녀 출산시 취업경력 (N=332)	
	비취업 (N=2,584)	취업 (N=576)	비취업 (N=1,968)	취업 (N=352)	비취업 (N=275)	취업 (N=42)
연령						
평균연령	35.4	35.5	36.2	36.4	36.8	37.2
출산간격						
첫 자녀와 터울(개월)	-	-	33.6	37.6	74.7	72.3
교육수준						
고졸 이하	67.2	41.8	69.3	48.8	74.6	63.4
전문대 이상	32.8	58.2	30.7	51.2	25.4	36.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첫째 자녀부터 셋째 자녀 출산까지 각 시기에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이는 동일한 코호트 내에서도 일과 출산에 대한 행위가 상이한 집단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시기 만을 보게 되면 출산 전후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간에는 유의미한 학력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대 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취업여성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셋째 자녀까지 출산한 경우에는 두 집단 간의 교육수준에서의 격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셋째 자녀 출산을 한 집단의 경우 교육수준과는 무관하게 취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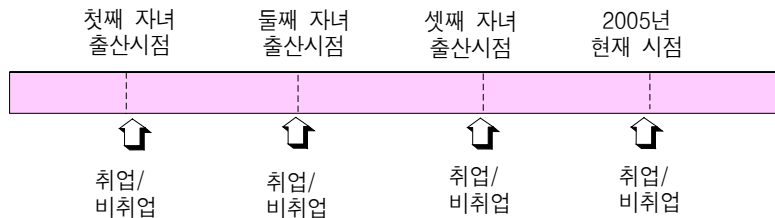
해준다. 즉, 고학력 여성이라도 셋째 자녀를 갖게 되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터울과 각 자녀 출산기의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둘째 자녀를 출산한 여성들 가운데 출산 당시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들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터울(출산간격)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었다. 이는 둘째 자녀 출산시에 취업상태에 있었던 여성들이 비취업여성에 비해 적극적으로 출산시기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 여성의 출산시기 취업유형

이 연구에서는 각 자녀 출산시기별 취업상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유형을 구성하였다. 아래의 [그림4-9]는 유형화를 위해 관찰한 총 네 시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9] 부인의 출산시기 취업유형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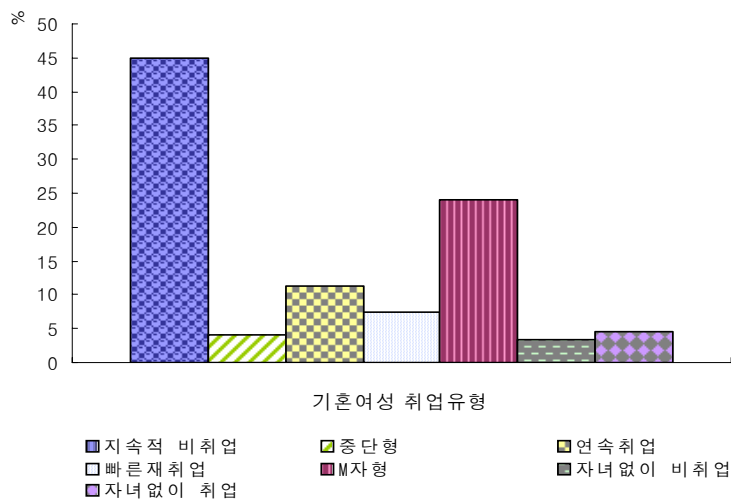


개념적으로 셋째 자녀 출산까지를 다루고 있지만, 2005년 현재까지 둘째 및 셋째 자녀 출산에 이르지 못했거나 첫째 자녀 출산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출산이 없는 여성, 그리고 둘째 자녀 출산까지만 완료한 경우들도 분석에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렇게 유형화한 결과, 기혼여성의 일과 가족 행태를 아직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두 유형과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다섯 유형을 합하여 모두 7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4-10]은 분석을 시도한 3,434명 여성의 7가지 유형과 그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지속적 비취업’은 그야말로 각 자녀출산 전후 1년과 현재시점에 비취업으로 나타나는 여성들이다. 물론 이들이 자녀출산 사이사이에 일시적으로 취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이 적어도 각 자녀 출산기를 전후한 시기에 직업이 없었고, 관찰시점에서도 직업이 없다는 점은 다른 유형과는 유의미하게 비취업의 기간이 길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 유형을 ‘지속적 비취업’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여성은 전체의 45%로 다른 유형과 비교해 볼 때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속적 비취업형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재취업형으로 전체 여성의 31.6%로 나타났다.

[그림 4-10] 부인의 출산시기 취업유형의 분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재취업형은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첫째 자녀 출산시 비취업 상태였지만, 첫째 자녀를 출산한 이후 바로 복귀한 경우이다. 분석대상의 7.5%가 이러한 빠른 재취업형태로 분류되었다. 빠른 재취업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째 자녀만을 둔 여성이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들은 자녀출산기에 한시적으로 비취업 상태에 있다가 취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빠른 재취업형 중에서도 극소수이기는 하나 자녀가 둘 이상인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첫째 자녀 때와는 다르게 둘째 및 셋째 자녀 출산시에도 여전히 취업한 상태로 나타나며, 현재까지도 취업상태로 나타난 사례들이다.

또 다른 재취업 형태는 일반적인 여성의 취업곡선(M자형)의 사례들로서 자녀출산기를 모두 지나고 취업한 사례들이다. 전체의 24.1%를 차지하는 이 유형은 앞서 첫째 자녀 출산 후에 바로 복귀한 빠른 재취업형태와 차별화하기 위해 둘째 자녀 출산시기까지 비취업 상태였고, 관찰시점인 2005년에 취업상태로 나타나는 경우만을 포함하였다. 자녀 셋을 둔 경우,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자녀 출산 전후에는 모두 비취업 상태로 나타나지만 현재는 취업한 상태인 응답자들도 느슨한 M자형이라는 점에서 이 유형에 포함되었다. 다만, 이러한 느슨한 M자형 사례는 셋째 자녀 출산 사례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각 출산시기에 취업상태에 있었고, 현재에도 취업하였다고 응답한 사례들은 ‘연속취업형’으로 구분하였고, 이들은 전체의 11.3%에 해당한다. 앞서 지속적인 비취업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들 연속적 취업형들도 출산 전후 1년은 취업하였지만 그 이후 어느 시점에서 비취업상태에 있었는지는 이 유형화 작업만 가지고는 알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들 연속적 취업형에는 아직 둘째, 셋째 출산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들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취업상태 유지와 출산의 행보는 아직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유형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각 자녀

출산을 전후하여 1년간 취업상태를 유지하였고, 조사시점에도 취업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 다른 유형들과는 차별적이었다.

자녀출산 전후로 직장을 그만두고 아직까지 비취업상태로 남아 있는 ‘중단형’의 사례는 모두 138명으로 이들은 분석대상 기혼여성의 4%를 차지한다. 이들 138명의 대부분은 첫째 자녀 출산시점에는 취업상태에 있었지만, 이후 둘째 자녀 출산 혹은 다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조사시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녀출산과 양육을 계기로 직업을 중단한 경우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두 유형은 조사시점에 아직 자녀가 없는 무자녀 기혼여성들로 이들은 총 274명이었다. 이중에서 조사시점에 취업을 한 여성은 약 56%를 차지하였다. 이들이 전체 분석대상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사례에서 비취업과 취업의 사례가 각각 3.5%, 4.5%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유형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출산행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4-5>에는 위에서 살펴본 7가지 유형별로 연령, 교육수준, 가계소득과 첫째 자녀 출산, 출산간격과 같은 출산관련행위의 차이가 제시되어 있다.

<표 4-5>의 유형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아직 자녀가 없는 두 유형을 제외하면, 30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흥미롭게도, 자녀가 있는 유형 가운데서는 지속적 비취업형에서 2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이 직업 대신 자녀출산과 양육에 몰입해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표 4-5>에서 지속적 비취업형 다음으로 20대 비중이 높은 경우는 연속취업형과 빠른 재취업형이었다. 연속취업형이나 재취업형처럼 출산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20대 전체 518명의 18%에 지나지 않았다.

<표 4-5>에 나타나는 유형 가운데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중단형이었다. 중단형의 75%가 30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 뒤를 이어서 30대의 비율이 높았던 유형은 빠른 재취업형과 연속 취업형이었다. 유형별로 40대의 분포를 살펴보면, M자형이 다른 유형들보다 40대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와 관련해서 유형별 기혼여성들의 평균연령을 산출해 보면, 우리가 M자형이라고 구분한 유형은 다른 유형들보다 유의미하게 연령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두 유형의 기혼여성(취업, 비취업 모두에서)의 평균 연령은 나머지 다섯 유형의 여성들보다도 유의미하게 어리게 나타났다. 중간 연령에 해당하는 중단형, 빠른 재취업형, 연속취업 그리고 지속적인 비취업형에 속하는 여성들의 연령차는 매우 근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4-5> 출산시기 취업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평균값, %)

구 분	현재 취업				현재 비취업		
	취업 (무자녀)	연속 취업	빠른 재취업	M자형	중단형	지속적 비취업	비취업 (무자녀)
연령							
20대	52.1	11.8	10.0	3.6	7.2	16.8	56.1
30대	41.2	66.0	68.3	64.9	75.4	65.0	38.1
40대	6.7	22.2	21.7	31.5	17.4	18.2	5.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 연령	29.7	35.3	35.2	37.4	35.4	34.3	30.1
현재 남편 소득(만원)	194.5	252.2	217.4	216.3	282.9	254.5	200.9
여성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32.9	40.2	66.0	76.2	42.8	62.1	50.4
전문대 이상	67.1	59.8	34.0	23.8	57.2	37.9	49.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사례수(N)	155	388	256	826	138	1540	119
구성 비율(%)	4.5	11.3	7.5	24.1	4.0	45.0	3.5
자녀 있는 비율(%)		12.3	8.2	26.3	4.4	4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표 4-5>에는 유형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하기 위해 현재 남편의 소득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남편소득으로 볼 때, 중단형이 282만원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남편의 소득이 많았다. M자형이나 아직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남편의 소득수준은 다른 유형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자녀를 두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이 어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남편 역시 아직은 직업경력을 쌓아가는 단계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낮은 소득은 어린 연령 그리고 그에 따르는 짧은 직업경력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그에 비해 M자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다. 남편의 임금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들이 취약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학력수준에서의 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학력 비중이 높은 유형은 M자형, 빠른 재취업형, 그리고 지속적 비취업형의 순서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자녀 없는 취업형, 연속취업형 그리고 중단형의 순으로 각각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 비율이 높았다. 앞서 남편의 소득수준과 연관지어 보면, M자형이나 빠른 재취업형의 경우 그들 가족이 취약계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의 재취업은 아마도 생계유지를 위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현재 취업상태로 나타나는 4개 유형(무자녀 취업, 연속 취업, 빠른 재취업, M자형)만을 따로 비교해 보면, 같은 취업여성들이라고 하더라도 학력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6>에서 유형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단계에 있는 여성들에 비해 초혼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현재 자녀가 있는 여성 중에서는 M자형에 속하는 여성들의 초혼연령이 가장 어렸다. 유형별 결혼시점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결혼코호트에서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M자형에 속하는 기혼여성들은 1997년이나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표 4-6〉 출산시기 취업유형별 출산관련 특성

(단위: 평균값, %)

구 분	현재 취업				현재 비취업		
	취업 (무자녀)	연속 취업	빠른 재취업	M자형	중단형	지속적 비취업	비취업 (무자녀)
초혼연령	27.3	25.6	25.1	24.0	25.1	24.9	27.2
1997년 이전 결혼	5.2	57.0	61.3	90.2	63.8	55.8	6.7
1997년 이후 결혼	94.8	43.0	38.7	9.8	36.2	44.2	93.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결혼~출산시기(개월)	-	18.1	18.9	13.1	15.2	16.1	-
첫째 자녀 연령	-	8.4	8.7	12.5	9.1	8.4	-
총출생아수	-	1.7	1.3	2.1	1.9	1.8	-
출산기간(개월)	-	58.6	53.3	75.8	88.5	73.7	-
추가자녀계획 있음(%)	79.6	17.3	25.1	3.0	8.9	15.6	87.7
사례수(N)	155	388	256	826	138	1540	119
구성 비율(%)	4.5	11.3	7.5	24.1	4.0	45.0	3.5
자녀 있는 비율(%)		12.3	8.2	26.3	4.4	4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그에 비해 무자녀 취업형, 연속취업형 그리고 지속적 비취업형에서는 1997년 이후에 결혼한 사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빠른 재취업형들은 주로 최근 결혼코호트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M자형에서 처럼 둘째나 그 이후 추가자녀 양육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첫째 자녀 출산 후 바로 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1997년 이후에 결혼한 기혼여성들의 경우 지속적 비취업형을 제외하면 1997년 이전 결혼코호트보다 취업과 비취업의 유형이 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1997년 이후 결혼코호트가 1997년 이전의 결혼코호트와는 상이한 취업경력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에서 출산에 이르는 간격은 M자형이 결혼에서 첫 출산에 이르는 간격은 M자형의 조절유형이 나머지 유형들에 비해 더 짧았다. 빠른 취업

형의 경우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결혼에서 첫 출산까지의 기간이 길었다. 첫 출산간격이 가장 짧게 나타나는 M자형과 비교해 보면, 첫 출산시기가 대략 평균 6개월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첫째 자녀 연령을 비교해 보면, M자형의 첫째 자녀 연령이 12.5세로 8~9세로 나타난 유형들에 비해 약 3~4세가량 나이가 많았다. 즉, 이들 M자형은 가족 생활주기의 측면에서 가족형성기를 일찍 완료하고 이제 자녀교육기로 접어든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총출생아수에서는 자녀가 있는 여성들 가운데서 M자형이 현재까지 출산한 자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에 비해 총출생아수가 가장 적은 집단은 빠른 재취업형이었고, 이들의 총출생아수는 1.3명이었다. 평균 출산기간을 살펴보면, 중단형이 평균 88개월로 다른 5개 취업유형 가운데 출산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비해 빠른 재취업형의 경우는 평균 출산기간이 가장 짧았다. 각 유형별로 추가자녀 계획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고 응답한 사례들에서 자녀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가 하면, 현재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들 가운데서는 연속취업형과 빠른 취업형에서 자녀를 한 명 더 나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에 따라 현재의 직업관련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4-7>은 자녀출산시기의 취업 유지와 단절의 결과로서 직업영역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 전의 취업경험, 현재 기혼여성의 소득, 종사상 지위를 통해 이들의 직업경험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상 여성의 78.4%가 결혼 전 취업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유형별로 보게 되면, 대체로 70% 후반대에서 90% 후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혼여성들의 대다수가 결혼 전에도 취업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표 4-7> 출산시기 취업유형별 현재 직업관련 특성

(단위: 평균값, %)

구 분	현재 취업				현재 비취업		
	취업 (무자녀)	연속 취업	빠른 재취업	M자형	중단형	지속적 비취업	비취업 (무자녀)
결혼 전 취업경험 비율	92.3	96.1	75.8	75.3	97.1	73.4	72.9
현재 여성 소득(만원)	135.42	156.50	99.69	88.51	-	-	-
현재 종사상 지위							
상용직	60.6	59.5	16.0	29.3	-	-	-
임시 및 일용직	26.5	10.1	35.5	42.0	-	-	-
차영 및 고용주	7.1	12.9	29.3	14.2	-	-	-
무급종사자	5.8	17.5	19.1	14.5			
계	100	100	100	100			
사례수(N)	155	388	256	826	138	1540	119
구성 비율(%)	4.5	11.3	7.5	24.1	4	45	3.5
자녀 있는 비율(%)		12.3	8.2	26.3	4.4	48.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그 중에서도 연속취업형과 중단형의 경우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들 가운데서도 유난히 결혼 전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재취업형이나 지속적 비취업형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도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다. 빠른 재취업형이나 M자형은 결혼 전에는 취업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출산 후에 새롭게 취업을 선택한 사례들이 명확해진다. 더불어서 지속적 비취업형의 경우에는 이들이 처음부터 비취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비취업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유지 및 단절의 결과, 50%에 가까운 기혼여성들이 현재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여성들 가운데 소득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유형은 연속취업형으로 이들의 임금은 평균 156만원 수준이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유형은 M자형에 속하는 여성들로 이들의 평균소득은 88만원이었다. 연속취업형과 비교해 할 때, 약 1.8배가량 적은

수준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취업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현재 종사상 지위의 비교가 이루어졌다. 연속취업형과 무자녀취업형은 상용직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반면, M자형과 빠른 재취업형은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빠른 재취업형은 임시 및 일용직의 비율과 함께 자영 및 고용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동일한 재취업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M자형과는 차별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소규모 자본을 통한 창업의 사례가 빠른 재취업형에 다소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빠른 재취업형은 상용직, 무급종사자와 같은 다른 종사상 지위의 비율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다는 등 다른 유형과는 상이한 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유형들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이 자녀출산과 양육기를 거치면서 비취업 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의외로 길며, 직업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소위 '전업주부'의 수적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과 동시에 직업을 그만두는 혹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았다. 실제로 지속적 비취업형을 보게 되면, 연령으로는 어린자녀를 둔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이 있지만, 그 외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상 특별히 다른 유형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현재 많은 전업주부들이 교육수준이나 기타 자신이 보유한 인적자본으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세계의 선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출산시기에 부모중심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가, 결혼 전의 비교적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을 전후하여 직업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직까지 기혼여성의 보편적인 삶의 형태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자녀 출산과 양육기를 지난 이후에 재취업을 모색하는 M자형이

기혼여성의 일반적인 취업유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의 지적과도 일치한다(박경숙·김영혜, 2003; 박수미, 2006). 자녀출산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 재취업을 하는 M자형은 상대적으로 나이도 많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유형들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근 기혼여성 코호트를 중심으로 M자형의 변형으로 생각되는 빠른 재취업형(가파른 M자형)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빠른 재취업형은 아직 자녀출산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둘째 자녀를 계획하는 비율은 높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첫 출산시기나 둘째 자녀 출산까지의 간격이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길었고, 자녀수도 다른 유형에 비해 적었다. 즉, 빠른 재취업형과 M자형은 모두 자녀출산시기에 취업단절 후 재취업한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출산시기에 대한 조절방식은 상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빠른 재취업형이 아주 최근에 출산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이러한 특성은 1997년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서 출산율이 크게 낮아진 것과도 다소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낮은 출산율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유형은 연속취업형이다. 이 연구에서 연속취업형에 속하는 여성들은 현재 직업지위나 소득에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아직 자녀가 없는 여성들에 비해서도 취업경력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출산시기에 취업경력의 단절이 크지 않았던 이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을 꾸려감에 있어서도 비취업으로 남아 있거나 취업을 중단한 사례들(중단형, 지속적 비취업형)들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취업 여성집단 내에서도 직종과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상이한 경험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미시적인 수준에서도 확인해 주었다. 이 분석결과를 기초로 추정한다면, 자녀출산과 양육기를 충분히 지난 후에 재취업을 도모하는 M자형은 기혼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

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M자형과 빠른 재취업형을 보게 되면, 생애과정에서 일과 가족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순차적인 양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여성들이 일과 가족역할의 요구를 동시에 이루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일과 가족의 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의 하나로도 이해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M자형 이외에도 다양한 여성 취업과 비취업의 형태가 존재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도 여성의 취업조절의 형태는 다양하게 분화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가령, 지속적 비취업형에 포함된 대부분의 여성들과 중단형의 경우에는 추후에 재취업을 할 경우 M자형처럼 자녀양육기를 지난 이후에 취업으로 이행할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기혼여성의 상당수가 포진해 있는 지속적 비취업형이 과연 M자형처럼 평균 2명의 아이를 낳고 자녀양육기를 충분히 갖게 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또한 중단형에 속하는 여성들은 교육수준, 남편의 임금수준 등에서 M자형의 여성들과는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재취업을 감행한다고 했을 때, M자형처럼 임시 및 일용직이나 관련 직종 및 임금수준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이들 유형에서 나타나는 연령과 결혼코호트에서 차이이다. 기존의 M자형 취업형태는 다른 유형보다도 약간 선행하는 유형으로 생각되며, 기혼여성들이 취하는 대표적인 취업형태이기는 하나 멀지 않은 미래에는 기혼여성의 취업의 보편적인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전형적인 M자형태의 취업경로를 택하는 여성들은 연령대도 높았고, 대부분 1997년 이전에 결혼코호트에 속했다. 그에 비해 최근의 결혼코호트에서는 M자형을 비롯하여, 연속취업형, 빠른취업형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경로들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빠른 재취업형이나 연속취업형은 자녀출산이 이루어지는 중에 취업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M자형과는 상이하였다. 가령, 빠른 재취업형은 상대적으로 젊은 기혼여성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첫째 자녀 출산 후 바로 재취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생계에 필요하면 출산간격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취업복귀를 미루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이 M자형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또한 빠른 재취업형은 M자형처럼 취업단절을 경험하였지만, 이들이 선택하게 되는 직업의 종사상 지위는 무급종사자 및 임시일용직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 분포한다. 이는 빠른 재취업을 행함으로써 취업경력의 단절을 짧게 가져갈 수 있고 따라서 직업선택의 폭도 그만큼 다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 기혼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 행태를 조절하면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 3 절 자녀양육의 현황과 차별성

현대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논의되는 쟁점 중의 하나는 자녀양육의 문제이다. 제2절에서 논의한 내용, 즉 여성이 출산을 경험하면서 취업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현상 역시 결국은 자녀양육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여성은 취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여성은 취업을 중단하게 된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취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을 중단, 연기 혹은 포기함으로써 출산을 조절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즉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출산과 취업은 양립하기 어려운 일,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조절을 요구하는 일로 나타난다. 출산과 취업이라는 두 가지 일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설명하는 실질적 매개요인은 자녀양육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시간 늘리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절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를 사용하여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며 어떤 자원을 이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녀양육의 행태가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자녀양육 행태와 관련하여 부모가 희망하는 것과 실제 상황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입안의 기초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2세 이하 자녀를 맡기기 희망한 곳과 실제 맡긴 곳

이 절에서 사용하는 자료에서는 0~2세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아이를 맡기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과 실제로 아이를 맡긴 곳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자녀가 있는 총 3,267명의 기혼 여성 중 0~2세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는 791명이다. 이 중에서 취업 여성은 217명, 비취업 여성은 574명에 해당한다. 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자녀양육 행태에 대한 희망과 현실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취업 여성

총 217명의 취업 여성 중 약 89%는 0~2세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연령의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도 있고 둘째 자녀인 경우도 있다. <표 4-8>에는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2세 이하 자녀를 맡기고 싶은 곳과 실제로 맡긴 곳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0~2세의 어린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에 한하여 응답자가 자녀를 맡기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살펴보면, 부인 또는 남편(즉 자녀의 부모), 그리고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실제로도 기타 시설 이용보다는 친인척, 특히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높

게 나타난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기타 시설에 맡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부인과 남편 혹은 친인척이 돌보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자녀들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사례수에 비하여 실제로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긴 사례수가 많은 것에 비추어 보면, 보육시설을 원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굳이 맡길 이유가 없어서’, ‘아이가 너무 어려서’, ‘원하는 형태의 보육 서비스가 없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맡기기에 친인척보다 기타 보육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례수는 미미한 편이다. 기타 시설 중에서 선호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설기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설어린이집이나 기타 사설기관에 비하여 비용이 낮고 시설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부모들의 이용 만족도도 국공립 보육시설이 민간시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권정운·한유미, 2007).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급이 부족하여 여러 해에 걸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현재 보육시설의 약 85%는 민간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그 외로는 국공립 및 법인이 약 10%, 법인 외 시설이 4%, 직장보육시설이 1%를 차지한다. 즉 현실적으로 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수적으로 부족하다. 응답자들이 사설 어린이집과 놀이방을 자녀를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설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하여 이용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직장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소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맡긴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응답자인 취업 여성들의 직장에는 보육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4-8〉 취업 여성의 2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형태 선호도와 현황

구 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선호	맡긴 곳 (주간)	맡긴 곳 (야간)	선호	맡긴 곳 (주간)	맡긴 곳 (야간)
국공립 어린이집	7	8	-	5	2	-
사설 어린이집	3	10	-	11	20	-
놀이방	1	9	1	-	8	-
유치원	-	-	-	1	2	-
학원	-	-	-	-	-	-
직장보육시설	3	-	-	6	-	-
베이비시터	5	9	1	7	7	1
친정부모	20	29	12	14	17	4
시부모	21	34	4	10	19	8
친가 친척	1	3	-	-	3	1
외가 친척	-	1	-	-	2	-
본인 또는 남편	57	12	88	50	23	90
기타	-	3	2	1	2	1
사례수(N)	118			10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둘째 자녀가 0~2세인 경우, 자녀를 맡기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과 실제로 맡긴 곳의 전반적인 분포는 첫째 자녀일 때와 유사하다. 즉, 전반적으로 친인척에의 선호도와 실제 의존도가 높다. 직장보육시설을 희망하였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용하지 못한 점, 사설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의 경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사례에 비하여 실제로 맡긴 사례가 높게 나타난 점이 그러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보육시설보다는 친인척에게 0~2세의 자녀를 맡기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0~2세 영아를 맡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일대일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양육이 요구된다는 생

각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기타 시설에 맡기는 것보다 친인척에게 맡기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고 믿을 수 있으며 시간조절도 용이하다는 등의 이점이 고려된 결과일 수도 있다.

지난 1991년 1월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출산 직후부터 어린 영아를 맡는 보육시설이 법적으로 인가되었다. 그러나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여성가족부의 보육통계를 살펴보면, 전국 보육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2세 미만 아동의 수용정원은 189,454명인데 반하여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현원은 148,824명으로 나타난다.

이 중 대다수는 민간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 이는 2005년과 2006년 출생아수가 각각 약 40만 명 내외임을 감안할 때 정원과 현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인 이용 가능성과 이용도는 별도로 하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제공하는 현실을 보면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는 공유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어린 자녀를 돌보는 주요 양육자는 조부모인 것으로 보고되었다(Fuller-Thomson and Minkler, 2001; Gray, 2005; Vandell et al., 2003). 특히 저소득층에서 조부모 양육에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조부모의 손자녀 돌보기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닐 지 우려가 표명되기도 하였다(Gray, 2005). 최근 미국에서는 3세 미만 영아의 보육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생후 1세 미만 영아의 약 50%가 생후 3개월 이내에 보육시설에 맡겨진다고 보고되었다(박혜원, 2000).

실질적으로 친인척에의 의존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령 상호교환 관계에서 어떤 비용과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친인척, 특히 조부모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만일 대부분의 자녀양육이 조부모, 특히 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 의

존될 경우 생애주기에 관계없이 여성은 지속적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해야 하는 존재로 남을 수 있다.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조부모의 자발적인 의견에 의해 시작되었고, 감정적, 정서적 혹은 경제적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길어진 노년기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소일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보상 없이 상황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손자녀 양육은 오히려 노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녀양육에 있어서 친인척에의 의존이 높게 나타난다면,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의 경우는 자녀를 키워본 경험은 있으나 자녀를 키웠던 시기가 오래되어 기억이 새로울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자녀양육법이 변화된 면도 있다. 단순히 조부모이기 때문에 혹은 친인척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 외에 자녀양육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나. 취업 여성의 취업관련 특성별 분류

취업 여성의 취업관련 특성, 예를 들면 종사상 지위,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0~2세 자녀를 실제로 맡긴 곳이 어떻게 다르게 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4-9>는 종사상 지위,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따른 취업 여성의 분포를 보여준다. 응답자 중 취업 여성의 대다수는 상용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7시간으로 집계되었으며, 과반수가 주당 평균 47시간 이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0~2세의 자녀를 실제로 맡기는 곳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삼았다. 자녀를 실제로 맡기는 곳에 있어서는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표 4-9> 취업 여성의 취업 관련 특성별 분포

취업관련 특성	사례수(%)
종사상 지위	
상용직	136(63.0)
임시 및 일용직	81(37.0)
주당 평균 근로시간	
47시간 이하	129(59.5)
47시간 초과	88(40.5)
사례수(N)	217(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표 4-10>에는 여성의 종사상 지위와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0~2세의 첫째 자녀를 실제로 맡긴 곳이 제시되어 있다. 총사례수는 0~2세 자녀가 첫째자녀인 경우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표 4-9>의 사례수와는 다르다. 이 표에서 종사상 지위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보육시설보다 친인척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주간과 야간 모두 임시 및 일용직 여성들은 상용직에 비하여 본인이나 남편이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은 상용직에서만 나타난 반면 놀이방과 사설어린이집의 이용도는 임시 및 일용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상용직 여성은 임시직에 비하여 주간과 야간 모두 보다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저녁시간에는 종사상 지위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남편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상용직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0~2세 첫째 자녀를 맡기는 곳을 살펴보면 주간과 야간 모두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친인척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야간에는 전반적으로 부인이나 남편이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근로시간이 긴 경우는 상대적으로 친인척에의 의존비율이 높다.

〈표 4-10〉 2세 이하 첫째 자녀를 실제 맡긴 곳: 취업 특성에 따른 분포

구 분	종사상 지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상용직		임시직		47시간 이하		47시간 초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국공립 어린이집	8.9	-	0.0	-	7.9	-	4.8	-
사설 어린이집	8.9	-	6.9	-	9.2	-	7.1	-
놀이방	5.6	1.1	13.8	0.0	4.0	0.0	14.3	2.4
유치원	-	-	-	-	-	-	-	-
학원	-	-	-	-	-	-	-	-
직장보육시설	-	-	-	-	-	-	-	-
베이비시터	8.9	1.1	3.4	0.0	5.3	0.0	11.9	2.4
친정부모	27.0	11.2	17.2	6.9	22.4	6.6	28.6	16.7
시부모	25.8	11.2	37.9	13.8	31.6	14.5	23.8	7.1
친가 친척	3.4	-	0.0	-	4.0	-	0.0	-
외가 친척	1.1	-	0.0	-	1.3	-	0.0	-
본인 또는 남편	6.7	73.0	20.7	79.3	11.8	79.0	7.1	66.7
기타	3.4	2.2	0.0	0.0	2.6	0.0	2.4	4.8
사례수(N)	89		29		76		42	

주: 총사례수는 0~2세 자녀가 첫째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이는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7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1주일에 적어도 며칠은 야근을 하기 때문에 저녁시간에 부인이나 남편이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친인척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저녁시간에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친정부모와 시부모에 의존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47시간 이하인 경우는 시부모에게 맡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근로시간이 47시간이 넘는 경우는 친정부모에게 맡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를 통하여 근로시간이 긴 경우에는 친정과 가까이 살거나 친정부모가 함께 살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돕는 것은 아닌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거주 장소와 가구유형 파악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1> 비취업 여성의 2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형태 선호도와 현황

구 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선호	맡긴 곳 (주간)	맡긴 곳 (야간)	선호	맡긴 곳 (주간)	맡긴 곳 (야간)
국공립 어린이집	26	4	-	30	3	-
사설 어린이집	16	19	-	9	11	-
놀이방	7	6	-	5	7	-
유치원	3	3	-	7	2	-
학원	1	2	-	-	1	-
직장보육시설	3	-	-	-	-	-
베이비시터	12	3	2	8	-	-
친정부모	40	4	1	32	4	-
시부모	8	5	1	3	-	-
친가 친척	1	-	-	1	-	-
외가 친척	1	-	-	-	-	-
본인 또는 남편	172	241	285	194	261	289
기타	-	3	-	-	-	-
사례수(N)		290			28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다. 비취업 여성

총 574명의 비취업 여성 중 대다수는 0~2세 자녀가 1명 있는 경우(87%)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0~2세 자녀가 2명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1>에서 나타나듯이 자녀의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자녀양육 형태의 선호도와 실제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성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가령 비취업 여성이기 때문에 부인이나 남편이 자녀를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친인척에의 의존도는 낮다. 국공립 어린이집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하여 실제 이용도는 낮다. 전체적인 비율은 높지 않으나 비취업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보육시설 이용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다소 관찰된다. 이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이는 자신이나 남편이 주로 자녀를 돌보지만 부분적으로 기타 보육시설 이용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취업여성과 비교하면 자녀를 맡기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대한 응답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눈에 띈다. 가령, 취업 여성의 경우는 자녀를 맡기기에 바람직한 곳에 대한 응답으로 친정부모와 시부모가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비취업 여성은 자녀를 맡기기에 적합한 곳으로 시부모를 꼽은 경우보다 친정부모를 언급한 사례가 높다.

2.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맡기기 희망한 곳과 실제 맡긴 곳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에 적합한 곳이나 방법은 달라진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0~2세의 자녀를 지닌 부모와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지닌 부모들은 자녀를 맡기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곳과 실제로 맡기는 곳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총 3,267명의 기혼여성 중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여성은 총 964명이다. 이중에서 취업 여성은 348명, 비취업 여성은 616명으로 집계되었다.

가. 취업 여성

총 348명의 취업 여성 중 약 92%는 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녀를 맡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과 실제로 맡긴 곳에 대한 자료가 <표 4-12>에 제시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2세 이하 자녀에 비하여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례수가 현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저녁 시간에 나타나는 약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인척에의 의존 경향도 낮아진다.

〈표 4-12〉 취업 여성의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형태 선호도와 현황

구 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선호	맡긴 곳 (주간)	맡긴 곳 (야간)	선호	맡긴 곳 (주간)	맡긴 곳 (야간)
국공립 어린이집	24	14	-	23	15	-
사설 어린이집	26	73	1	21	62	-
놀이방	3	12	-	3	5	-
유치원	26	52	-	38	67	-
학원	1	9	-	1	12	-
직장보육시설	7	2	-	6	1	-
베이비시터	5	1	1	7	-	2
친정부모	17	1	8	17	1	5
시부모	12	3	11	4	3	7
친가 친척	-	-	-	1	1	-
외가 친척	2	1	1	1	-	-
본인 또는 남편	46	2	149	46	1	154
기타	2	1	-	-	-	-
사례수(N)	171			16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이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보살핌에서 벗어나서 사회성과 기타 학습을 해야 하는 필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전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비하여 실제 이용률이 낮은 반면 사설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학원 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경우에 비하여 실제 이용이 높게 나타난다. 직장보육시설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하여 실제 이용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0~2세의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장보육시설은 일정 연령 이상의 어린이만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출생순위에 따른 보육형태 선호도와 실제 현황은 큰 차이가 없다.

나. 취업 여성의 취업관련 특성에 따른 분류

여성의 종사상 지위와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연령의 첫째 자녀를 실제로 맡기는 곳을 살펴보았다. 우선 취업관련 특성에 따른 여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용직과 임시 및 일용직의 분포가 비교적 유사하다(표 4-13 참조).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7시간 이하인 경우가 과반수에 해당한다.

〈표 4-13〉 취학 전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취업 관련 특성별 분포

취업관련 특성	사례수(%)
종사상 지위	
상용직	169(48.6)
임시 및 일용직	179(51.4)
주당 평균 근로시간	
47시간 이하	207(59.5)
47시간 초과	141(40.5)
사례수(N)	348(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표 4-14>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의 종사상 지위나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상관없이 3세 이상 학령 전 자녀양육은 전반적으로 보육시설에의 의존이 높게 나타났다. 상용직 여성은 주간에 직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관찰되고 임시직 여성은 주간에 본인이나 남편이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관찰되었다. 저녁시간에는 대부분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만, 그 비율은 상용직에서 조금 낮게 나타난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긴 여성들의 경우는 저녁시간에 본인이나 남편이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낮고 대체역할은 주로 시부모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어린 자녀 (0~2세)를 둔 기혼여성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

이다.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 중 근무시간이 긴 경우는 야간에 친정부모에의 의존이 높게 나타났는데, 자녀의 연령이 3세부터 학령전기인 경우에는 야간에 시부모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자녀양육의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관계의 역동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표 4-14>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실제 맡긴 곳: 취업 특성에 따른 분포

구 분	종사상 지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상용직		임시직		47시간 이하		47시간 초과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국공립 어린이집	9.6	-	6.8	-	9.7	-	5.9	-
사설 어린이집	33.7	0.0	51.1	1.1	44.7	0.0	39.7	1.5
놀이방	7.2	-	6.8	-	7.8	-	5.9	-
유치원	36.1	-	25.0	-	29.1	-	32.4	-
학원	4.8	-	5.7	-	3.9	-	7.4	-
직장보육시설	2.4	-	0.0	-	1.0	-	1.5	-
베이비시터	1.2	1.2	0.0	0.0	0.0	0.0	0.0	1.5
친정부모	1.2	8.4	0.0	1.1	1.0	6.8	0.0	1.5
시부모	2.4	6.0	1.1	6.8	1.0	2.9	1.1	11.8
친가 친척	-	-	-	-	-	-	-	-
외가 친척	0.0	0.0	1.1	1.1	0.0	0.0	1.5	1.5
본인 또는 남편	0.0	84.3	2.3	89.8	1.0	90.3	1.5	82.4
기타	0.0	-	0.0	-	1.0	-	0.0	-
사례수(N)	83		88		103		68	

주: 총사례수는 3세-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가 첫째아가 아닌 경우를 제외된 것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다. 비취업 여성

총 616명의 비취업 여성 중 약 84%는 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1명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5>은 이들이 자녀를 맡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과 실제로 맡긴 곳에 대한 분포를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맡기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곳

과 실제 맡기는 곳의 차이가 거의 없다. 취업 여성과 비교하여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낮 시간에 친인척에의 의존이 거의 없이 부인이나 남편 혹은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과 같은 이분화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종합하여 살펴보면,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여성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다양한 보육시설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질과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15〉 비취업 여성의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형태 선호도와 현황

구 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선호	맡긴 곳 (주간)	맡긴 곳 (야간)	선호	맡긴 곳 (주간)	맡긴 곳 (야간)
국공립 어린이집	54	26	-	43	23	-
사설 어린이집	42	95	-	43	95	-
놀이방	4	7	-	4	9	-
유치원	97	138	-	70	109	-
학원	6	27	-	5	28	-
직장보육시설	2	-	-	1	-	-
베이비시터	4	2	1	4	-	-
친정부모	28	-	2	26	-	3
시부모	6	-	1	4	-	2
친가 친척	-	-	1	1	1	1
외가 친척	-	-	-	-	-	-
본인 또는 남편	95	42	334	100	36	297
기타	2	3	1	2	2	-
사례수(N)	340			30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3. 아버지의 자녀양육 분담: 여성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아버지는 경제부양, 어머니는 가사와 자녀돌보기가 성역할 규범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다른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유사하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집안일과 가사는 기계기술의 발달에 의존하여 간소화될 수 있지만 자녀양육은 대면적인 접촉과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자녀양육을 전담하는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러나 보육시설이나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한 국가의 경우에는 여성의 이중부담과 자녀양육이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한국사회의 경우 자녀 출산과 양육시기를 전후하여 여성의 취업이 단절된다는 점과 자녀양육 문제가 저출산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자녀양육 현황은 학문적, 정책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 내에서의 자녀양육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자녀양육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논의와 실질적 예산 투입도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확립되기 이전에는 아직까지도 가족이 자녀양육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족 내에서 자녀양육은 주로 누가 담당하고 있으며, 부부간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자녀양육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이중부담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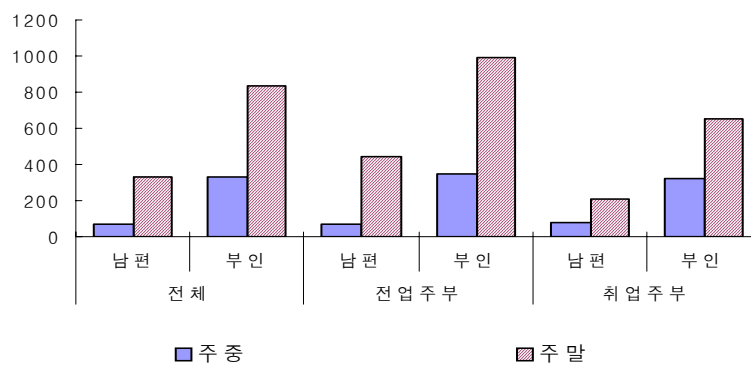
가. 부부의 취업 관련 특성에 따른 분담현황

자녀분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은 “귀하와 남편은 평소 집안일과 자녀돌보기를 하루에 몇 시간쯤 하십니까? 평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휴일)을 구분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다. 이에 대한 응답은 모두 분 단위로 계산하였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대하여 각각 응답한

사항은 주말에 투입한 시간으로 합산하였다. 우선적으로 자녀의 수나 연령, 부인의 취업 여부 등과 같은 특성에 관계없이 현재 유배우 상태인 응답자 총 3,267명을 대상으로 남편과 부인이 자녀양육과 가사에 투입한 시간을 살펴보았다(그림 4-11 참조).

주중에 남편이 가사와 자녀돌보기에 투입한 시간은 하루 평균 72분인 반면 부인은 하루 평균 333분이다. 즉 평일에 가사와 자녀돌보기에 투입한 시간이 성별에 따라 약 4시간가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에는 남편의 경우 평균 334분, 부인은 834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에는 남편과 부인 모두 가사와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현저히 늘어나지만, 여전히 여성이 약 2배가량 많은 시간을 보낸다. 부인의 취업 여부에 따라 자녀양육과 가사에 소요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비취업 여성(1,752명)에 비하여 취업여성(1,515명)이 평일에 가사와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시간은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남편의 경우는 부인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양육과 가사에 소요하는 시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림 4-11] 부인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중과 주말의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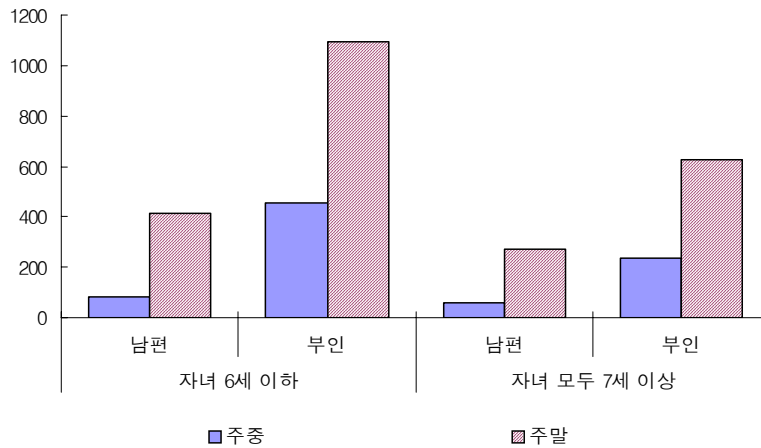
이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논의된 바와 같이 취업 여성의 이중부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남성의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을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주말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성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에 비하여 여성과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과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은 길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취업 여성에 비하여 비취업 여성의 자녀양육 및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길다. 반면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비취업 여성의 남편이 취업 여성의 남편에 비하여 가사와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길다. 이는 비취업 여성은 취업 여성에 비하여 주말에도 자녀양육과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남편의 참여정도도 동시에 길어지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나.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분담현황

이 조사에서는 자녀양육과 가사를 함께 묶어서 질문하였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투입한 시간만을 분리하여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특성에 따라 자녀양육과 기타 가사에 소요하는 시간이 차이가 날 것으로 가정하고 자녀의 연령과 수에 따른 소요시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가 1명이라도 6세 이하인 경우(1,441명)와 자녀가 모두 7세 이상인 경우(1,826명)로 나누었다.

[그림 4-12]를 살펴보면 왼쪽 부분은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오른쪽 부분은 자녀가 모두 7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 부모 모두 자녀양육과 가사에 소요하는 시간이 적어진다. 예를 들면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어머니가 하루 평균 자녀양육과 가사에 소요하는 시간은 거의 8~10시간에 가깝다. 반면 자녀가 모두 7세 이상인 경우에는 4~5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림 4-12] 자녀의 연령에 따른 주중과 주말의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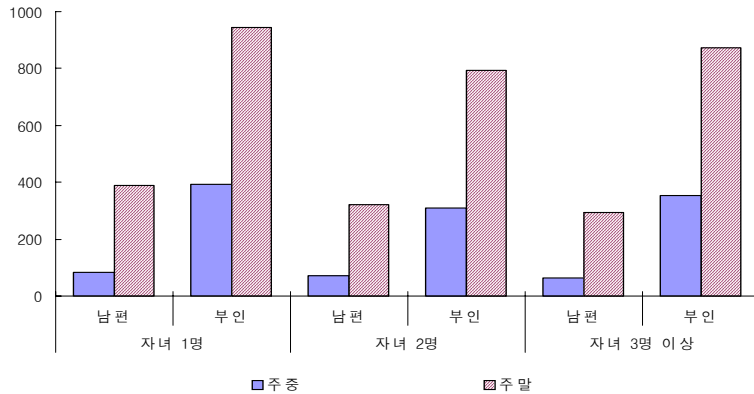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유치원이나 학원, 학교 등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어머니의 집중적인 돌봄이 덜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가 자녀양육과 가사에 투입하는 시간도 약간 변화하긴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다. 자녀의 수에 따른 부모의 자녀양육과 가사에 소요하는 시간은 [그림 4-13]과 같다. 자녀의 수가 많아지면 아버지의 자녀양육과 가사에 소요하는 시간은 주중과 주말에 관계없이 점차 낮아진다. 반면 어머니의 소요시간은 주중과 주말 모두 자녀가 1명인 경우(705명)에 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2,179명)에 소요시간이 짧아졌다가 자녀가 3명 이상(383명)이 되면 소요시간이 다시 약간 길어진다.

구체적인 자녀양육에의 분담 현황을 살펴보기에는 이 절에서 사용한 자료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질문 자체가 자녀양육과 가사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는 점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4-13] 자녀의 수에 따른 주중과 주말의 가사와 자녀돌봄 시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또한 응답자가 기혼여성으로써 배우자의 소요시간에 대한 응답도 여성에 의존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존 논의들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성의 취업여부, 자녀의 수와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은 주중과 주말에도 끊임없이 자녀양육과 가사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약하고 ‘어린 자녀는 어머니 혹은 가족이 키워야 한다’는 가치관이 내재된 한국사회에서 집안 내의 분담마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출산과 취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국면에 이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 4 절 혼인상태의 변화와 재혼에 관한 태도

여성의 혼인상태 변화는 여성의 가임력 및 가임력의 단축이라는 측면에서 인구학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서구에서는 이혼을 결혼과 가족을 둘러싼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출산행위와 직간접적인 연관성

이 있다고 보았다. 우리보다 동거문화가 보편적인 스웨덴이나 프랑스가 출산율이 매우 낮았던 시기에 동거 및 이혼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난 30여 년간 이혼율이 꾸준히 증가해 온 바 있다. 1997년의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혼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혼인구의 크기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이혼인구 내에서도 다양성이 관찰된다. 이혼이 상이한 연령과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불문하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년 남성의 사망률이 특히 높은 한국사회에서는 사별 역시 혼인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생애사건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혼 및 사별연구가 축적되지 못했던 한국사회에서는 혼인상태의 변화나 재혼문제, 가족생활의 변화와 자녀양육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들어 이혼인구의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혼에 관한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대다수의 연구들은 이혼의 원인과 과정, 이혼적응 등 개인의 이혼경험과 그 적응과정의 특이성을 밝히는데 초점이 있었다.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혼인상태의 변화가 초래하는 다양한 파장과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다. 여성의 출산력 및 가임수준도 상당부분 이러한 혼인상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혼인상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단일시점에 이혼 및 사별인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한 여성 개인의 수준에서 살펴보게 되면 여성은 다양한 혼인상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들은 혼인력(marital history), 혹은 결혼궤적(marital trajectory)로 개념화 할 수 있다(Marks, 1996). Marks(2007)는 미국사회처럼 이혼과 재혼율이 높은 사회에서는 혼인력 경로에 따라 생애과정도 달라지고 그에 따른 결과물도 상이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 여성의 출산력도 이러한 결혼경로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절에서는 '2005년 전국 결

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3,802명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혼인상태의 실태와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여성들의 연령분포와 합계출산율을 비교해 보고, 혼인상태의 변화가 출산율에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혼인상태와 그 분포

지난 2005년도 조사자료의 전체대상 3,802명 중에서 결혼경로에 관한 정보가 일관되지 않는 2사례를 제외하고 3,800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분석은 3,800명의 혼인력, 이혼력, 사별력의 조합을 가지고 유형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결혼을 지속한 경우, 재혼한 경우(이혼 후 재혼, 사별 후 재혼), 이혼 후 무배우, 사별 후 무배우, 결혼과 이혼을 2차례 이상 한 경우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4-16>을 보면, 20~44세 이혼 여성의 표본에서 아직까지는 첫 번째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의 92%가 약간 넘는 여성들은 첫 번째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표 4-16> 기혼여성의 혼인상태 변화 유형

현재 혼인상태	유형	명 (%)	평균연령	총출생아수
유배우	유배우 지속	3,530 (92.8)	35.45	1.76
	결혼→이혼→재혼	46 (1.1)	38.96	1.8
	결혼→사별→재혼	13 (0.6)	38.69	2.15
이혼	결혼→이혼	161 (4.2)	38.01	1.60
	결혼→이혼→재혼→이혼	2 (0.1)	36.01	2.0
사별	결혼→사별	48 (1.2)	40.10	1.96
전체		3,800(100%)	35.6(5.26)	1.76(.76)

주: 혼인상태 변화 유형별 연령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혼인상태의 변화를 겪는 여성은 모두 271명으로 분석대상 여성의 약 7%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첫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 사례는 총 209명이며 이 중에서 두 번째 결혼을 이미 시작한 사례가 46명 그리고 아직 이혼 상태로 남아 있는 사례가 161명이었다. 나머지 2명의 사례는 두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이미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여성들의 연령이 20~44세로 비교적 젊은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별한 사례도 목격되었다. 총 61명이 사별로 첫 번째 결혼을 마감하였는데, 이 중에서 13명은 재혼으로 두 번째 결혼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각 유형별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여섯 가지 유형 중에서 유배우 지속형은 평균연령이 가장 어리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별하여 아직까지 무배우 상태로 남아 있는 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별 연령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첫째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가장 어리게 나타난 것은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아직 결혼기간이 길지 않은 여성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의 조이혼율로 볼 때 유배우 지속형 가운데 일정 비율은 앞으로 혼인상태의 변화를 겪을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이들의 결혼궤적이 앞으로 어떻게 분화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이혼과 사별을 겪은 여성들의 경우에도 앞으로 이들이 또 다른 혼인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출산행위도 그러한 새로운 혼인상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표 4-16>에는 총출생아수가 비교되어 있다. 결과로 보면, 관찰시점까지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가 평균 총출생아수 1.60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에 비해 사별 후에 재혼을 한 경우가 총출생아수가 가장 많아 2.15 수준이었다. 이는 전체 평균인 1.76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표 4-16>에서 이혼 후 재혼, 다시 이혼한 불연속형에서 높은 출생아수가 관찰되었는데, 이 경우는 사례수가 2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분석결과만을

가지고서는 해석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각 유형별 비율에서 나타나듯이 비교적 젊은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이혼이나 사별을 겪은 여성들 가운데 재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재혼인구가 증가한다고는 하나, 이는 이혼이나 사별인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 분석 결과는 이러한 혼인상태의 변화로 자녀를 갖지 못하거나 혹은 갖더라도 자녀수가 극히 제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혼 및 사별하여 현재 무배우 상태인 여성들의 재혼계획 및 출산계획에 대해 살펴보았다.

2. 편모의 재혼에 대한 태도 및 출산계획

지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에서 관찰시점에 무배우 상태로 나타나는 응답자는 211명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재혼계획 및 재혼 후의 출산 의사를 물었고, 이에 대한 기술분석 결과를 <표 4-17>에 제시하였다.

<표 4-17> 무배우 여성의 재혼계획 및 재혼 시 출산계획

구 분	내 용		
재혼 의향	있다 (50)	없다 (155)	
재혼거부 이유			
1 순위	결혼생활을 다시하고 싶지 않아서		
2 순위	사회적 통념상 바람직하지 않아서 마땅한 배우자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		
재혼 후 출산 의향	있다 (6)	없다 (39)	모르겠다 (5)
재혼 시 출산 거부 이유			
1 순위	출산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아서(18명)		
2 순위	계획한 만큼 자녀를 이미 다 낳아서(6명) 현재 자녀를 키우는데 전념하고 싶어서(5명)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원자료.

문항에 대한 응답자 206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무배우 여성 가운데 앞으로 재혼을 하겠다는 응답은 50명에 불과하였고, 그 중에서 4분의 3 이상은 앞으로도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재혼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재혼을 거부한 주요 이유로는 결혼생활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에게는 결혼제도에 편입될 때 발생할 비용을 혜택보다 더 크게 인식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우선 2~3순위로 나타난 응답을 살펴보면, 이들이 지각하는 비용의 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대체로 사회적 시선과 편견에 대한 걱정에 대한 내용이었다. 한번 이혼이나 사별을 한 이후에 다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아간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읽어볼 수 있다.

재혼 후의 추가출산 계획에 대해서는 재혼의사가 있는 51명 중 39명이 '없다'에 대답하였고, 5명은 '모르겠다'고 하여 응답을 유보하였다. 이들이 재혼 후 출산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주요 이유는 여성들 스스로가 '나이가 많아서'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별이나 사별을 겪은 후에 재혼을 하게 될 경우 여성의 연령이 일반적인 출산연령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재혼 시 출산을 꺼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계획한 만큼 이미 다 낳아서 혹은 현재 자녀를 키우는데 전념하고 싶어서도 2~3순위 정도로 나타난다. 기혼여성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소자녀 의식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재혼가족과 같이 불안정한 제도에서 새로운 출산이 반갑지 않게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관념이 반영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해체 후 재혼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 5 장 가족생활 변화에 따른 향후 정책과제

제 1 절 과거 정책의 개관

과거 한국의 인구정책은 인구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은 지난 1961년 국가시책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된다(권태환·김두섭, 2002).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대상은 시기별로 변화하였는데, 1960년대에는 농어촌 지역주민에 치중하여 ‘3자녀 갖기’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는 ‘2자녀 갖기’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주요 대상을 도시 영세민과 직장근로자로 확대하였다. 이어서 1980년대 초반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임연령층으로 진입하는 현상을 인식하여 출산억제정책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20~29세 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지난 198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인 2.1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는 인구억제정책이 유명무실해졌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인구억제정책은 사실상 폐지되고 인구 자질향상과 복지증진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렇듯 짧은 시간에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야기한 인구억제정책은 성공적인 예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관찰되는 저출산 현상을 계기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출산이 다가올 현실을 예측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 비판되기도 한다.

인구억제정책과 더불어 인구분산정책과 인구자질향상정책도 추진되었다. 인구분산정책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사업과 인구재배치사업이 있다. 이는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일어난 과잉도시화와 인구밀집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60년부터 1970년까지 서울 인구는 연평균 8.1%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는 같은 기간 한국 전체 인구증가의 50.7%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권태환·김두섭, 2002). 따라서 서울의 인구과잉을 분산하기 위하여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확대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인구재배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실 때문에 인구분산정책은 그다지 성공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정부기관 및 기타 국책기관 등의 이전이 논의된 바 있다.

제 2 절 새로마지 플랜 2010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과거 인구관련 정책과 외국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결과,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다(보건복지부, 2005).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는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인프라 구축,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제시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시로는 방과 후 학교 확대, 0~4세 영유아 아동의 보육비 지원 대상 및 비율 확대, 다자녀 가정에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불임부부지원 및 저소득층 산모도우미 파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등이 대표적이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새로마지 플랜의 자녀양육부분 정책 개관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연구회 정책자료.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부문에서는 만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지원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연계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산전후 휴가급여 확대, 육아휴직대상 자녀연령을 기존의 만 1세에서 만 3세로 확대, 배우자 출산간호휴가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이 있다.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부문에 있어서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 지역사회 빈곤 및 결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가 제안되었다.

위 정책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정책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제언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출산관련 정책대상이 아동, 여성(어머니),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여성의 특성(임산부, 취업여부)에 따라, 가족의 소득수준 및 기타 특성에 따라 총망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아동의 연령을 신생아기, 만 0~4세, 만 5세, 학령기로 구분하여 신생아기에는 보건 의료 서비스

중심, 만 0~4세의 경우는 아동수당 지원과 민간보육시설에 지원금 보조, 만 5세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종일반 및 연장 운영 등), 학령기에는 방과 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도입 등이 있다.

여성의 특성에 따른 정책으로는 임신부 혹은 가임기 여성에게 출산, 양육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불임부부 지원을 하는 것이 제언되었다. 취업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유산 및 사산 휴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출산 및 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등이 있다. 가정의 특성은 소득수준, 자녀의 수, 입양가정, 장애아 가정 등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차등적 육아지원 보조금과 산모도우미 및 영양상태와 건강관리 등 경제적인 지원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에는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예: 국민임대주택 우선권, 국민주택기금 마련 대출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등이 제시된다. 입양 가정은 육아시설 지원,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등이 있고 장애아 가정 역시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이 제시된다.

위에서 요약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현재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휴직 활성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 장려 등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일과 가족의 양립, 보육환경의 개선과 함께 민간과 기업차원에서도 여성의 다중역할수행을 돕고,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시행하게 된다. 영유아보육법 제정(1995년), 직장탁아의 의무화와 같은 법적 의무사항이 늘어나고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육아시설들을 확충하는 추세이다. 다만, 이러한 기업차원의 보육과 직장육아시설을 갖추는 것이 친가

즉정책과 기업이미지 개선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된 경향도 있어 실제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⁷⁾. 실제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좋은 시설의 이용에서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보육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맡기는 시설들이 몇 년 사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수준이다. 매체를 통해 어린이집의 위생 사고, 안전 및 화재사고에 대한 내용들이 전파되었고, 또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어린이집 및 보육, 영유아 교육시설들의 비용담합, 폭리문제도 최근 들어 자주 매체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공공보육과 양육의 사회화를 위해 거쳐 가야 하는 관문이기도 하겠으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공공보육의 문제점들이 여성의 전통적인 가족역할과 ‘모성신화’를 강화하는 담론을 생산할 개연성도 아주 크다.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여부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따르면 출산 및 양육관련 제도와 시설에 대한 인지여부와 이용여부는 다음과 같다(표 5-1 참조).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제도는 출산 전·후 휴가제도이며 직장보육시설, 기업체 학비보조, 육아휴직제도 순서로 나타난다.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제도는 가족 간호휴가제도와 보육정보센터, 시차별 출퇴근제도이다. 이용경험

7) 2003년 9월 서초동에 이어 2004년 6월 일산과 분당에 잇따라 세워진 푸르니 어린이집은 이들 6개 회사가 공동출자한 푸른보육경영이 운영하는 직장 보육시설이다. 이처럼 대규모 주거지역에 직장보육시설이 새롭게 운영된 이유는 기업들이 나서서 시설과 보육료, 믿을만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내 어린이집의 장점과 회사가 아닌 집 근처에서 운영되는 민간 보육 시설의 장점을 살리자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A은행의 경우 수익 원을 들여 회사에 어린이집을 설치했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는 3명에 불과하였다. 부모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시내로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번거로웠기 때문이다(한국경제신문, 2006년 9월 10일자)

유무는 방과 후 교육, 유아 교육비 지원, 기업체 학비보조, 출산 전·후 휴가제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마저도 전반적으로 낮다. 이처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영유아 보육의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혜택은 아직 미비한 반면, 유아 교육비 지원과 기업체 학비보조와 같은 경제적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높았다.

〈표 5-1〉 출산 양육관련 제도/시설의 인지여부 및 이용경험여부

구 분	인지여부		이용경험 유무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사례수
보육정보센터	18.3	81.7	7.3	92.7	695
유산·사산휴가제도	27.1	72.9	1.4	98.6	1,030
출산 전·후 휴가제도	89.5	10.5	10.4	89.6	3,404
육아휴직제도	71.5	28.5	2.6	97.4	2,719
가족 간호휴가제도	13.9	86.1	3.3	96.7	528
시차별 출퇴근제도	23.6	76.4	4.3	95.7	898
시간제 근무제도	50.8	49.2	2.2	97.8	1,931
영아(0~2세) 보육료 지원	51.8	48.2	4.5	95.5	1,970
유아(3~5세) 교육비 지원	67.5	32.5	13.4	86.6	2,565
방과 후 교육	55.3	44.7	15.1	84.9	2,103
기업체 학비보조	73.1	26.9	10.9	89.1	2,778
직장보육시설	73.4	26.6	0.7	99.3	2,790
사례수(N)	3,802				

자료: 이삼식 외(2005a:495).

물론 자녀양육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의 실제이용도도 10%대로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행되는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인 활동도는 높게 나타났다. 앞선 제4장의 자녀양육 현황 및 여성의 취업유형의 분석에서 출산을 앞둔 기혼여성들이 대부분 취업단절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로 출산전후 휴가제도, 직장보육시설, 그리고 육아휴직제도가 잘 운영되더라도 실제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원인은 기혼여성의 대규모 직장탈피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성의 취업포기로 발생

하는 추가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개별 가정에서는 정부 및 기업차원의 재정적 지원에 더 의존하는 상황을 읽어볼 수 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을 어떻게 확대하고 실질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가 당면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제 3 절 외국의 출산장려 및 가족정책

초저출산 현상은 한국 뿐 아니라 서구 유럽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관찰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와 이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고민도 공유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싱가포르, 대만, 일본 및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장려 및 가족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체계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천연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노동력에의 높은 의존도, 짧은 시기에 이룩한 급속한 경제발전, 경제발전 과정에서 시행한 출산억제정책, 그리고 최근 초저출산을 경험하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급선회한 점 등이 한국과 유사하다. 싱가포르의 출산관련 정책은 1966년에 출산억제정책을 도입한 이후 각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출산억제정책이 도입된 이후 약 10년 동안은 2명의 자녀 출산이 이상적인 지향점으로 설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세금감면, 주택 공급, 자녀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이 시기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도 이루어

졌으며 교육기회 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증가하였다(Straughan, 2007).

성공적인 출산억제정책의 결과 1980년대 초반에 싱가포르는 합계출산율이 2.1 인 대체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에는 출산관련 정책이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가령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의 경우는 여전히 2명의 자녀를 낳을 것을, 반면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은 계층의 경우에는 더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 장려되었다. 즉 자녀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부모들은 2명 이상을 낳을 것을 장려한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저하하였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1986년에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한 기구를 폐지하고 출산관련 정책을 출산장려로 급선회하였다.

지속적인 출산력 저하를 비롯하여 만혼, 독신 증가 등을 경험함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가족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홍보하고 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자녀의 소중함, 자녀가 주는 정서적 및 심리적 보상 등을 강조함으로써 자녀의 가치를 재구성하는 노력을 하였다. 더불어 결혼 적령기가 지났으나 독신생활을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가족의 소중함, 인생에 있어서 사랑하는 동반자와 결혼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경험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를 실시하였다. 가치관 교육에 덧붙여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보상책(예: 세금, 주택, 출산시 지원금, 자녀양육)도 제공하였다(일본내각부, 2006). 이는 출산억제정책을 실시하던 시기에 제공되었던 각종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반대되는 형태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저하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에 주목하여 양육에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였다. 보육시설 지원과 출산휴가 및 모성휴가 제도 도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시기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Straughan(2007)는 다음의 몇 가지 비

판을 하고 있다. 즉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에 주목하여 모성휴가,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자녀양육의 주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여실히 반영한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공급을 위하여 여성의 교육과 취업기회를 확대하였고 현실적으로 맞벌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을 야기한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여성은 일과 가족 중에 선택을 하게 되며, 대다수의 젊은 여성들은 취업보다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된다. 또한 자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많이 낳을 것을 권유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오히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부여하는 역효과를 야기하였다. 자녀양육의 개념이 정교화되고 요구되는 사항은 많아졌으며, 이는 곧 여성의 책임으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지난 2000년부터는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서 가족시간(family time), 자녀양육의 다양한 자원(예: 아버지, 조부모), 일과 가정 양립, 그리고 각종 경제적인 지원 제공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 출산장려정책의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아버지의 역할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출산 이후 3일간의 남성휴가가 공식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4년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함에 따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도록 하였다. 양육의 다양한 자원으로 정부가 제시한 것은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과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한 가정에 세금 혜택 제공, 조부모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3대가 함께 사는 주택공급 혹은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조부모에게 세금 혜택 등이 있다. 경제적 지원은 출산 시에만 제공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일정 연령까지 꾸준히 제공되는 방향으로 확대하였다. 출산휴가 및 모성휴가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함과 동시에 기업에게도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활성화를 추구하

고 있다(일본내각부, 2006).

위와 같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의 실질적인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Straughan(2007)는 몇 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적으로 공유된 일(paid work)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가정(family)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모순된다는 점이다. 즉 일은 완벽한 충실도와 몰입을 요구한다. 성과에 근거한 보상체계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가정, 특히 자녀양육 역시 완벽한 몰입과 집중적인 돌봄 노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은 어느 사회에서나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에게는 일-가정 양립이 핵심적인 갈등요인으로 떠오른다.

두 번째로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모순적인 가치관이다. 여성의 취업은 과거에 비하여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으로 변화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노동력이 요구되고 생활수준의 향상 때문에 각 가구에서도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수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여성에게 주어진다. 이에 대하여 여성은 다양한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슈퍼 우먼’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만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개인의 부족한 능력 탓으로 돌려지고, 이런 경우에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요구된다. 일과 가정이 요구하는 비용과 제공하는 보상은 성격이 다르다. 즉 일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보상(예: 돈)을 제공한다. 반면 가정, 특히 자녀양육은 장기간의 투자를 요구하며 보상도 가시적이기 보다는 내재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과 가정 중에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일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엄청난 경제적, 감정적인 비용이다. 이는 한국과도 유사한데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입시체제의 전 과정을 자녀와 함께 겪어가며 그 결과를 ‘자녀양육의 성공’으로 평가받는 현실에 대한 감정적인 비용이 여성들에게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사례는 국가가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는 정책의 전형을 볼 수 있게 한다. 싱가포르의 가족정책은 서구의 가족정책에서 그 모형을 가져오면서도 ‘가족가치관의 증진’과 자녀양육에서의 다양한 양육보조자(아버지, 외국인 보모, 조부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아직은 이러한 가족정책의 효과를 언급하기에는 이르기는 하나, 서구사회의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성평등한 사회와 저출산 극복의 측면에서는 일보전진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싱가포르의 상황이나 정책적 색깔은 국가규모가 작고 정치적으로도 단일적인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 싱가포르와 유사한 유교문화권이기는 하나 정치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고 인구규모가 큰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2. 대만

대만 역시 한국과 싱가포르처럼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시행하다가 인구고령화의 문제로 최근 출산정책을 출산장려책으로 전환하게 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대만에서도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경쟁력의 의존도가 높았고 때문에 개별 가정에서 자녀양육은 가족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된다. 때문에 이러한 개별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편으로는 자녀양육의 경제적·환경적 부담을 국가 차원에서 감소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친가족문화,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여성들의 출산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런데, 과거 국가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경험했던 대만의 경우 국가가 출산장려라는 미명하에 재차 개별가정의 선택권에 개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욱이 인구밀도가 높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시책은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언급하더라도 충분한 여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출산을 둘러싼 국가적인 정책방안이 국가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이자 여성의 출산행동 및 몸에 대한 국가 통제로 인식되면서 여성학자를 비롯한 정치적으로 국가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있었다.

〈표 5-2〉 대만 출산력의 변화, 1950~2006

년도	총출생아수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1950	323,643	43.3	6.03
1960	419,442	39.6	5.75
1970	394,015	27.2	4.00
1980	413,177	23.4	2.52
1990	337,042	16.6	1.81
2000	307,200	13.8	1.68
2001	257,886	11.7	1.40
2002	246,758	11.0	1.34
2003	227,447	10.1	1.23
2004	217,685	9.6	1.18
2005	206,465	9.1	1.12
2006	205,720	9.0	1.12

출처: Lee and Chuang(2007).

실제 대만사회의 언론이나 출산관련 담론들은 국가권력의 확대를 우려하며,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을 표시하였다(Lee and Chuang, 2007). 이들은 국가의 저출산 정책이 ‘전통적이며 보수적이 가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기존의 개혁정책과 정치노선에서 불합치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가 하면, 대만의 환경단체에서는 경제적인 논리 하에 저출산 정책이 주도됨에 따라, 과거 경제개발위주의 정책이 가져왔던 사회모순, 부정적 측면들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인구증가정책으로 국토가 제한적인 대만사회에 가져 올 수 있는 환경파괴와 삶의 질 저하 등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다가올 지식 기반사회에서 인구의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증가가 더 우선됨을 이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여론의 압력을 받아 대만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그리고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입안하게 된다. 핵심적인 과제는 자녀양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공적 보육시스템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건강 및 보건정책과 기업에도 친가족적인 정책들로 보완하는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3. 일본

일본의 사례는 앞서 대만의 사례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서구식 저출산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일본은 지난 1994년에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엔젤 플랜’을 수립하였다. 육아를 부부와 가정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기업, 국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꾀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립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육시설의 확대, 영아보육 및 연장보육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보급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5년으로 계획되었던 엔젤 플랜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는 ‘신(新)엔젤 플랜’이 실시되었다. 신엔젤 플랜은 양성평등과 근로환경 개선을 강조하였다(Atoh and Akachi, 2003).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출산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실에 직면한 정부는 2003년에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2005년에는 관계 각료와 전문가로 구성된 ‘저출산사회대책추진회의’를 결성하였다. 관련 전

문가, 지방자치단체장, 중앙정부의 각료 등이 함께 모여 기존의 저출산 관련 정책을 고찰하고 논의한 결과 2006년 새로운 저출산대책이 결정되었다. 새로운 저출산대책에서 제시한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 전체의 의식개혁과 아동과 가족을 소중히 하는 관점에서 보육정책을 강화하고 아동의 성장에 따라 연령별 육아지원책을 제공한 것이다(NIPSSR, 2003).

사회 전체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가족과 출산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족과 지역사회, 기업, 국가가 모두 협조하여야 함을 부각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가족의 날을 제정하여 가족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임신과 출산에 호의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산부 마크’ 보급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육아지원으로는 재택육아와 방과 후 대책 강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조성, 남성의 참여 장려,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경감 등이 있다. 특히 아동의 연령에 따라 요구되는 육아형태와 지원이 다름을 인지하고 임신 및 출산부터 수유기까지, 미취학기, 초등학교 시기, 중고생 및 대학생 시기로 단계를 구분한 것이 특징적이다. 신생아와 수유기에 중점적으로 제공되는 정책지원은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지원금 제공(예: 건강검진비용 지원), 그리고 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있다. 가령 경제적인 지원으로는 자녀출산 시 지급되는 일회성 장려금 뿐 아니라 초등학교 졸업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또한 세금감면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Suzuki, 2007). 미취학기에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육아지원 거점 확충, 소아 의료시스템 확보, 육아휴직과 단시간 근무 보급, 직장 내 탁아시설을 포함한 육아서비스 제공 촉진, 아버지의 참여 장려 등이 대표적이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방과 후 대책과 스쿨버스 도입을 통한 안전한 등하교 추진, 중고생 및 대학생 시기에는 교육비 부담 경감이 주요 정책으로 제안되었다.

임신부터 출산 후 수유기까지에 해당하는 정책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경

제적인 측면 외에 기업과의 연계성 안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조성도 포함된다. 가령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하는 해고 금지, 임신부의 시간외 근로나 심야근무 제한, 통원휴가 보장을 비롯하여 산후 8주간 휴가의 의무화와 산전 6주간 휴가 확보, 아버지의 출산휴가 확보 등이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책으로는 육아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대표적이다. 이는 출산을 한 모든 가정을 지역사회의 관련단체 직원 혹은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육아지원 서비스 소개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임신과 출산을 처음 경험하는 산모들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육아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취학기 아동들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대기아동의 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아버지들의 자녀양육에의 참여를 장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자녀양육의 책임을 어머니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녀의 균형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과 어머니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정의 많은 부분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정서적인 충족감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생 시기에 있어서는 방과 후 아동플랜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스쿨버스 도입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방과 후 아동플랜은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맞벌이 부부의 수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여 마련된 것이다. 중고생과 대학생기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은 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의 도입이 대표적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근로방식 개혁과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강조되고 있다. 기존 근로방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양육기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과 육아휴직과 같은 정책이 있어도 실질적인 활용도는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양육기 부모는 일반적으로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의논하고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고

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와 같은 현실을 인지한 일본 정부는 기업에 일-가정 양립지원책을 도입하도록 촉구하였다. 이는 크게 휴업 및 휴가 관련(예: 육아휴업제도를 취업규칙에 명기, 아동 간호휴가제도), 노동 시간 및 장소 관련(예: 단시간 근무제,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간 조정, 소정의 노동 면제), 경제적 원조 관련(예: 출산 축하금, 산휴나 육아휴업 중 급여나 수당의 부분 지급), 시설 및 서비스 관련(예: 탁아소 설치), 인사 및 노무상의 배려(예: 육아휴업 복귀 후 커리어 지원 등)로 구분된다.

그러나 다양한 양립지원책에 대한 실제 도입상황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에 따라 적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양립지원책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용률 역시 항목별, 성별, 직급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과 가정 양립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종업원의 사기향상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일본내각부, 2006). 정부에서는 기업의 근로방식 개혁을 위하여 각종 조성금 지급과 친가족기업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새로운 저출산대책은 결과적으로 가치관 변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해결로 귀결된다. 일본내각부에서 발간한『소자화사회백서』(2006)에 따르면, 육아와 관련된 가치관을 국제비교하기 위하여 다양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대한 가치관이 일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약 57%가 찬성). 이는 미국,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서구 국가와는 대조되는 사항이다. 취학 전 아동의 육아는 ‘주로 부인이 담당한다’는 응답도 약 67%에 해당하여 한국과 동시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동이 3세 정도까지의 기간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한국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로 높은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가치관 뿐 아니라 2세 미만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서구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가령 2006년 2세 미만의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의 19%에 해당하였다. 이는 1998년의 13%에 비하면 증가한 수치이지만, 서구의 40% 이상 가량으로 나타나는 이용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Suzuki, 2007). 즉 ‘자녀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 특히 ‘0~2세의 어린 자녀는 어머니(혹은 가족)가 키워야 한다’는 모성에 대한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 맞물려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출산과 동시에 취업을 중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여성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모성에 대한 가치관은 “좋은 엄마 되기 10계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표 5-3 참조). 이는 1988년에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해서 주창된 것으로 보고된다(Jolivet, 1997). 과거로의 회귀를 주창하는 10계명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은 물론 모성에 대한 신화와 유사하다.

〈표 5-3〉 좋은 엄마 되기 10계명, 일본

-
1. 임신 때부터 태아와 유대감을 형성할 것
 2. 임신 때부터 태교를 통하여 태아의 IQ를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
 3. 자연분만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출산하고 분만 직후 자녀와 신체접촉을 할 것.
 4. 둘째아를 출산할 때까지 자녀와 계속 같은 방에서 자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신체접촉을 하면서 함께 보낼 것.
 5. 최소한 1년간은 모유수유를 할 것.
 6. 자녀의 음식은 엄마가 사랑을 담아서 직접 준비할 것.
 7. 자녀의 기저귀는 직접 빨아서 쓸 것.
 8.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것.
 9. 모성 본능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실현할 것.
 10. 적어도 5년은 직업을 그만두고 자녀양육에 전념할 것.
-

자료: Jolivet(1997).

즉 어머니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한 순간부터 태아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태아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위한 최상의 환경과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분만을 하고 고통을 느낌으로써 자녀의 소중함과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형성할 수 있고, 자녀와의 지속적인 신체접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기저귀나 이유식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이기적이고 게으른 행위로 비판한다. 이외에도 자녀 양육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고, 특히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과 돌봄은 평생에 걸쳐 자녀의 인성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결과적으로 일본여성들에게 자녀양육의 주요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음과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존재로 내재화된다. 따라서 출산 후 취업을 지속하여 자녀 양육을 타인이나 기관에 맡기는 여성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대부분은 출산과 동시에 취업을 그만두게 된다. 혹은 취업을 위하여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제도적인 측면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사회적으로 내재된 모성에 대한 신화를 약화할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 내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과 모성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과 부성휴직 제도가 도입되어도 이용률이 낮을 것이라는 전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인용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가족과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식개혁도 필요하지만, 자녀 육아의 책임이 반드시 여성에게 있는 것만은 아님을 홍보하는 노력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4> 싱가포르, 대만과 일본의 가족정책 비교

국가	싱가포르	대만	일본
특징	가족 및 자녀 가치 강조	합의에 근거한 출산 및 인구정책	양육환경개선에 초점
1960대전후	인구억제정책 시작 “둘만 낳자”	인구억제정책 시작	인구억제정책 시작
1970년대	인구억제책 유지	인구억제책 유지	인구억제책 유지
1980년대	차별적 인구정책(1984) 사회경제적 지위 및 부모 사별 차별출산력 유도 세제혜택, 가족수당 지급 자녀가치 홍보 가족 주일(Family Week) 제정(1985), 친가족주의 마련 세금, 주거, 출산비용, 보육서비스 관련 정책시작	인구평가 시도(1988) 인구고령화에 대한 우려 표명, 추가적인 출산율 상승이 요구됨	
1990년대	친가족주의 정책 유지 가족가치 강화, 결혼 유도, 출산유도 정책 유지	인구정책의 방향 재설정 (1992) 인구부양정책으로의 전환 혼인율상승 유도 출산부양책 시행	엔젤 플랜(1994) 자녀양육의 사회화 도모 보육서비스 확충 및 개선 신엔젤 플랜(1999) 모자보건, 상담, 교육확대
2000년대	자녀보너스연금(2000) 자녀수에 따른 누진적 수당 지급 외국인 보모고용 제도화 (2004) 부모휴가 제도화(2000) 남성의 육아휴가 권고 가족가치교육 기업의 친가족정책 'family time' 유도 주 5일제 근무 시행(2004) 가족부 신설(2006)	출산정책강화(2004) 여성단체와의 대화 시작 새로운인구정책시행(2006) 인구의 질 향상, 환경 및 보육환경 개선, 아동권리 개선, 공공보육개념 도입, 보육도우미제도 설립, 외국인 보모도입 검토, 부모휴가제도 개선, 아동 있는 가정에 재정지원, 일과 가족 양립방안 (탄력근무제, 임금 보장, 직장보육 강화), 건강 및 돌봄 시스템 강화	저출산사회기본법(2003) 부모교육 확대 아동 육아 응원플랜(2005) 청년 자립, 근로방법 개선,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확대

4. 서구유럽의 저출산 대응정책

서구 유럽의 출산율은 이미 1800년대 후반부터 인구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30년의 경제대공황시대에는 정체 및 저하의 뚜렷한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전후의 회복기를 거쳐서 1960년대 후반부터는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출산율도 본격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이에, 1970년대에는 이미 북유럽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는 대체수준을 밑도는 출산율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출산율의 감소에 개별 국가들은 일찍부터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해 왔고, 1980~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출산율이 국가 및 지역별로 달라지는 이른바 다양화 현상이 나타났다(은기수 외, 2005).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합계출산율의 분포를 보게 되면, 2004년 현재 스웨덴, 노르웨이 및 북유럽과 프랑스 등의 서유럽국가들은 합계출산율은 1.7~1.9 수준으로 대체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게르만 문화권의 나라들은 합계출산율 1.3~1.6 수준을 맴돌고 있어서 합계출산율의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남유럽국가들은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이라고 일컬어지는 1.1~1.3 수준으로 이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와 유사하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의 개별 국가에서 자국의 저출산의 대응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초점이 자녀에 있고, 이들을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인구정책이나 출산억제정책이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혹은 여성의 출산수준에 초점을 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며, 여성뿐 아니라 남성 및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체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은 출산율의 회복, 조세의 형평성 및 분배정의 실현, 자녀양육의 사회화, 빈곤의 악순환경감, 양

극화 해소, 자녀양육환경개선, 임금인상 압력의 축소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개별국가마다의 문화적인 특성, 정책의 실행방식, 경제체제의 차이로 인해 그 효과나 운용방식이 차별적이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는 적절한 출산수준을 유지하는데 비교적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가족정책을 수행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정책내용과 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가. 스웨덴

스웨덴의 가족정책이 갖는 특성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녀양육환경의 개선과 성평등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는 오래전부터 안정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해 왔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가족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으나, 스웨덴 복지체제는 부분적 개혁과 조정을 거쳤을 뿐 현재까지 그 기본틀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스웨덴의 출산정책은 다른 보편적인 복지제도, 협력적인 노사관계 및 대기업 위주의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의 일환의 하나이다. 높은 조세부담에 기초하여 세금의 상당부분은 복지수당의 형식으로 재분배되는 구조를 갖는다. 1990년대 초반에는 사회복지지출의 확대 및 국가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별가족에 부과되는 조세부담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특히 스웨덴 사회는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구도 하에서 일관되게 가족정책, 출산정책 및 기반 복지시설을 정비해 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가령, 성평등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에 대한 지향은

가족, 출산, 기업 및 기타 사회복지정책의 전방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해 왔다. 즉, 단일시점에 획기적인 정책을 입안한 효과라기보다는 오랜 세월 국민적 합의와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친 결과물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5>에도 알 수 있듯이,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프랑스나 네덜란드와 다르게 성평등, 공적양육의 특성들이 정책에 조직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40여년 가까이 유사한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지역에서도 특히 스웨덴은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아버지 쿼터제를 실행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이다. 주로 여성에게 적용되었던 출산휴가, 유급육아휴직, 임신아동간호휴직 등의 제도도 1990년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실행되는 것이 여러모로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여성의 출산휴가, 유급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단축하고, 유급급분도 삭감하게 된다. 이때, 자녀양육의 공백과 개별가족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어, 1개월의 아버지 휴가제도 및 유급육아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크지 않았던 스웨덴 사회에서는 기업 및 정부의 부담을 아버지들의 육아휴가비용을 통해 메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 법적으로 아버지 쿼터제는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되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공적보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보육서비스 확대, 무상보육, 부모보험, 아동수당 지급으로 대표되는 공적보육시스템은 이후 임신아동간호수당⁸⁾, 임신수당⁹⁾, 아동연금¹⁰⁾, 양육보조수당¹¹⁾, 주택급

8) 자녀가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자녀 1인당 연간 최고 12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이다. 부모가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에 자녀 1인당 연간 60일까지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때 임신아동수당의 소득보장 비율은 2005년 이후 소득의 80%에 이른다.

9) 임신으로 계속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직장 내 배치 전환이 어려운 경우 출산 예정일 2개월 전

부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도 국가의 재정난이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성평등과 모성보호 및 자녀양육의 부담을 지향하는 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사회에서 이러한 출산 및 육아휴직활용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아버지 쿼터의 경우에도 실제 이용률은 90년대 말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일 활용의 10% 수준으로 나타나며, 2004년도 한 평가서에 따르면 아버지들의 평균 육아휴직사용일수는 44일에 불과하다고 한다(은기수 외, 2005). 이러한 아버지 육아휴직 활용도가 바캉스 시즌이나 사냥시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사용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은퇴, 장기 병가 수당 수혜자의 증가로 조세수익이 감소하고 복지지출은 증가하는 재정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으로 스웨덴사회가 복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스웨덴의 전반적인 실업률은 1990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젊은층이나 이민자 그룹에서는 오히려 실업률 증가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서 이는 앞으로 조세수입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스웨덴 대사관,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출산율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저하 경향에서 급속한 증가로 반전되었다. 이러한 출산율의 U자형 곡선이 가능했던 것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화, 여성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참여 여건의 조성, 아버지의 양육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그것을 오랜 기간 가족정책에서 끌어안은 점이 주요하였다고 평가된다.

부터 최대 50일간의 소득보장이 가능한 제도.

- 10) 부모와 사별한 18세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부모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
- 11) 양친이 동거하지 않는 18세 미만의 자녀(양자를 포함)대상으로 한다. 이 수당은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불액이 적은 경우, 자녀의 부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아동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자녀가 한부모에 의한 양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프랑스

프랑스의 정책이 스웨덴이나 다른 유럽국가들과 특이한 점은 이들은 오래전부터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및 가족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점이다. 일찍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기 시작한 프랑스 사회에서는 출산율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1930년대부터 가족주의를 가치를 강화하고, 개별 가족의 출산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벌여왔다. 더욱이 세계1~2차대전 이후 15~64세에 이르는 생산연령인구의 대다수를 잃어버려 인구감소를 저지하고,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한 급진적인 처방이 필요했다.

프랑스가 채택한 제도의 초점은 ‘자녀를 가진 가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세속적이며 단순하다. 그리고 1945년에는 자녀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주는데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른다. 1932년부터 194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 가족수당의 내용은 상공업 분야의 모든 고용주들로 하여금 부양가족(만14세 이하)을 둔 급여소득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후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누진성이 강화하였다. 다자녀가족은 환영하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수가 적은 가족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부차원의 메시지를 반영한 것이다.

세계2차대전 이후에는 가족수당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일부가 되면서 국가에서 가족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이후 가족수당은 다양한 이름으로 세분화되고 지급방식도 세밀해졌다. 그리고 그 후에도 프랑스 정부의 ‘다자녀 환영정책’, 가족주의 정책은 동일한 기초를 유지하게 된다. 1970년대 프랑스 사회의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 셋째 자녀 출산율의 감소라는 평가가 나오자 셋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셋째 자녀를 우대하는 각종 가족시책(출산휴가연장, 가족수당의 100% 증액, 셋째 자녀 있는 여성에게 고령연금지급 및 최저생계비 지급)을 활용해왔다.

좌파가 프랑스의 정권을 잡게 되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에는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가족정책에서도 결혼, 가족형태, 출산순위,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불간섭의 중립적 입장을 채택하게 된다(은기수 외, 2005). 다만, 지속적으로 저출산을 경험하게 되자 이를 좌시할 수만은 없었고, 결국 가족정책은 가족의 형성 및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된다. 영유아수당, 양육부모수당은 기존에 산발적으로 실시된 가족수당들을 통합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남녀관계와 친자관계에 대해서는 간섭하거나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대신에, 새로운 가족관계의 출현과 관련하여 초래되는 빈곤문제, 청년실업문제, 여성의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 등 사회제반 상황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였다. 시라크 정권(1995~2006)하에서도 이러한 가족정책의 기본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라크 정권에서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금의 확대, 소득별 계층별, 지원의 선택권 부여, 그리고 자녀양육의 공적·사적시스템의 개선 등 공적보육과 아동양육환경을 지원하는 특화된 정책들을 내놓았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정책이 이렇듯 가족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는 프랑스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조금이나마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프랑스식 가족정책이 다른 문화나 국가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출산율을 올리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프랑스 사회가 발전해온 특이성과 가족주의가 다른 서구국가들과는 상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이 있는 가족의 재정지원에 치중해온 가족정책이 단일하게 출산율을 올렸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다양한 가족수당과 여성의 일과 가족 양립, 빈곤문제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잘 맞물린 결과물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 네덜란드와 독일

네덜란드의 출산율은 최근의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남유럽이나 러시아를 포함하는 동유럽국가들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과 비교해 보면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경제수준이 높고 실업률도 낮아 이러한 경제적인 수준으로만 본다면 출산율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의 하나이다. 이에 대해 은기수 등(2005)은 네덜란드의 이러한 출산율 담보상태는 이들의 '1.5 생계부양자 모델'에 있을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 1.5부양자 모델은 남성전일제 근로자와 여성 시간제근로자로 이루어진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형태를 말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1970~1980년대만 하더라도 국민의 조세부담이 높은 반면, 국가의 사회보장지출은 비교적 큰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네덜란드의 GDP대비 사회보장지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는 더 감소하여 2000년에는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으로 나타난다(OECD, 2002). 아마도 다른 유럽의 여러 복지국가들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국가재정의 파탄, 노동참여율의 감소의 상황을 1980년대에 네덜란드 사회도 겪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네덜란드가 다른 유럽국가와 다른 것은 1990년대 이후 고용상황이나 실업지수가 매우 양호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의 고용증대가 매우 높다는 특이성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네덜란드 정부가 시간제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1989년부터 1999년 사이에, 어린자녀(만6세)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30%에서 60%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시간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였는데, 자녀수가 많을수록 시간제로 일하는 여성의 비율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은기수 외, 2005). 이처럼 기혼여성의 시간제 고용을 유도하여 개별가정의 재정적 안

정을 추구할 수 있었고, 이는 정부차원의 가족수당 및 아동수당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네덜란드 정부의 여성의 시간제 고용에 대한 수요가 적중한 것은 네덜란드 사회의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은기수 등의 2005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ISSP 2002년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모듈의 분석 결과, 네덜란드는 가족, 성역할 및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은기수 외, 2005). 네덜란드와 유사한 점수분포를 보인 국가들은 영국, 독일 등이었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여성이 남성에 부가적인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다른 북유럽국가에 비해 낮으며, 최근에 와서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수준을 보이는 유사성이 관찰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가족역할수행을 규범적으로 인식하는 국가에서는 일가족양립이 여성의 시간제 노동의 보편화를 통해 실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나 독일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도 3세 미만의 어린자녀에 대한 보육은 가족 특히 여성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자녀양육가치관도 '3세아 신화', '모성 신화'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육아관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는 통일 후에 동독의 사회주의적 집단보육에 대한 반발에 의하여 어머니의 자녀양육책임과 아버지의 생산적 활동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통일독일 이후 동독지역의 보육시설들은 재정악화로 문을 닫는 시설들이 속출하여 3세 미만 아동의 보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3세 이상의 연령에서도 보육시설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한다. 3세 이상은 유치원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유치원이 오전시간에만 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성의 전일제 취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서인지 이후 독일사회는 북서유럽국가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표 5-5〉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및 독일의 가족정책 비교

국가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특징	아동의 삶의 질 향상 + 성 평등 정책	가족주의정책	차별성을 인정한 1.5 임금제도의 확립
1940년 전후	육아휴직제도(1932) (소득보장 없음) 아동수당 지급(1947) 공적보육시설 제도화	가족수당 지급규정(Alfred Sauvey, 1938) 사회보장일반제도, 가족수당헌장(1945) 제정	
1970년대	부모보험(자녀출산으로 인한 가계의 소득손실 보장, 1974) 부모보험기간 연장(11개월) 및 소득보장 확대(1978) 공적 보육시설 확대	가족수당의 수직적 보상제도(소득재분배) 취업모에게 보육비 지급 (1972) 한부모수당 지급(1976) 아동수당 지급(1977)	
1980년대	부모휴직기간 연장(12개월) 및 소득보장 확대 (소득의 90% 보장, 1989) 출산 직후 부모수당 지급 24개월(1980), 30개월(1986)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 가산을 책정 영유아수당, 양육부모수당	바세나르협약(1982)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시간제노동에 대한 차별철폐로 여성 노동력 이용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통합, 4세부터 교육 시작
1990년대	부모보험의 전환: 아버지의 출산 육아참여 촉진(1995) 아버지의 휴직 의무화 (1개월)	자유선택부모수당(전업주 부수당)	보육비 지출의 3자 체제 확립(중앙 및 지방정부, 개별가족, 고용주) 기업의 보육비용 지급확대(25%) 부담. 출산휴가(유급)제 도입 육아휴직(무급) 보장
2000년대	무상보육 실시(45세) 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아버지 쿼터 2개월로 연장 임시 아동간호수당 아동연금	유아환영정책(PAJE) 자녀 있는 가족에 기본지원금 소득 및 계층별 선택적 추가지원제도 양육시스템 개선	보육공공지출 시작(2001), GDP 대비 0.24% 수준

독일과 네덜란드가 매우 유사한 가족정책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네덜란드가 독일보다 상황이 나은 점은 이러한 가족정책이 다른 복지정책들과 맞물려 비교적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동정책, 연금정책,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건강을 비롯한 기타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은 1.5세대부양이라는 조금은 성차별적인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의 출산율이 초저출산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제 4 절 향후 정책과제

앞에서 시도한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저출산 혹은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을 겪고 있는 각국의 출산정책은 내용적으로 유사한 경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최근에 출산율에 적신호가 켜진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의 인구억제정책을 부양책으로 급선회하면서 서둘러 출산율을 회복세를 이루고 있는 서구유럽 사회의 정책들을 참고하고 있다. 싱가포르나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의 여러 정책들은 1990년을 전후로 서구 유럽사회에서 시도되었던 다양한 가족정책, 보육 및 교육정책, 기업정책, 조세정책들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가 하면, 출산율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 서서히 회복세를 나타내는 서유럽 및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한층 더 강화된 출산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 국가정책이 공통적으로 ‘가족’과 아동의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저출산 타계의 주제어가 가족문화, 가족생활의 개선에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서구유럽의 가족정책이나 그 세부사항들의 방향성은 한국사회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구의 사례는 여성의 취업률 상승과 저출산의 관련성이 반드시 선형적이지 않다

는 점을 말해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향 설정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의 동아시아 사회는 서구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른 시간표상에 있고, 문화적으로도 상이하어, 이러한 서구식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과거 한국과 동아시아 사회가 출산억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부양으로 돌아선 부분, 개별가족에서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가치가 서구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시행이 매우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등은 현재 정부의 저출산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또한 말해주고 있다.

1. 정치적인 이해, 과거 출산억제정책의 효과 및 부작용

동아시아 사회는 과거 출산억제정책이 정부주도하에 공격적이며 면밀하게 시행된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정책과 당시의 개발위주의 국가정책이 맞물리면서 실제로 동아시아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라는 동일한 결과물을 얻게 된다.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출산억제정책이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논의만 해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출산억제정책의 학습효과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사회는 인구고령화에 직면하였고, 급기야 출산억제정책의 중단, 그리고 출산장려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강력한 인구정책을 한번 경험했던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정부주도하의 인구정책이 제차 실시되는 것에 대해 사회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보인다. 대만사회에서 목격되는 출산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들은 민주주의 사회로의 지향과 정부의 출산정책이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갑작스럽게 강조되는 가족가치관의 강조, 부모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켜보면서 이를 정부의 보수주의, 과거로의 회귀로 인식하는 측면이 커 보인다. 또 다른 한편에서 가족가치에 대

한 강조는 소자녀 일색인 개별 가정에서 자녀양육과 교육에 매몰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대만의 사례는 정치적 색채나 주장이 다른 이익집단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일관된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한국사회도 과거 정부주도의 강력한 인구정책 시행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저출산정책이 과거 인구정책과 다르게 사회적 합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차별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2. 가족주의 문화와 일가족양립 및 공공보육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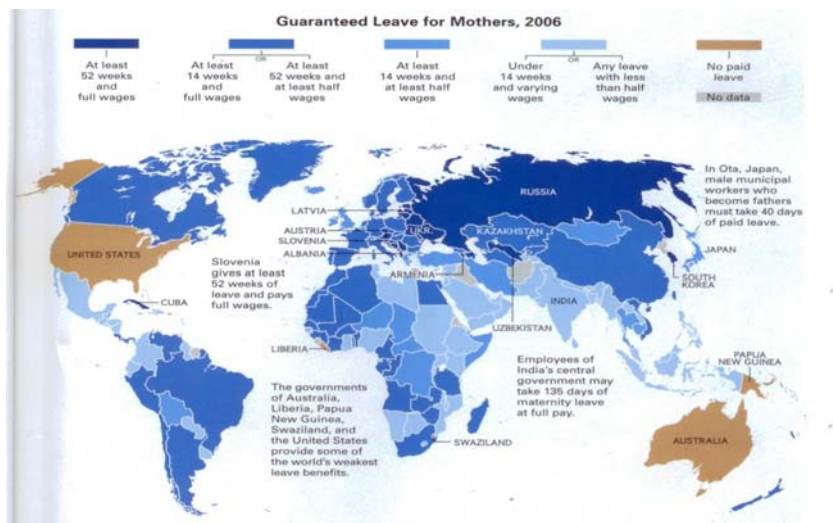
앞에서 정책적 특성을 살펴보면, 인적자본(human resource)이 국가경쟁력 증진에 핵심요인이 되는 국가들의 경우 자녀양육의 책임이 개별가족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국가들로 동아시아 국가들과, 서구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등을 꼽을 수 있다.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 동유럽 역시 공공보육이 사라지면서, 자녀양육의 책임이 가족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점 역시 이들 국가의 낮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인적자본의 함양을 위해 개별가정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출산력 향상에 필수요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양상은 실제로 자녀보육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이러한 가족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조하는 혹은 그러한 문화가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공공보육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어머니에 의한 자녀양육의 규범이 매우 강한 특징이 있다.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는 육아휴직과, 유상급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률이 높지 않거나, 이용을 하더라도 여성의 취업상의 단절이 불가피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5-2]는 각국의 모성휴가를 법적으로 제도화 한 국가들을 제도에서 보장해주는 모성휴가 기간에 따라 구분해본 것이다. 초저출산을 겪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서유럽의 경우는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북유럽과 비교해 볼 때, 법적인 육아휴직제도의 수준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림 5-2] 각국의 모성휴가제도 실행실태, 2006



자료: National Geography(2007).

[그림 5-2]로 보면, 한국사회도 상당히 선진적인 모성휴가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성휴가제도를 이용하는 여성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직업 역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앞서 국가간 정책비교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서구 유럽사회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독일에서 여성들의 모성휴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하는 모성휴가의 측면에서는 거의 불모지에 가깝지만 이들의 출산수준은 오히려 서구 유럽이나 동아시아 사회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들은 표면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각 국가와 사회마다 가지고 있는 가족 및 자녀 양육의 문화가 어떠하며, 정치경제적인 상황과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어떻게 맞물리는가에 따라 그 효과는 상이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사례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서구식 저출산 정책들이 효과를 보지 못한 문화적인 요인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일본인과 한국인들은 전통적인 성역할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일과 가족 양립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에서는 어떠한 저출산 정책이 가능할 것인가? 네덜란드나 영국의 1.5생계지원자 모델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제한점이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강력하게 남아 있는 가족주의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자녀 양육의 분담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스웨덴의 경우도 과거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개선, 가계소득보장 등 직접적인 출산 관련된 사항 이외의 분야에 대한 순차적인 개선을 실시한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순차적인 개혁이 유효하게 작용하면서, 이후 출산문화와 가족문화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즉, 기존의 가족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녀보육의 문제나 노동시장에서 역시 개별가정의 각기 다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장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정부가 새로마지 플랜에서 제시하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우처 제공¹²⁾과 같은 정책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12) 0-4세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소득별로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 향후 5년간 보육 대상 아동 가구의 84.5%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현재는 보육 대상 아동의 21%만이 국가의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다. 보육료는 현재 국공립 및 법인 시설에만 지원하던 데서 바우처 방식으로 개별 아동 가구에 지급해 민간보육시설에서도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5세 아동의 경우 내년부터 장애자 및 저소득층 아동부터 연차적으로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한다. 또 현재 16개 학교에만 설치돼 있는 방과 후 교실을 내년에 180개로 늘리는 등 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과 양육 당사자들의 선택권과 차별적 환경을 고려하는 정교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욕구와 수요를 살펴보는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필수적이다.

3. 일관되고 안정적인 가족정책의 추진의 필요성

서구유럽의 사례와 동아시아의 최근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출산 및 가족정책의 시행 기간과 정책 시행의 일관성에서 드러난다.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 서유럽사회는 인구정책이 과거부터 매우 중요하였고, 이들에게 저출산 탈출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특히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처럼 인구규모가 크지 않았고, 자원이 부족했던 경우 인적자본의 적정한 수의 유지가 필수적이었던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들이 출산부양을 위해 시도한 여러 정책들과 막대한 자금의 역사는 거의 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하에서도 출산정책 및 가족정책만큼은 매우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스웨덴과 북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프랑스 등은 초저출산 수준의 출산율을 대체수준 가까이 끌어올리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에 비해 동아시아 사회는 인구정책이라는 단어조차 없다가 급작스럽게 출산억제책을 실시, 아주 최근까지도 출산억제를 기정사실화 하였다. 이러한 효과로 출산율이 하락하여 급기야는 1.57 쇼크(일본의 경우), 1.08 쇼크(한국의 경우)가 발생하자 정부는 출산정책의 방향을 급전환하기에 이르렀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990년대 중반에 와서야 일이다. 예외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우 1980년대 이미 차별출산력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주도하여

차적으로 확대해 만 6-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도 늘려 갈 예정이다(중앙일보, 2004, 6월 11일자).

인구가 일정수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왔다. 이는 싱가포르가 도시 국가로서 갖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 GND 대비 막대한 예산이 저출산 탈피와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되고 있으나 그것이 단기간에 효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함께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정치·경제적인 불안정성도 저출산정책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오랜 시간, 일관된 정책수행이 그나마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대체수준 가까이 끌어올리는데 주요했다는 점 역시 앞으로의 정책수립에 참고사항이 될 부분이다.

제6장 결론 및 요약

최근에 이르러 출산력이 조금이나마 다시 상승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통계청의 출생통계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이 2005년에 1.08을 기록한 이후 2006년에는 1.13으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1.2의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계출산율이 이 같은 증가는 여성의 초혼연령과 첫 출산연령의 상승 추세가 다소 주춤해지면서 30대 초반 여성의 첫째 자녀 출산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산력의 이 같은 변화와 아울러 2006년과 2007년의 혼인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각각 5,431건과 16,377건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을 출산장려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고, 출산력 상승추세가 앞으로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같은 최근의 변화가 합계출산율을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측정할 때 비로소 감지되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며,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즉, 출산력의 기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출산시기 조정효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혼인건수가 증가한 것은 제3차 베이비붐 효과로 인하여 20대 후반의 여성인구가 증가하였기 한 것에 기인하는바 크다. 즉, 제1차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에 의해서 1970년대 말에 많이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최근에 이르러 제3차 베이비붐 세대를 형성 중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여성인구 연령구조의 이 같은 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2~3년간은 혼인과 출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통계청(2007)의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부터 20대 후반의 여성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대 여성의 미혼율 증가추세

와 유배우 출산을 감소추세에 기본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 시점에서 이처럼 상반되는 두 가지 견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가장 최근의 출산동향 자료를 활용한 심층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인구정책 역시 최근의 출산동향 변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조망을 바탕으로 수립될 때, 그 효율성을 한결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7~8년간 한국 정부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를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은 자녀양육 부담의 경감, 육아지원시설의 확충,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에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가족가치와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가족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 산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 확대,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의 확보와 아울러 정책의 우선순위, 우선 대상집단의 선정 등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출산력 저하의 최근 동향과 인과구조, 그리고 변화하는 가족생활환경과 자녀양육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결혼과 출산행태의 최근 변화와 자녀양육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최근의 저출산 현상과 가족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인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우선 이 연구는 문헌검토를 통해 결혼, 출산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구센서스, 출생신고,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의 원자료

를 활용한 미시분석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 대만, 일본, 프랑스, 스웨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출산정책, 가족정책과 문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결혼과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감지되었다. 지난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결혼가치관, 자녀관 그리고 이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경향은 아직까지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결혼관은 부모관 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결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고, 이혼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더 강하였다.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가 최근 몇 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남성보다 여성들이 결혼에 수반되는 부담과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동일한 연령대의 미혼과 기혼여성의 결혼관을 비교해 본 결과, 젊은 연령층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에 응답한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더 많았다. 결혼이 현실상황인 기혼여성들이 결혼생활의 비용을 더 많이 지각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가 하면,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결혼에 대한 당위적인 가치관은 30대 중후반의 연령에서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혼이든 기혼이든, 결혼의 비용을 높게 지각한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 가까운 수가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 여기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리고 젊은 연령층이 나이든 연령층에 비해 이혼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이 나이든 연령층보다 결혼이나 이혼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앞으로도 가족행동과 의식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가족의 안정성이나 부모역할의 연기와 포기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초혼연령의 상승은 지난 1997년 발생한 경제위기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및 이후에 결혼한 코호트의 평균 초혼연령은 26.2세로 1997년 이전에 결혼한 집단에 비하여 평균 초혼연령이 약 3세가량 높았다. 특히 1997년 이후 결혼코호트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의 초혼연령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초혼연령은 여성의 교육수준의 증가와 맞물려서 함께 상승하는 것으로 지적되며 이러한 패턴은 1997년 이전 결혼 코호트까지는 적용이 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1997년 이후에 결혼한 여성과 남성 모두 저학력과 고학력의 결혼연령이 현격히 높게 나타나서 기존의 패턴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편적으로 교육수준이 향상된 현실에서 낮은 교육수준은 결혼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로 연결되어 결혼시기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높은 교육수준은 교육기간의 증대와 연결되어 자연스럽게 결혼시기를 늦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풀이될 수 있다.

결혼 당시 여성의 종사상 지위와 직종에 따른 초혼연령 역시 1997년 이후는 이전과 차별적인 측면들이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여성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초혼연령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용주나 상용직은 물론 비취업이나 무급가족종사자인 여성들의 초혼연령도 더불어 상승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낮은 직업위세를 지닌 여성들과 높은 직업위세를 지닌 여성 모두에서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경제 불안정이 취업여성들 뿐 아니라 비취업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결혼시기가 지연된 것은 아닌지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결혼을 통하여 경

제적 안정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해지고 결혼에 대한 비용 지각이 높아짐에 따라 고학력과 높은 직업위세를 지닌 여성들 역시 결혼시기를 지연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기혼여성들의 자녀관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극히 최근 들어 이상자녀수에서도 2명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당위적, 정서적, 그리고 부모자유 제약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자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기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녀에 대한 태도는 체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20대와 30대는 40대에 비해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자녀가 부모의 자유가 제약된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에 교육과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는 자녀가 가계계승이나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하며, 자녀로 인해 부부 및 친족관계가 원활할 수 있고, 부모가 되는 것은 개인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정도가 더 강했다.

이러한 자녀에 대한 태도는 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의 하나로 드러났다. 이미 첫째 자녀를 둔 기혼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분석에서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에 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반면에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인식이 적을수록 둘째 자녀를 계획할 확률이 높았다. 부모가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따르는 보람과 기쁨을 많이 느낄 경우 추가자녀를 계획할 가능성도 높다는 결과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최근의 자녀양육에 대한 담론들이 지나치게 자녀양육의 부담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실제로 부모역할의 보람과 기쁨에 대해서는 외면한 측면이 있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혼여성들이 출산을 할 경우 출산간격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특히 경제위기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출산간격이 상이한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령, 전문대졸 이상의 여성들이 중졸 이하 여성에 비해, 그리고 임시 및 일용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결혼 후 자녀 없는 기간이 유의미하게 길었다. 무자녀에서 첫째 자녀, 첫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 출산에 소요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직종은 각각의 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20대 여성은 30대 이상에 비해 무자녀에서 첫째 자녀를 출산, 첫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까지 출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모두 짧았다. 임시 및 일용직 여성은 비취업 여성에 비해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긴 반면,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둘째 자녀 출산까지 소요된 기간은 짧았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인 상황, 취업 경력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출산간격 조절이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인구센서스, 동태통계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출산력을 살펴본 결과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약간의 변화가 포착되었다. 합계출산율과 평균 총출생아수는 자료에 관계없이 꾸준히 감소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총출생아수를 살펴보면, 사례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중졸 이하인 저학력의 출산력이 현격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 이후에 더욱 두드러진다. 고학력 집단의 경우도 경제위기 이후 출산력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직업관련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은 직업위세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총출생아수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경제위기 이후 관찰되는 저학력과 고학력, 높은 직업위세와 낮은 직업위세를 지닌 이들의 초혼연령 상승과 연계되어 해석할 수 있다. 즉 경제위기 이후 결혼과 출

산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 집단이 고학력이면서 높은 직업위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나 저학력이면서 낮은 직업위세 직종에 종사하는 양극단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출산장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대상 집단을 규명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섯째, 자녀양육비와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시간을 통해 자녀양육에 기울이는 경제적, 시간적 투자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총자녀양육비는 평균 3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1명인 가정보다 자녀수 셋 이상이 가족에서 총자녀양육비는 2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약 2배가 넘는 자녀양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양육비는 자녀연령이 어린 경우에서 그 차이가 가장 컸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연령에 관계없이 막대한 비중의 소득이 자녀보육과 사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총자녀양육비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자녀양육에 대한 기혼여성의 시간투여 역시 주목할 만 하였다. 영유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기혼여성의 시간투여는 하루 12시간을 넘는 수준이고 이는 첫째 자녀가 5~6세가 될 때 13시간으로 정점을 이룬 후 차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시간투여 양상은 자녀의 수,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점은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른 시간투여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에 따라 자녀양육에 쏟는 노력과 투자가 차별적이라고 가정할 서구의 논의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어머니들이 그들의 인적자본의 수준과는 무관하게 자녀양육에 얼마나 몰입되어 있는가를 시사한다. 그리고 자녀양육을 둘러싼 이 같은 경제적, 시간적 투자의 양상은 최근 한국가족의 자녀중심주의, 자녀우선주의 문화의 한 측면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개별 가족들이 다자

녀 혹은 추가출산을 계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곱째, 여성의 취업경력이 다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저출산에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 2005년도 자료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 3,434명에 대한 분석 결과, 취업여성 내에서도 취업경력 유지 및 재취업 형태에서 상이한 경력 조절방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취업조절 방식 중에서도 M자형, 즉 자녀출산과 양육기를 충분히 거친 이후 재취업을 도모하는 사례는 기혼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유형으로 분석대상 기혼여성의 24.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M자형 취업형태 이외에도 젊은 저소득층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첫째 자녀출산이후 곧바로 재취업을 강행하는 빠른 재취업형(가파른 M자형, 7.5%)의 존재도 살펴볼 수 있었다. 결혼과 출산과는 무관하게 직업경력을 유지한 연속취업형과 아주 최근에 결혼을 한 코호트에서는 자녀 없이 취업한 기혼여성의 비율이 각각 11.3%와 4.5% 수준이었다. 그런가 하면, 결혼과 출산을 겪으면서 직업을 그만두는 기혼여성의 규모 역시 예상외로 컸다. 전체 기혼여성 사례의 45%가 결혼직후, 혹은 첫출산 직전에 직업을 그만두고 2005년 현재까지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결혼과 첫 출산까지도 취업상태를 유지하다가, 둘째 자녀 출산을 전후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아가는 사례도 11%가량 된다. 전업주부의 많은 수가 아직 출산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이 이후 어떠한 취업경로로 이행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다만, 동일한 자료를 분석한 이삼식 외(2005b)에서 전업주부들의 취업의향이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취업경로 역시 다양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분석을 통해 기혼여성 내에서도 다양한 취업·비취업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성의 취업조절 형태는 더욱 다양하게 분포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만, 최근 결혼코호트는 M자형 취업경로를 포함하여, 연속적인 취업, 빠른 재취업, 자녀 없이 취업지속 등 다양한 형태의

경로로 분화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유형별 출생아수, 출산간격, 출산계획 등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여성은 출산간격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거나 포기하더라도 취업복귀를 미루지 않았다. 교육수준이 높고, 상용직 근무를 하는 경우 더더욱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과 직업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기혼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나 근무환경에서 선택의 폭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 젊은 기혼여성들의 재취업 혹은 경력유지는 더 용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번 분석결과 젊은 기혼여성 코호트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비롯한 보다 다양한 직종과 종사상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한국사회가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더 다양한 직종과 직업의 출현을 예상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앞으로는 더 많은 젊은 기혼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패턴을 조절하면서 그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덟째, 자녀양육에 대한 기혼여성들의 희망과 실제 사이에는 큰 간극이 놓여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0~2세 자녀의 보육과 양육은 현실적으로 여성 자신이 돌보거나 친인척 특히 조부모나 기타 친척에게 맡기는 것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주도하에 영유아보육법 제정, 직장보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확보와 시설설립이 이루어졌지만, 0~2세 영아의 보육은 안전사고 가능성, 비용 등의 다양한 이유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자녀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보육시설의 이용도는 크게 증가하여 여성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3~7세 사이의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직장보육시설 등과 같은 보육기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사례가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보육기관의 이용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다만, 0~2세 자녀의 보육이 어려운 것은 비단 시설의 부족이나 보육의 어려움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시설과 자원의 부족과 함께 드러나는 주요한

사실은 많은 0~2세 자녀를 둔 여성들이 자녀를 스스로 키우고 싶다는 희망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렇듯 0~2세 자녀의 보육이 대부분 개별 가족 책임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의 책임은 주로 여성인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로 0~2세 자녀의 경우 여성의 돌봄노동을 많이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고는 하나 여성들이 남편에 비해 투여하는 양육시간의 차이는 거의 5배가량 많았다. 그리고 아버지들의 가사 및 자녀양육 투입시간은 자녀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았다. 아버지 역할과 부성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강조와 기업차원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의 양육행동과 가사일 분담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분담률이 낮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일과 가족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의 삶이 더 고달프고, 갈등적임을 시사한다.

아홉째, 최근 혼인상태의 변화도 한국사회의 낮은 출산율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난 2005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의 3,800명 중에서 약 7% (271명)는 혼인상태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을 경험한 사례는 총 209명이었다. 이 중에서 161명은 무배우 상태로 있으며 46명은 재혼을 하여 2005년 현재 유배우 상태에 있다. 또한 이혼 후 재혼한 후에 다시 이혼하여 무배우 상태로 있는 경우도 2사례 관찰되었다. 이 분석에서는 20~44세의 비교적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사별을 경험한 사례가 61명이었고, 이 중에서 재혼으로 이행한 경우는 13명이었다. 유형에 따른 총출생아수를 비교해본 결과 이혼을 한 경우에 평균 총출생아수가 가장 적었다. 특히 이혼 후 아직 재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총출생아수는 나머지 유형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적었다.

이와 함께, 현재 무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재혼의향과 재혼 후 출산 계

획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들은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실제로 유형별 특성에서도 혼인상태의 변화를 겪은 여성 중에서 다시 결혼을 한 사례는 전체의 25%에 불과하였다. 최근에 오면서 재혼과 초혼의 결합이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청의 발표에도 불과하고, 이 분석결과로 보면, 이혼이나 사별 이후의 재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재혼을 하게 되더라도 출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번의 혼인상태의 변화를 겪는 경우 여성 자신의 연령이 중년에 가까워진다는 점은 추가출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상황에서 자녀출산 역시 가족관계의 유연함을 꺾 수 있다는 우려가 재혼시 출산을 꺼리게 되는 원인으로 보인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제도를 벗어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특히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코호트에서 개인의 결혼력의 변화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잦은 이혼과 사별이 가까운 미래에 한국사회의 저출산 기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한국에서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출산억제정책이 성공적이었다 하더라도, 출산장려정책은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거나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 출산억제정책은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됨에 따라 경제발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와 개인의 목표가 어느 정도 일치될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반면 현재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최근 나타난 초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복합적이며 장기적인 정책을 요하는 것으로 논의된다. 왜냐하면 경제 불안정 뿐 아니라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교육에 대한 열성과 이로 인한 사교육비에의 과열한 투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요인들은 일시적인 경제적 지

원으로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분석에 근거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결혼이나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선호와 선택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부모역할 경험이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삶의 일부임을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최근의 기조는 출산과 자녀양육의 비용적인 측면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결혼과 출산의 경험이 여성에게만 의미 있는 것으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이라는 일련의 경험이 누군가의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조정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행복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기 위한 과정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자녀양육의 책임 역시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 여성 스스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0~2세 어린 자녀의 경우는 어머니가 직접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여성 스스로에게도 내면화된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취업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자녀는 어머니가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의식이나 상황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업을 중단하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여성의 자율성과 행복감을 저해하며 자녀양육에 충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양육을 위하여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희생이 전제될 때에는 출산을 회피하거나 연기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경향성이 높다.

위와 같은 가치관 홍보 및 교육과 더불어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가령 0~2세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수적인 증가 뿐 아

나라 안전사고 예방,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것과 같은 분위기 조성, 질 좋은 서비스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양육을 위하여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역시 필요하다. 경제적인 지원이나 기타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용할 대상 집단을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 초혼연령과 출산력에 있어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즉 저학력과 고학력, 그리고 낮은 직업위세에 종사하는 자와 높은 직업위세에 종사하는 자들이 초혼연령과 출산력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그러나 저학력의 경우는 사례수가 소수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고학력과 높은 직업위세에 속하는 집단이 우선적인 정책대상으로 꼽힐 수 있다. 고학력과 높은 직업위세에 속하는 집단은 생계유지와 관련된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는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개인의 희생 기피나 자녀교육에 대한 열성으로 인한 사교육비의 부담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이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홍보,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양육과 교육관련 시설에 있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이 입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출산장려정책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꾸준히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재원이 한정된 현실 속에서 우선 적용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시한 후 점차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치관 홍보 및 교육과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이 병행될 때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선주·옥선화, 「부모기로의 전이에 관한 연구: 부모기로의 전이 후 긴장감, 만족감과 자녀양육」, 『대한가정학회지』 32(5): 83~96, 1994.
- 권정윤·한유미, 「국공립 보육시설과 사립 보육시설의 질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1): 177~187, 2007.
- 권태환·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김두섭·김정석·송유진·최양숙,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5.
- 김두섭, 「인구의 성장과 변천」,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pp.49-80, 2002.
- _____,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2005.
- _____, 「출산력 변천」, 한국인구학회 편, 『인구대사전』, 통계청, pp.661-665, 2006.
- _____, 『IMF 경제위기와 한국 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2007.
- _____,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67~95, 2007.
- 김정석,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2005.
- _____, 「기혼여성의 출산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2007.
- 김태헌·이삼식·김동희,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보건복지부,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 노영주, 『초기 모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9.
- _____, 「이혼여성의 모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2): 43~63, 2001.
- 민현주, 「엄마의 취업과 자녀터울에 관한 동태적 분석」, 『한국사회학』 41(3): 106~126, 2007.
- 박경숙·김영혜·김현숙,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 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2005.
- 박경숙·김영혜,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의 함의」, 『한국인구학』 26(2): 63~90, 2003.
- 박수미,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145~174, 2002.
- _____, 「한국여성의 인적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25(1): 113~143, 2002.
- _____, 「한국여성의 노동이동에 대한 종단적 연구」, 『인구와 사회』2(1): 35~60, 2006.
- 박혜원, 「영아보육시설의 현황과 과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2000.
- 백-게른스하임, 이재원 역, 『내 모든 사랑을 아이에게?』, 서울: 새물결, 1987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보도자료」, 2005.
- _____, 『새로마지플랜 20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자료, 2005.
- 서울신문,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 소비·노후자금 옥죈다」, 서울신문사 10월30일, 2007.
- 송유진, 「한국과 중국 도시 가족에서의 성역할 분담 비교연구: 아버지의

- 자녀 양육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1): 111~136, 2006.
- 송지은·한경혜, 「남성의 부모기로의 전이에 대한 비용-보상 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2(4): 73~83, 1994.
-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2007.
- 신기영·옥선화, 「중년기 취업 여성의 가족 역할과 직업 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8(8): 29~41, 1999.
- 여성가족부, 보육통계, www.mogef.go.kr, 2006.
- 원영희, 「줄어드는 결혼, 늘어나는 이혼」, 『보건복지 포럼』 (5), 2006.
- 유삼현, 「지역별 차별출산력의 분석: 저출산 인과구조의 이해」, 『인구와 사회』 2(2): 53~76, 2006.
- 윤소영,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8, 2005.
- 윤택림, 「생활문화속의 일상성의 의미: 도시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성과 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2(2): 79~117, 1996.
- 은기수,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89~117, 1995.
- _____, 「지역, 교육 및 직업별 차별출산력」, 권태환 외, 『한국 출산력변천의 이해』, 일신사, pp.99~126, 1997.
- 은기수·박수미, 「여성취업이행 경로의 생애과정 시퀀스(sequence) 분석」, 『한국인구학』 25(2): 108~138, 2002.
- 은기수·전광희·윤홍식·김수정, 『외국 저출산 대응정책 효과성 분석 및 우리나라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 2005.
-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윤선·최은영·황나미·서문희·박세경·전광희·김정석·박수미·윤홍식·이성용·이인재,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이삼식·정윤선·김희경·최은영·박세경·조남훈·신인철·도세록·조숙경·강주희, 『2005년도 전국결혼및 출산 동향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이성용,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111~137, 2006.
- 이수진,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 131~156, 2005.
- 이숙현, 「남성의 취업과 가족 상호작용: 대기업 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1): 271~287, 1995.
- 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미, 『저출산의 젠더 분석 및 정책 대안 연구』,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05.
- 이재열, 「여성의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상호연관성이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인구학』 19(1): 5~44, 1996.
- 이현송, 「주관적 이혼사유의 변화-법원자료를 이용하여」, 『가족과 문화』 11(2): 73~97, 1999.
- 일본내각부, 『일본 소자화사회백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 2006.
- 장지연·부가청,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65(11): 149~179, 2003.
- 장지연, 「출산을 전후한 시기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 미국 기혼여성의 경우」, 『한국인구학』 20(2): 5~42, 1997.
- 장혜경 외,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보고서』, 여성가족부, 2003.
- 장혜경, 「저출산과 가족정책」, 『가족법연구』 1(3): 91~106, 2007.
- 전광희, 「출산력 변화의 메카니즘」 권태환 외, 『한국 출산력변천의 이해』, 일신사, pp.57~98, 1997.
- _____, 「출산력」,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pp. 81~113, 2002.

- _____, 『무자녀에서 첫째 자녀로의 이행과정』, 『인구와 사회』 2(1): 1~33, 2006.
- 중앙일보, 『보육비 부모에 직접 지원』, 중앙일보사 6월 11일, 2004.
- 차경욱, 『저출산 가계와 출산계획이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23(2), 2005.
- 차승은, 『결혼 및 부모됨이 신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차승은·한경혜, 『가족역할과 심리사회적 자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성과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81~114, 2006.
- _____, 『남녀의 가족 역할 점유와 건강문제』, 『한국인구학』 29(2): 167~194, 2006.
- 천혜정, 『둘째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9, 2005.
- 최경수, 『출산율 하락 추이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 27(2): 35~59, 2004.
- 통계청, 『동태통계(출생)』 원자료 CD, 1990, 1997, 2000, 2005.
- _____,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원자료 CD, 1990, 2000, 2005.
- _____, 『사회통계조사』, 1998.
- _____, 『사회통계조사』, 2006.
- _____,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 <http://kosis.nso.go.kr/>, 2007.
- _____,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2006.
- 한경혜·강유진·한민아, 『이혼태도와 관련요인』, 『가족과 문화』15(1): 77~96, 2003.
- 한경혜·이정화,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이혼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9): 161~174, 2002.

한경혜, 「중년기 남성의 역할중요도와 일/가족 갈등」, 『가족과 문화』10(2): 93~114, 1998.

한국경제신문, 「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출산·육아 친화경영의 현장 : 푸르니 어린이집」, 한국경제신문 9월 1일자,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 및 원자료 CD., 2003.

_____,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보고』 및 원자료 CD., 2005.

황정미, 「저출산과 한국 모성의 젠더 정치」, 『한국여성학』 21(3): 100~132, 2005.

Amato, P. R. and S. J. Rogers, “Do Attitudes Toward Divorce Affect Marital Re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0(1), 1996, pp.69~86.

Andorka, Rudolf, *Determinant of Fertility in Advanced Countries*. New York, NY: Free Press, 1978.

Atoh, Makoto and Mayuko Akachi, “Low Fertility and Family Policy in Japan: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Supplement to Volume 1.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Japan, 2003.

Atoh, Makoto, V. Kandiah, and S. Ivanov,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Asi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w Fertility Situa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2(1),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Japan, 2004.

Becker, Gary S. and Robert J. Barro, “Altruism and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pp.69~76 in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Cause, Consequences, Policies*, Edited by Kingsley Davis, Mikhail S.

- Bernstam and Rita Ricardo-Campbell, Ann Arbor, Michigan: The Population Council, 1987.
- Becker, Gary S.,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pp.209~231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Edited b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rinceton,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0.
- Bhrolchain, M. N., "Birth Intervals and Women's Economic Activity,"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12, 1985, pp.31~46.
- Bianchi, Suzanne, M., John P. Robinson, and Melissa A. Milkie, *Changing Rhythms of American Family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06.
- Booth, Alan and P. Amato, "Divorce and Psychological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3), 1991, pp.396~407.
- Caldwell, John C., *The Theory of Fertility Decline*,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 Davis, Kingsley and Judith Blake, "Social Structure and Fertility: An Analytical Framework,"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3), 1956, pp.211~235.
- Davis, Kingsley, "The Theory of Change and Response in Modern Demographic History," *Population Index* 29, 1963, pp.345~366.
- _____,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Declin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9(1), 1975, pp.1~31.
- Davis, Kingsley, Mikhail S. Bernstam and Rita Ricardo-Campbell,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Cause, Consequences, Policies*, Ann Arbor, Michigan: The Population Council, 1987.
- Easterlin, Richard A., "Towards a Socioeconomic Theory of Fertility: A Survey of Recent Research on Economic Factors in American Fertility," In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A World Review*. Edited by S. J. Behrman, L. Corsa, Jr.

- and R. Freedman,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9.
- _____, "An Economic Framework for Fertility Analysis," *Studies in Family Planning* 6(3), 1975, pp.54~63.
- Espenshade, T., *Investing in Children*,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4.
- Freedman, Deborah, "The Relation of Economic Status to Fert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53(3), 1963, pp.414~426.
- Fuller-Thomson, Esme and Meredith Minkler, "American Grandparents Providing Extensive Child Care to their Grandchildren: Prevalence and Profile," *The Gerontologist* 41(2), 2006, pp.201~209.
- Gray, Anne, "The Changing Availability of Grandparents as Carers and its Implications for Childcare Policy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34, 2005, pp.557~577.
- Jolivet, Murriel, *Japan: The Childless Society, The Crisis of Motherhood*, London: Routledge, 1997.
- Kim, Doo-Sub, "Working Experience of Married Woman and Fertility in Korea,"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15, 1986, pp.19~30.
- _____, *Socioeconomic Status, Inequal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7.
- _____, "Sociodemographic Determinants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Korea," pp.45~66 in *Fertility Transitions, Family Structure, and Population Policy*, Edited by C. Goldscheider, Brown University Studies in Population and Development,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92.
- _____, "Population Growth and Transition," pp.1~34 in *The Population of Korea*, Edited by Doo-Sub Kim and Cheong-Seok Kim, Daejeon: Korea National

- Statistical Office, 2004.
- _____,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3(1), 2005 pp.2~25.
- Künzler, Jan, Wolfgang Walter, Elisabeth Reichart and Gerd Pfister, *Gender Division of Labor in Unified Germany*, European Network on Policies and the Division of Unpaid and Paid Work, 2003.
- Leibenstein, Harvey, *Economic Backwardness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NY: John Wiley and Sons, 1957.
- Lee, Mei-Lin and Yi-Li Chuang, “Policy Response on Low Fertility in Taiwan,”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7.
- Marks, Nadine, “Flying Solo at Midlife: Gender, Marital Statu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1996, pp.17~33.
- McDoland, Peter,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2000, pp.427~439.
- _____, “Sustaining Fertility through Public Policy: The Range of Options,” *Population (English Edition)* 57(3), 2000, pp.417~446.
- Mincer, Jacob, “Market Prices, Opportunity Costs and Income Effects,” In *Measurement in Economics: Studies in Mathematical Economics and Econometrics in Memory of Yehuda Grunfeld*, Edited by C. Christ,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3.
- Nambodiri, N. Krishnan, “On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Status and Family Size Preferences When Status Differentials in Contraceptive Instrumentalities are Eliminated,” *Population Studies* 24(2), 1970, pp.233~239.
- National Geography, “Guaranteed Leave for Mothers, 2006,” *National Geographical*

Society 7, 2007.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NIPSSR), *Child Related Policies in Japan*, 2003.

Nomagichi, K. M. and M. A. Melissa, "Cost and Rewards of Children: The Effects of Becoming a Parent on Adult's L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 2003, pp.356~374.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5 World Population Data Sheet*, Washington, D.C.: Population Reference Bureau, 2006.

Retherford, Robert D., Naohiro Ogawa, and Rikiya Matsukura, "Late Marriage and Less Marriage in Japa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2001, pp.65~102.

Ryff, Carol,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989, pp.1069~1089.

Ryff, Carol, Y. J. Lee, M. J. Essex, and P. S. Schmutte, "My Children and Me: Midlife Evaluations of Grown Children and of Self," *Psychological Aging*, 9(2), 1994, pp.195~205.

Sleebos, Joelle E.,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working papers, 2003.

Song, Yoo-Jean, "Fatherhood and Childcare: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nese and Korean Famili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Brown University, 2004.

Straughan, Paulin Tay, "From Population Control to Population Growth: A Case Study of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Trends in Singapore,"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7.

- Suzuki, Toru, "Lowest-Low Fertility in Korea and Japan," *Jinko Mondai Kenkyu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59(3), pp.1~16. Tokyo, Japan: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3.
- _____, "Nuptiality and Fertility Declines in Japan," Presented at an international seminar on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Selected Asian Countries,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7.
- Torr, Berna Miller and Susan Short, "Second Birth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ality and Famil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2004, pp.109~130.
- Vandell, Deborah Lowe, Kathleen McCartney, Margaret Tresch Owen, Cathryn Booth, Alison Clarke-Stewart, "Variations in Child Care by Grandparent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2), 2003, pp.375~381.
- Weitzman, Lenore J., *The Divorce Revolution: The Unexpected Social Economic Consequences for Women and Children in America*,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 Willis, Robert J.,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1973, pp.S14~64.
- Wrong, Dennis H., "Trends in Class Fertility in Western Nation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4(2), 1958; pp.216~22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2
협동연구 2007-02-2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 저출산 사회의 결혼·재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

발행일 2007년 12월 일 값 8,000원

저자 김 두 섭 외 (한국인구학회)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ISBN 978-89-8187-430-8 93330
ISBN 978-89-8187-428-5 93330(전6권)